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외교학석사 학위논문

국제비교지수와 규범준수:
국제비교지수는 어떻게 국제규범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는가?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임 항 성

국제비교지수와 규범준수:
국제비교지수는 어떻게 국제규범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는가?

지도교수 박 종 희

이 논문을 외교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임 항 성

임항성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7월

위 원 장 이 정 환 (인)

부위원장 김 용 균 (인)

위 원 박 종 희 (인)

국문초록

지금까지 여러 연구들이 국제비교지수의 메커니즘에 주목했으나 여전히 지수들이 어떻게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특히, 대부분이 국내정치적 과정을 일종의 ‘블랙박스’로 취급함에 따라 일반 대중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본 논문은 설문 실험을 통해 국제비교지수가 어떻게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다. 대중들이 국제비교지수를 해석함에 있어 핵심적 기준이 될 수 있는 네 가지 비교의 준거점에 주목한다. 첫째, 대중들은 자국의 이상적인 모습과의 괴리로 정책적 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거울 효과). 둘째, 대중들은 특정한 한 두 국가만을 비교의 기준점으로 삼아 정책적 심각성을 판단할 수 있다(라이벌 효과). 셋째, 대중들은 자국이 속해있는 비슷한 부류의 소집단을 비교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동료 압력). 넷째, 대중들은 평가 대상이 되는 국가 전체로 비교의 준거점을 넓힐 수 있다(낙오자 효과).

실험 결과 대중들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비교의 기준은 국가 전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전체와 비교하여 상위권을 기록했을 때와 하위권을 기록했을 때 모두 대중들이 정책적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변화하였다. 하지만, 동료 집단과의 비교는 기후변화 이슈에 한정하여 자국이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하였을 때만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켰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자국의 목표나 라이벌 국가를 핵심적인 비교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두 비교의 기준점은 모든 이슈에 걸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비교지수가 가지는 잠재력은 시각적 직관에 있으며, 이는 어떤 세세한 비교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일으킨다. 둘째, 그럼에도 국제비교지수는 이미 어느 정도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 국가의 대중들을 자극하거나, 전반적인 준수 수준이 낮은 규범에 대해 국내적 압력을 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셋째, 대중들 또한 국제비교지수에 의해서 인식이 바뀔 수 있는 ‘관객’이며, 이는 실천적 측면에서 GPI를 발표하는 기관들에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준다.

주요어 : 국제비교지수, 국제 규범, 규범 준수, 위신, 지위, 비교의 준거점
학 번 : 2021-25267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국제비교지수의 이론적 고찰: 사회적 압력, 위신 과 지위, 그리고 여론	8
제 3 장 비교의 준거점과 국제비교지수의 효과	23
제 4 장 국제비교지수와 대중 인식 변화에 대한 실험 연 구	33
제 5 장 결론 및 함의	53
참고문헌	60
부록	76
Abstract	109

표 목 차

[표 부록-1]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제시문 (기후변화 이슈 제시문 첫 문단)	64
[표 부록-2] 국제비교지수 발표 기관 통제를 위한 제시문 (기후변화 이슈 제시문 두 번째 문단)	65
[표 부록-3]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제시문 (장애 인권 이슈 제시문 첫 문단)	66
[표 부록-4] 국제비교지수 발표 기관 통제를 위한 제시문 (장애 인권 이슈 제시문 두 번째 문단)	67
[표 부록-5] 표본의 기술 통계량 (성별, 연령대, 지역)	68
[표 부록-6] 표본의 기술 통계량 (교육 수준, 소득, 직업)	69
[표 부록-7] 표본의 기술 통계량 (정치적 성향, 국제 규범에 대한 태도)	70
[표 부록-8] 기후변화 이슈를 활용한 실험에서 각 통제군과 처치군에 할당된 표본 수와 비율	71
[표 부록-9] 장애 인권 이슈를 활용한 실험에서 각 통제군과 처치군에 할당된 표본 수와 비율	72
[표 부록-10] 기후변화 이슈를 활용한 실험에서의 통제군과 처치군의 균형 표(balance table) (성별)	73
[표 부록-11] 기후변화 이슈를 활용한 실험에서의 통제군과 처치군의 균형 표(balance table) (연령대)	74
[표 부록-12] 기후변화 이슈를 활용한 실험에서 통제군과 처치군에 대한 지역별 할당	75
[표 부록-13] 장애 인권 이슈를 활용한 실험에서의 통제군과 처치군의 균형 표(balance table) (성별)	76
[표 부록-14] 장애 인권 이슈를 활용한 실험에서의 통제군과 처치군의 균형 표(balance table) (연령대)	77
[표 부록-15] 장애 인권 이슈를 활용한 실험에서 통제군과 처치군에 대	

한 지역별 할당	78
[표 부록-16] 기후변화 이슈를 이용한 실험에서의 주요 실험적 조건에 할당된 발표 기관 처치의 비율	79
[표 부록-17] 장애 인권 이슈를 이용한 실험에서의 주요 실험적 조건에 할당된 발표 기관 처치의 비율	80
[표 부록-18] 통제군과 처치군의 응답 분포: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 은 얼마나 심각한가?	81
[표 부록-19] 통제군과 처치군의 응답 분포: 한국의 장애 인권 정책 수준 은 얼마나 심각한가?	82

그림 목 차

[그림 2-1] 국제비교지수가 국가의 정책을 변화시키는 메커니즘	
16	
[그림 3-1] 비교의 종류에 따른 처치 변수	30
[그림 4-1]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 모델 : 한국이 기록한 국제비교지수가 생각보다 높은가, 혹은 낮은가?	36
[그림 4-2]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 모델 :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38
[그림 4-3]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 모델: 한국의 장애 인권 정책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39
[그림 4-4]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 모델: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한국이 더 높은 순위를 기록할 때)	41
[그림 4-5] 기타 변수에 대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델: 한국의 기후변 화 대응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44
[그림 4-6] 기타 변수에 대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델: 한국의 장애 인권 정책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46
[그림 4-7] 성별과 처치 변수의 상호작용: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국가 전체가 비교의 준거점일 때)	47
[그림 4-8] 국제 규범에 대한 태도와 처치 변수의 상호작용: 국가 전체가 비교의 준거점일 때	49
[그림 4-9]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델: 기사에서 제시한 기후변화정책지 수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	50
[그림 부록-1] 낙오자 효과의 한계 효과: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83
[그림 부록-2] 낙오자 효과의 한계 효과: 한국의 장애 인권 정책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84
[그림 부록-3] 한국이 상위권을 기록했을 때의 한계 효과: 한국의 기후 변화 대응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85

[그림 부록-4] 한국이 동료집단의 국가(OECD)보다 더 좋은 성적일 때의 한계 효과: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86
[그림 부록-5]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 모델: 한국의 장애 인권 정책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한국이 더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87
[그림 부록-6] 한국이 상위권을 기록했을 때의 한계 효과: 한국의 장애 인권 정책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88
[그림 부록-7] 연령 변수의 한계 효과: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101
[그림 부록-8] 소득 수준의 한계 효과: 한국의 장애 인권 정책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102
[그림 부록-9] 정치적 성향의 한계 효과: 한국의 장애 인권 정책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103
[그림 부록-10] 성별의 한계 효과: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104
[그림 부록-11] 성별의 한계 효과: 한국의 장애 인권 정책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105
[그림 부록-12] 규범에 대한 태도의 한계 효과: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106
[그림 부록-13] 규범에 대한 태도의 한계 효과: 한국의 장애 인권 정책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107
[그림 부록-14]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델: 기사에서 제시한 장애 인권 지수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	108

제 1 장 서 론

국가가 언제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을 이행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국가로 하여금 국제적 기준에 따르도록 유도할 수 있는지는 정책 영역의 실천적 문제인 동시에 국제정치학의 학문적 난제이다. 국제정치학에서 일명 ‘준수의 문제(compliance problem)’는 수많은 연구자들의 이목을 끄는 고전적 테마로 자리잡아왔다. 이들은 주로 국제 규범이 고도화되면서 어떻게 더 많은 국가들의, 더 높은 수준의 준수가 유도되는지 주목했다. 예컨대 자유주의 이론가들은 “타국의 행동에 대한 기대의 수렴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불확실성을 감소시킬(facilitate the convergence of expectations and reduce uncertainty about other states’ future behavior)” 수 있는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와 법제화(legalization)를 강조하였고 구성주의 이론가들은 간주관적(intersubjective)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국가들의 공동체 내에서 일원이 되는 과정인 내재화(internalization), 혹은 사회화(socialization)를 내세웠다(Simmons 1998, 81).¹⁾ 이밖에 국제 규범이 도입된 이후 입법 기관에 의해 발의되며 국내 정치 과정 속으로 스며들게 되는 권능화(權能化)나 규범의 특정한 측면이 강조되는 가운데 규범적 담론이 성문화되는 의제화(framing)가 논의되기도 하였다(남궁곤, 조동준, 2010; 조동준, 2011).

위와 같은 활발한 이론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학에서 국제 규범의 준수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아무리 규범이 고도화되더라도 국제정치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인 무정부상태(anarchy)를 극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즉, 무정부적 국제 체제 내에서 규칙을 강제할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이거니와 복잡하고도 지난한 규범의 발전을 거치더라도 각국의 실천은 보장되지 않는다. 많은 연구가 각국의 준

1) 국제 제도와 제도화에 대해서는 커헤인(Keohane, 2015)과 커헤인(Keohane, 2020)을 참고. 법제화에 대해서는 골드스타인 외(Goldstein et al, 2000)와 애벗 외(Abbott et al, 2003)을 참고. 내재화에 대해서는 핀모어와 시킨크(Finnemore and Sikkink, 1998) 참고. 사회화에 대해서는 존스톤(Johnston, 2001)과 체켈(Checkel, 2005)를 참고.

수를 유도하기 위한 궁극적인 방법으로 물질적 강제를 제시한다는 점은 강제적 권위체의 부재로 인해 만들어지는 벽이 극복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방증한다(Goldsmith and Posner, 2005; Koliev et al., 2020).

규범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한 상태에서 어떻게 국가의 행동 변화를 유도해낼 수 있을까? 최근 국제정치학에서 주목받는 정책적 수단 중 하나는 바로 국제비교지수다.²⁾ 국제비교지수는 “국가의 정책, 특성, 그리고 성과에 점수나 등수를 매기거나 이를 분류하는 공적인 평가(public assessments that rate, rank, and categorize state policies, qualities, and performance)”로 정의된다(Kelley and Simmons 2019, 491). 즉, 이는 각국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혹은 잘못하고 있는지 평가하여 국가들 간에 비교가 가능하도록 수치화하거나 분류한 지수(index)를 의미한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각국의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비교 평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지수, 지구적 캠페인(Campaign)인 자금 지원을 공개하라(PWYF: Publish What You Fund)가 각국의 개발원조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조사하여 발표한 원조 투명성 지수(AT Index: Aid Transparency Index) 등 해마다 다양한 종류의 지수들이 나오고 있으며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약 130개가 넘는 지수들이 정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에 의해 발표되고 있다(Kelley and Simmons, 2019).

국제비교지수는 정말로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여러 경험 연구들이 각국의 상대적 위치가 담긴 지수를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국가의 규범 준수 수준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 외 2인(Doshi et al., 2019)에 의하면 세계은행(World Bank)의 기업환경평가(EDB Index: Ease of Doing Business Index)를 접한

2) 국제비교지수는 영어로 ‘Global Performance Indicators(GPI)’ 인데 아직까지 완전히 합의된 번역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비교의 원리를 지닌 지수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국제비교지수로 용어를 통일한다.

국가의 정치 엘리트들은 국내 정치적 행위자나 외부 투자자의 동요를 우려하여 자국의 순위를 높이기 위해 일련의 정책적 개혁을 실시한다. 또한, 모스(Morse, 2019)에 따르면 돈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 행동 태스크 포스(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규범 준수 수준이 낮은 국가들을 분류해 국제비교지수로 발표할 경우 투자자들이나 은행들이 해당 국가로의 자금 유입을 제한하기도 한다. 개발 원조 분야에서는 AT 지수가 정치 엘리트에게 직접적으로 사회적 압력을 만들어내어 정책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이 호니그와 위버(Honig and Weaver, 2019)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젠더 정책 측면에서는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의 젠더 평가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 국가들의 젠더 정책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친 사실이 히드 스카겔린드(Hede Skagerlind, 2021)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결국, 국제비교지수는 비교의 압력(pressure of comparison)으로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수 권력(index power)을 지닌 도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

그렇다면 국제비교지수는 어떻게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일까? 기존의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하나는 지식과 규범의 전파다. 이는 국제비교지수가 바람직한 규범 준수에 필요한 요소와 조건이 무엇인지 학습하게 하고 규범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⁴⁾ 예컨대 데이비스 외 2인(Davis et al., 2015)은 지수가 발휘하는 조용한(quiet) 힘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 핵심이 되는 프레임워크가 지식과 권력의 연계라는 점을 강조한다. 프라다-우리베(Prada-Uribe, 2012)는 개발 관련 지수들이 과학적으로 객관적인 수치로서 지식 효과(knowledge effect)와 거버넌스 효과(governance effect)를 발휘하면서도 특정한 개발 이론에서 바라보는 패권적 세계관을 담지한

3) 켈리와 시몬스(Kelly and Simmons 2020)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를 “국제 비교지수 권력(국제비교지수 Power)” 으로 부르기도 했다.

4) 참고로, 이와 같은 지식과 규범의 전파는 주로 지수가 발휘하는 힘을 발휘하는 일부 법학자들이나 각종 지수가 가진 암묵적인 이념적, 규범적 편향성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국제정치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채 일정한 규범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 플레위(Plehwe, 2021), 그리고 루메리리와 타운스(Rumelili and Towns, 2021)는 국제비교지수가 가진 이념적 지향에 더욱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지수들이 자유주의적, 혹은 신자유주의적 이념 하에서 바람직한 규범을 전파하여 규범적인 계층화(stratification)를 심화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의 정책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선행연구에서 제기하는 두 번째 원리는 국제 사회로부터 받는 사회적 압력이다. 예를 들어, 켈리와 시몬스(Kelley and Simmons, 2019)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 73권 3호 특별판에서 국제비교지수가 비교의 압력(pressure of comparison)을 만들어낸다고 강조한다. 이는 국제비교지수가 겨냥하는 타겟(target) 국가의 행위자들, 예컨대 정치 엘리트나 이익 집단으로 하여금 인식적으로 자국에 대한 평가를 의식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국이 받을 수 있는 압력을 우려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국제 사회의 여러 행위자들, 예컨대 국가, 투자자, 국제기구에 명료한 비교의 형태로 타겟 국가의 정책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하였던 도시 외 2인(Doshi et al., 2019)의 연구나 호니그와 위버(Honig and Weaver, 2019)의 연구 등이 모두 국제비교지수가 만들어 내는 국제 사회의 사회적 압력에 주목한 실증적 연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압력의 메커니즘은 국제비교지수 이전에 여러 연구들이 주목해왔던 공개해서 망신주기(naming and shaming) 전략⁵⁾의 메커니즘과 맞닿아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국제정치학에서 전통적으로 논의해왔던 위신(reputation)이나 지위(status)의 개념과 맞닿아있다.⁶⁾ 이러한 의

5) 공개해서 망신주기 전략은 넓은 의미에서 공적인 폭로와 비난으로 정의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행위자의 바람직하지 않는 행위나 상황을 목표로 하여 사회적으로 맹렬한 비판을 동원해내는 일련의 전략을 의미한다. 정책 영역에서 공개해서 망신주기 전략은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에 의해 폭넓게 활용되며 공식적인 비난 성명, 결의, 블랙리스트(blacklists) 등을 아우른다(Friman, 2015; Ilgit and Prakash, 2019).

6) 국제정치학에서 위신은 “타인이 특정 행위자의 과거 행동을 바탕으로 수립한 지속적인 성격이나 행위의 경향에 대해 믿음(Beliefs about persistent characteristics or behavioral tendencies of an actor, based on the past

미에서 국제 사회의 사회적 압력은 국제정치학적으로 보다 더 주류적 입장에서 제기되는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국제비교지수의 효과와 그 원리에 주목한 연구가 상당히 누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비교지수의 메커니즘은 다소 블랙박스(black box)에 가깝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비교지수의 대략적인 메커니즘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나 언제, 어떻게 국제비교지수가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국제비교지수가 지식과 규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한다면 국가들이 왜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국의 정책을 변화시켜 규범에 순응하는지 여전히 미지수이며, 국제 사회의 사회적 압력이 핵심적인 원리라면 어떻게 국제비교지수가 그러한 압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체계적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몇몇 연구에서 국제비교지수가 큰 정책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또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국제비교지수가 어떠한 조건 하에서 국가의 규범 준수를 성공적으로 유도하는지, 반대로 언제 국제비교지수를 활용한 정책적 전략이 실패하게 되는지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Van den Eynde et al., 2003; Lee and Matanoc, 2000).

특히, 정책 형성 과정에서 국내적 압력을 일으킬 수 있는 일반 대중은 선행 연구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정책 형성에서 열쇠를 지고 있는 것은 일부 정치 엘리트와 관료들이기에 일반 대중의 선호가 항상 정책적 변화로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Monroe, 1998). 국제비교지수가 겨냥하고 있는 핵심적 행위자도 정책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 엘리트들과 관료들, 그리고 규범 준수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국내의 이익 집단들이다(Kelley and Simmons, 2019). 그러나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정책적 요구가 높은 사안들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투표장에서의 ‘처

actions of the actor)” 을 의미한다(Dafoe et al., 2014). 그리고 지위는 “비교 집단에서의 위치(position vis-à-vis a comparison group)” 를 의미하며 이는 “개인적, 사회적 역할의 결과(attribute of an individual or social role)” 로 나타난다. 위신, 지위와 관련된 국제정치학에서의 연구와 국제비교지수의 메커니즘은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후술한다(Dafoe et al., 2014).

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정책 결정자들은 일반 대중의 요구가 높은 사안들을 마냥 무시할 수도 없다. 때문에 대중의 여론은 정책 결정자들이 다뤄야 할 사안의 중요성(salience)을 높이는 방식으로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urstein, 2003). 실제로 국가의 국제 규범 준수 수준이 낮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국내 여론을 설득해 대중들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이전의 연구들을 고려한다면 일반 대중들 또한 국제비교지수의 의도치 않은 청중(audience)이 될 가능성이 있다(Simmons, 2009; Murdie and Bhasin, 2011; Krain, 2012).

이와 함께 국제비교지수의 메커니즘을 보이는 미시적 수준의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⁷⁾ 국제비교지수는 정보 정치(information politics)를 통하여 국가의 규범 준수를 유도한다. 즉, 국제비교지수는 규범에 준수하게 만들어야 하는 목표 대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리적 압력을 가하기보다 정치적 정보를 제공하여 간접적으로 준수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런데 정치적 정보는 일종의 메시지(message)임에 따라 발화자의 의도에 따라 수용자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드물며 오히려 이는 일종의 해석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국제비교지수를 접한 후 이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길 것인지, 혹은 어떤 의미를 도출할 것인지는 개인들의 인지적 수준에서 결정될 여지가 다분하다.⁸⁾ 결국, 이러한 정보 정치적 맥락은 국제비교지수를 연구함에 있어 미시적 수준으로 눈을 돌릴 필요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국제비교지수가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국내정치적 메커니즘에 있어 핵심이 될 수 있는 여론의 미시적 동학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본 논문은 국제비교지수가 국가 정책과 규범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변화시킨다면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알아본다. 국제비교지수의 근본적인 원리인

7) 경험적 분석을 통해 국제비교지수의 메커니즘에 대한 미시적 증거를 찾아내는 연구가 많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Davis 외 2인(Davis et al., 2012)이 국제비교지수의 이슈에 따른 정책 처리 방식 선호 변화를 추적한 바 있다.

8) 국제비교지수가 정치적 정보의 하나로서 어떠한 기준 하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는 비교의 준거점 개념을 참고하여 3장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한다.

비교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종류의 비교가 국가 정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국제비교지수의 메커니즘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국제정치학에서 전통적으로 논의해왔던 위신과 지위의 개념, 그리고 공개해서 망신주기 전략에 대한 연구들을 포괄적으로 참고하며 국제비교지수의 메커니즘을 고찰하고 본 논문이 주목하는 정책 변화의 국내 정치적 과정, 그리고 일반 대중의 인식과 여론에 대해서 논한다. 3장에서는 비교의 종류를 중심으로 국제비교지수가 발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설문 실험의 설계에 대해서 논하고 설문 실험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에 대해서 논한다.

제 2 장 국제비교지수의 이론적 고찰: 사회적 압력, 위신과 지위, 그리고 여론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헝가리에서는 교육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다. 당시 헝가리에서는 2010년부터 피데즈(Fidesz) 당과 오르반 빅토르 미하이(Orbán Viktor Mihály) 총리의 주도로 지나치게 자유주의적인 교육 제도가 제대로 된 교육을 가로막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미명 하에 대대적으로 교육의 중앙집권화가 실시되고 있었다(Than 13 Feb. 2016). 교회가 운영하는 일부 사립학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립학교들이 상위기관인 클레벨스베르크 센터(KILK: Klebelsberg Központ)의 감독 하에 놓이게 되었고 국가 커리큘럼(curriculum)이 대대적으로 도입되면서 교사들의 처우 수준이나 재량권 또한 크게 하락하였다. 시위대가 제시한 요구사항의 핵심 골자는 교사들의 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여 이러한 교육 정책의 중앙집권화를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교육 정책 개혁을 요구하는 헝가리의 시위에 불을 지핀 것이 OECD의 PISA 지수였다는 것이다. OECD는 3년마다 각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조사하여 이를 PISA 지수로 발표하는데 2016년에 헝가리는 15년 만에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핵심 교과목인 독해, 수학, 과학 등에서 뚜렷한 하락세를 기록하였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헝가리가 이전까지 OECD 평균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을 기록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분명 충격적인 결과였으며 오르반 정권 하에서 무너진 교육 제도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대의 목소리에 힘을 더하기에 충분했다.⁹⁾

9) PISA 지수 결과는 2016년 대대적인 시위 이후에도 헝가리의 교육 정책 논의에서 주요한 의제로 작동하였다. 예컨대, 2019년에 다시 발표된 PISA 지수에서는 이전의 정책 변화에 힘입어 헝가리의 점수가 상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헝가리의 점수와 순위가 OECD의 평균을 밑돌자 사람들의 이목이 다시 한 번 집중되었다. 급기야 교육부 장관이 직접 매스컴의 인터뷰를 통해 헝가리의 낮은 점수에 대하여 해명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Kosztis

사실 순위로 국가들을 비교한다는 발상이 자리 잡기도 전에 국제 정치학에서는 언사와 정보로 국가를 비난하거나 수치스럽게 하는 것만으로 국가의 행동을 바꿀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예를 들어, 고전적인 국제정치 이론가들, 예컨대 이상주의자(Idealists)들과 영국 사회 학파(English school) 학자들은 수치심을 동원(mobilization)하는 것이 아예 무의미하지는 않으나 그다지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고 역설한 바 있다(Zimmern, 1936; Bull, 2002). 현실주의자들은 더욱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애초에 그들에게 국제 규범이나 규칙은 “세력 균형으로만 효과를 발휘할(only made effective through the balance of power)” 수 있는 “이익의 부수적 현상(epiphenomena of interests)”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실주의자의 렌즈를 통해서 본다면 간접적인 언어나 정보는 레토릭(rhetoric)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Diehl et al., 1996; Simmons, 1998; Mearsheimer, 2017).

그러나 PISA 지수 발표 결과가 교육 정책 개혁의 목소리에 불을 지핀 헝가리의 사례는 국제비교지수가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며 국내 정치적 행위자를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가 특히나 고무적인 이유는 가시적인 보상이나 처벌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행위자들을 동요시키는 데에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준수의 문제의 핵심은 주권과 규범의 대립 관계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각국이 “다른 국가에 행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지 않는 개별적인 권위적 행위자(authoritative actors who do not themselves possess authority over one another)”임에 따라 규범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Lake, 2003). 이에 따라, 국제정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상이나 페널티(penalty)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은 이상 규범 준수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점이 논의되어왔다. 예컨대 여러 연구에서 국제적인 규칙을 준수하게 만드는 데에 있어서 물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발동될 수 있다는 명확한, 신뢰 가능한 신호가 필요하다고 논의된 바가 있다(Goldsmith and Posner, 2005; Simmons, 2012; Thompson,

2013). 심지어 합리적 계산을 강조하기보다 사회적으로 구성된 행동 논리를 강조하는 구성주의자들 또한 정치적 페널티와 보상을 낳을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나 물질적 레버리지(leverage)를 강조하였다(Keck and Sikkink, 1998). 하지만 헝가리의 사례에서 국내 행위자들을 자극했던 것은 외부로부터의 명시적인 보상이나 처벌이 아니었다. 헝가리의 교육 정책이 가진 심각성, 특히 핵심 영역에서 주요 OECD 국가들이 내고 있는 정책적 성적보다 훨씬 뒤떨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수치적 정보만으로 제공되었고, 이와 같은 단순한 정보에 노출된 국내 여러 행위자들이 동요한 것이었다.

단순한 수치적 정보에 불과한 국제비교지수가 어떻게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일까? 사회과학의 제(諸) 분야로 눈을 돌려본다면 순위 데이터로 대상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발상은 그다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순위가 대상들 간의 정밀한 시각적 위계를 만들어냄에 따라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은 여러 분과 학문에서 이미 주목받은 바 있다.¹⁰⁾ 예컨대 에른(Erne, 2007)은 사회과학인용지수(SSCI: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를 기준으로 하는 유럽 내 정치학과의 순위가 신뢰성이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연구자들이나 서지정보학자들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 지나치게 빈번하게 활용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에스퍼랜드와 사우더(Espeland and Sauder, 2007)는 한 발 더 들어가 랭킹이 어떻게 행위자들의 반응성(reactivity)를 이끌어내는지 살펴보고도 했다. 일반 상업지의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의 순위가 주목한 그들은 순위 데이터가 질적 정보에 대응되는 수량화를 가능케 하고 자기 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을 만들어냄에 따라 각 대학원의 행동을 변화시키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순위 데이터가 가진 영향력에 주목했던 문헌들은 국제비교지수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보기 힘들다. 다른 분야와 달리 국제정치학에서 순위, 즉 국제비교지수에 관심을 두게

10) 순위에 대한 연구의 흐름을 정리한 논문으로는 링젤 외 4인(Ringel et al., 2021)의 연구와 브란코비치(Brankovic, 2022) 참고.

된 것을 비교적 최근의 일인데 이는 1990년대 후반에야 국가 간의 성과 비교가 지수의 형태로 체계화되는 등 국제비교지수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늦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비교지수가 목표로 삼는 행위자인 국가 자체가 여타의 행위자들과 차별적 성격을 지닌다. 국가는 기업, 기관, 개인 등과 달리 랭킹에 의거하여 보상과 처벌을 가할 수 있는 외부적 행위자가 뚜렷하지 않다. 또한, 명시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이나 규칙을 따르고 있지 않는, 무정부 상태에서 최상의 주권을 지닌 독립적 행위자인 국가가 어떠한 까닭에서 외부의 순위를 의식하게 되는지 보다 정교한 설명이 필요하다.

국제비교지수를 발표하는 기관은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특정 이슈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성을 기준으로 삼고 평가를 수행한다 (Kelly and Simmons, 2019). 즉, 지수 발표 기관은 어떤 이슈를 선택하여 지수를 만들지, 어떤 규범을 기준으로 삼을지, 그리고 어떤 요건들이 이상적으로 충족되어야 좋은 준수라고 말해야 하는지 일정한 방향성을 세우고 국제비교지수를 만든다. 특히, 질적 성격을 지닌 정책적 성과를 명확한 수치로 표현해야하는 만큼 국제비교지수를 발표하는 기관은 바람직한 규범 준수를 판별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을 나름대로 정의 내려야 하며 해당 기준이 규범 준수의 핵심 중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국제비교지수는 발표 기관이 이슈와 규범을 프레이밍(framing)한 결과로 탄생한다.

특정 기관이 수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프레이밍한 정보가 왜 국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국제비교지수의 메커니즘에 주목하는 여러 연구에서 그 이유로 국제 사회의 사회적 압력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압력은 특정 공간이나 상황에서 타인 일반의 시선에 의식하여 규범에 순응하도록 부추기는 힘을 의미한다(장윤재 외, 2012). 즉, 사회적 압력은 타인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힘이다. 국제비교지수는 국제적 규모로 사회적 압력을 일으켜 국가로 하여금 타 행위자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든다. 지수를 접한 국가들은 자국의 상대적 위치를 알게 되는데, 타국보다 뒤쳐지는 순위가 대내외적으로 알려질 경우 공개적인 망신의

대상이 되어 상당한 자극을 받게 된다.¹¹⁾

국제비교지수의 사회적 압력 뒤에는 위신의 국제정치가 존재한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 위신은 “타인이 특정 행위자의 과거 행동을 바탕으로 수립한 지속적인 성격이나 행위의 경향에 대해 믿음(beliefs about persistent characteristics or behavioral tendencies of an actor, based on the past actions of the actor)” 을 의미한다.¹²⁾ 비록 위신 그 자체로 물리적 보상이나 처벌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나 국가들은 최대한 좋은 위신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위신은 국가의 능력이나 이익과 결합되어 국가의 행동에 대한 신뢰도(credibility)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 과정에서 위신은 타국과의 협력이나 정확한 신호의 전달에 있어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Krebs, 1990; Jervis et al., 2021). 여기에 더해, 좋은 위신은 국제 질서 내에서 통용되는 담론을 이끌 권력을 가져다주기도 한다(Hopf, 1998). 반대로 국가의 위신이 하락할 경우 그 자체로 정치 엘리트에게 수치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제반 영역으로 부정적 낙수효과가 나타나거나 국제 사회에서의 처벌이 뒤따르기도 한다(Simmons, 2000; Farber, 2002; 박동준, 2021).

국제정치학에서는 분야를 막론하고 여러 연구에서 위와 같은 위신의 동학에 주목해왔다. 예컨대 안보 연구에서 위신은 상대 국가에 대해 더 신뢰 가능한 위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로 간주되며, 동맹 관계

11) 이러한 ‘부끄러움’의 자극만으로 국가에 상당한 자극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은 공개하여 망신주기 전략에 주목했던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Hafner-Burton, 2008; Murdie and Peksen, 2014b; Koliev and Lebovic, 2022).

12) 국제정치학에서 위신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된다. 예컨대, 머서(Mercer 1996, 6)는 “국가의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데에 사용되는, 국가의 이미지와 성격에 대한 집합적 믿음(Collective judgments of a foreign country’s image and character that are then used to predict or explain its future behavior)” 로 정의내린 바 있다. 크레센지와 도나휴(Crescenzi and Donahue, 2017)는 위신의 개념을 더욱 폭넓게 바라보며 “협력이나 갈등과 연관된 행동적, 의도적 성격에 대한 국가나 그 지도자의 정보(Information adhering to a state of its leaders concerning behavioral or intentional characteristics relating to cooperation or conflict)” 로 정의한다. 그러나 현재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다포 외 2인(Dafoe et al., 2014)의 정의로 본 논문에서 이들의 정의를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내에서 신뢰 가능한 파트너(partner)라는 위신이 쌓일 경우 향후의 분쟁에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¹³⁾ 특히, 위신은 규범의 준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규범을 준수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규범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적 목표를 위해 타국과 협력하는 과정이다. 케헤인(Keohane 2005, 75)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들은 배신(defection)으로 인한 “단기적 이득(short-run gains)” 보다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서로에 대한 처벌(mutual punishment that will ensue over the long run)” 에 의해 더 큰 비용이 발생할 때 협력에 응한다. 그런데 배신은 협력 게임(cooperative games)에서 그 자체로 단기적 손실이나 처벌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게임 바깥의 행위자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Downs and Jones 2002, 99). 게임 바깥의 행위자들은 배신을 바라보며 대상이 미래에 보일 행동이 예측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이처럼 신뢰가 불가능한 행위자로서의 위신이 누적될 경우 향후 국가가 하는 공약(commitments)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는 협력을 저해한다. 결국, 특정한 규범에서 배신하기로 결정한 행위자는 자국의 낮아지는 위신으로 인해 전략적으로 더욱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신은 국가 행위자에 대한 믿음이나 예상임에 따라 구체적인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 특히, 규범 준수에 있어서 위신은 실제로 해당 국가가 배신을 하고 있는지, 그랬다면 얼마나 준수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하여 타 행위자들이 관찰 가능한 몇몇 행동을 가지고 어렵잡아 유추해 낸 것이다. 이에 따라 규범에서 이탈하더라도 충분한 스포트라이트(spotlight)를 받지 못하거나 얼마나 준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지 분명하지가 않다면 준수의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규범 이탈자로서의 나쁜 위신을 피할 여지가 크다. 결국, 국가들은 규범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정보의 격차(information gap)가 가져다주는 효과를 충분히 누려 위신이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국제비교지수는 규범이 적용될 수 있는

13) 위협에 대해 위신이 발휘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셸링(Schelling, 1966)과 사르토리(Sartori, 2005) 참고. 동맹 관계에서 위신이 발휘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모로우(Morrow, 2000)나 밀러(Miller, 2012) 참고.

모든 국가에 대해 빠짐없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함에 따라 이와 같은 격차를 채우는 것이 가능하다.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는 낮은 수치를 부여해 ‘나쁜 국가’, 혹은 ‘무능한 국가’로 낙인찍을 수 있으며 규범을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는 국가는 높은 수치를 부여해 ‘규범 선진국’이라는 칭호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행위자들은 국가의 협력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 이와 같은 낙인이나 칭호를 활용할 수 있다. 결국, 국제비교지수가 사회적 압력을 발생시켜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전(全)방위적으로 조사된,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위신이기 때문이다.

국제비교지수의 사회적 압력을 견인하는 또 다른 메커니즘으로 지위의 국제정치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위는 “비교집단에서의 위치(position vis-à-vis a comparison group)”를 의미하며 이는 “개인적, 사회적 역할의 결과(attribute of an individual or social role)”로 나타난다(Dafoe et al. 2014, 376).¹⁴⁾ 행위자들이 자신의 상대적인 지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은 사회과학 제 분야에서 논의된 바 있다. 예컨대, 경제학에서는 높은 지위가 협상 게임(bargaining game)에서 유리한 고점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희소한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큰 인센티브(incentive)가 될 수 있다고 논한 바 있다(Harsanyi, 1966). 사회학에서는 일찍이 베버(Weber, 1968)에 의해서 지위가 가져다주는 평판의 효과가 논의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지위가 타 행위자와 차별되는 장점을 보여줌에 따라 미시적으로 돈이나 권력만큼이나 중요시 여겨진다는 점이 제시된 바 있다.

국제정치학에서 또한 여러 연구들이 국가의 상대적 위치에 주목한

14) 국제정치학에서 지위와 위신은 크게 구분되지 않은 채 사용되어왔으나 최근 들어 두 개념의 사용이 구별되는 경향이 나타난다(Deng 2008, 21). 지위 또한 위신만큼이나 여러 개념 정의가 존재한다. 일찍이 베버(Weber, 1968)는 사회적 계층에 대한 물질적 기반과는 구분되는, “사회적 평판에 효과를 가지는 권리(Effective claim to social esteem)”으로 정의내린 바 있다. 렌손(Renshon, 2019)의 경우 지위가 “위계 내에서의 행위자의 순위(Actor’s rank in a hierarchy)”로서 “순수하게 위치적 의미(Purely positional sense)”를 가진다고 정의내린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문헌에서 가장 자주 활용되는 다포 외 2인(Dafoe et al., 2014)의 정의를 채택한다.

바 있다. 국제 체제의 구조적 위계나 그 속에서의 국가들의 행동을 논한 여러 이론들이 이러한 흐름에 해당한다.¹⁵⁾ 이와 더불어 많은 연구들이 국가 내 행위자들의 지위 추구 경향에 주목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치 엘리트나 관료들이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해 국가의 지위를 높이려고 하며 심지어 국가의 지위 그 자체를 위해 행동하는 경향 또한 보인다고 역설하였다(Rosen, 2005; Rege, 2008; Wolhforth, 2008).

국제비교지수는 어떻게 국가로 하여금 자국의 지위를 의식하게 만들까? 국제비교지수는 국가들에 비교의 압력을 가한다. 규범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아 국제적 기준에 걸맞은 정책을 펴지 못하는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받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낮은 등수로 이어진다. 등수가 낮은 국가들은 더 높은 등수를 받은 국가들과 명확히 비교되는데 이는 규범 준수 측면에서 국가의 상대적 위치, 더 정확히는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지위를 부여한다. 이렇게 특정 규범 영역에서 부여된 낮은 지위는 자국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려는 국가의 노력을 상쇄한다. 또한, 국제비교지수는 수치를 통해 해당 국가의 지위가 정확히 얼마나 낮은지, 특히 국가가 이상적으로 달성하고자하는 상대적 지위와 얼마나 거리가 먼지 보여준다. 때문에 국제비교지수는 규범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막연한 비난적 언사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행위자들을 설득할 수 있다.¹⁶⁾

지금까지 언급한 국제비교지수의 메커니즘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국제비교지수를 발표하는 기관은 특정 이슈에 대하여 바람직한 기준을 프레이밍한다. 이러한 프레이밍으로 도출된 순위 정보가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국제 사회의 사회적 압력 때문이다. 국제 사회의 사회적 압력은 국가 내 행위자들로 하여금 자국의 위신과 지위를 의식하게 만들며 궁극적으로 이는 규범에 걸맞은 정책 변화로까지 이어진다.

15) 국제정치학에서 위계를 논한 연구들로레이크(Lake, 2011)나 캉(Kang, 2005)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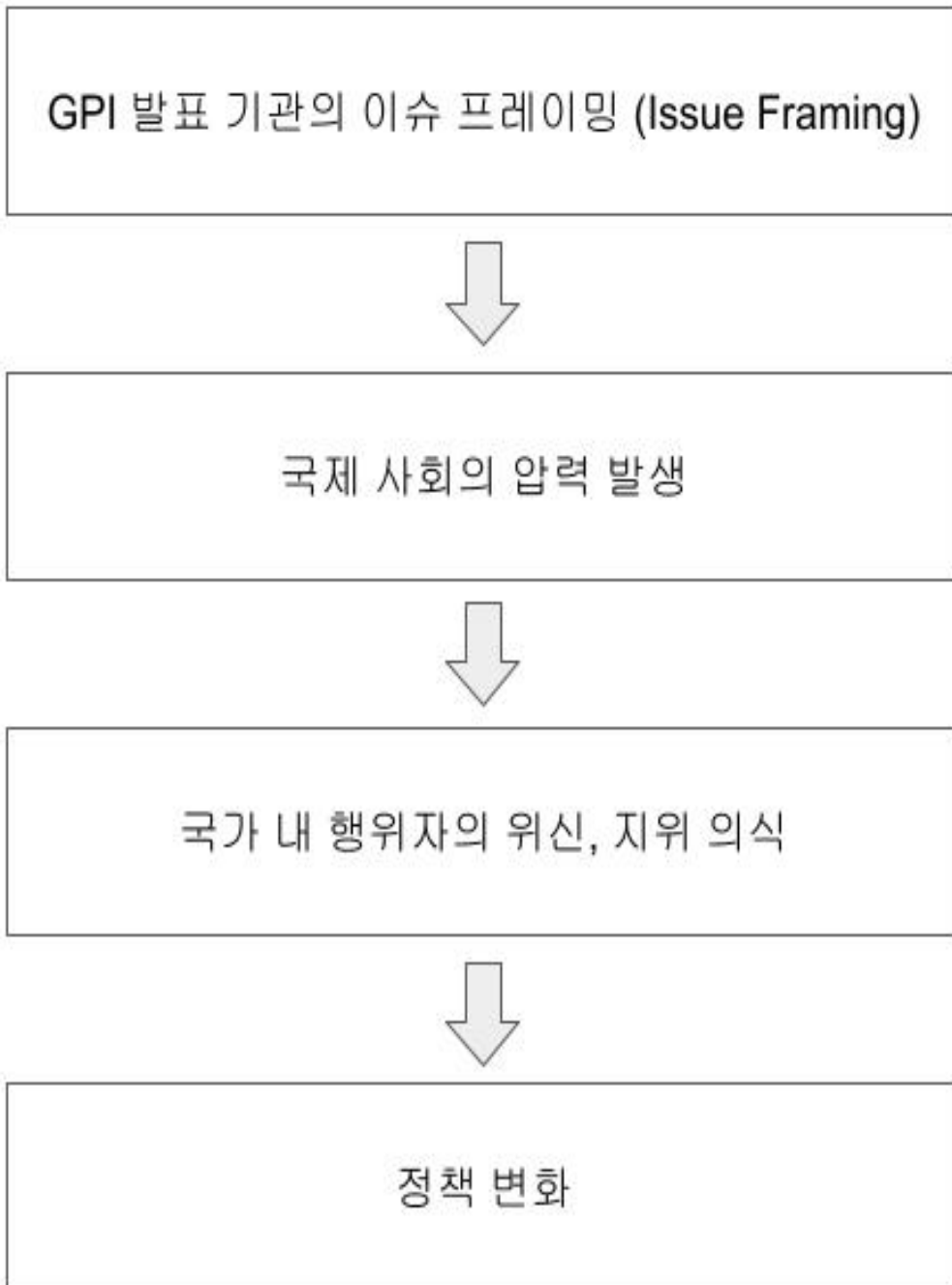
16) 실제로 마사키와 파크스(Masaki and Parks, 2019)는 정치 엘리트들에게 정책 평가를 제시할 때 단순히 해당 국가의 미흡한 측면만 제시할 때보다 해당 국가가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후진적인지 보여줄 때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

위의 메커니즘을 간단히 요약한 바는 [그림 2-1]과 같다.

그렇다면 국제비교지수는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일까? 그리고 국제비교지수를 통해 하락한 위신이나 지위는 정말로 각국이 우려하는 것처럼 실제적인 처벌로 이어질까? 공개하여 망신주기 전략을 연구했던 연구들은 특정국이 규범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정보가 어떻게 국제적 수준에서 압력을 발생시키는지 주목한 바 있다. 이들은 주로 규범 미준수 국가들에 가해지는 물질적 레버리지를 강조한다.¹⁷⁾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신이 하락할 경우 이는 다른 영역에 일종의 스피로버(spill-over) 효과를 만들어내 국가에 대한 실질적인 페널티로 이어질 수 있다. 배리 외 2인(Barry et al., 2013)에 의하면 특정 국가가 규범 미준수 국가로 공개적으로 낙인찍힐 경우 다국적 기업(MNCs: Multinational Corporations)들이 해당 국가에 흘러 들어가는 해외 직접 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줄이는 경향이 관찰된다. 또한, 우와 머디(Woo and Murdie, 2017)는 국제 인권 단체들이 공개적으로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을 가할 경우 국제 통화 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확률이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머디와 펙센(Murdie and Peksen, 2014a)은 인권 규범의 미준수가 외부로부터 인도적 군사 개입이 이뤄질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보였다. 국제비교지수의 순위가 가져오는 페널티에 주목했던 연구들 또한 위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예컨대 모스(Morse, 2019)는 국제비교지수에서 특정 국가들이 FATF 규범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투자자들이나 해외 은행들이 해당 국가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을 통제한다고 주장하였다. 세계은행의 EDB Index에 주목했던 도시 외 2인(Doshi et al., 2019) 또한 국가에 경제적 레버리지를 가할 수 있는 외부 행위자들의 동요가 국제비교지수의 동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위와 같은 국제적 수준의 설명들은 어떻게 ‘불량 국가’로 낙인

17) 터먼과 보어텐(Terman and Voeten, 2013) 등 몇몇 연구들이 물질적 레버리가 아닌 무형의 정치적 압력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그림 2-1] 국제비교지수가 국가의 정책을 변화시키는 메커니즘
출처 : 도시 외 2인(Doshi et al., 2019)

찍힌 국가들에 외부적 요인이 작동하는지 규명하려 한다. 더 구체적으로 이들은 어떻게 국가 외부의 행위자들이 정부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고 이를 통해 보상 구조(payoff structure)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정부, 특히 일부 정치 엘리트와 동일시되며 국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동학은 일종의 블랙박스로 취급된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규범과 제도의 준수를 결정하는 국가가 일원화된 행위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제적인 합의나 규범을 준수함으로써 얻는 이익, 혹은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피해는 국내의 모든 행위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즉, 규범은 상이한 분배의 결과(distributive consequences)를 가져온다(Dai, 2005). 이에 따라 정치 엘리트와 여타의 행위자들은 규범 준수에 대해 서로 다른 선호를 가지게 되며 정부는 국내 정치 내에서 또 다른 전략적 환경을 마주하게 된다. 왜냐하면 정책 결정자들은 규범을 지킴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행위자들로부터 압력을 받게 되는데 직(職)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인 이상 이에 수용적으로 나서거나, 이를 무시하더라도 적지 않는 정치적 비용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국제 규범의 준수는 국제적 수준의 압력뿐만 아니라 국내정치적 동학에 의해서도 추동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국제비교지수는 어떻게 국내정치적 압력을 만들어낼까? 선행연구에서는 국가의 규범 준수 수준을 담은 정보가 국내에서 확산될 때 정부에 직접적인 압력을 넣을 수 있는 행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이들의 힘이 강화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컨대, 헨드릭스와 웡(Hendrix and Wong, 2012)은 권위주의적 정부 하에서 비밀로 감춰졌던 인권 유린 사실이 드러나 지도자의 정치적 비용이 증가하는 과정을 제시했다. 머디와 우퍼라이넨(Murdie and Urpelainen, 2015)은 환경 감시 기능이 제도적으로 미비한 국가에서 국제 환경 단체들이 환경 규범 준수 수준이 낮다는 정보를 공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아예 제도적인 기구를 대신해 정부 정책을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제비교지수의 국내적 효과에 주목한 연구들 또한 이와 같은 정보의 확산이 가져다주는 힘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비스비 외 3인(Bisbee et al., 2019)는 MDGs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나 평가가 이뤄질 경우 국내 행위자들이 이에 주목하며 공공재에 대한 투자 증가를 요구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였다. 또한, 호니그와 위버(Honig and Weaver, 2019)는 원조 투명성 지수가 기존에 투명성을 요구하던 정치 세력에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의 힘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책적 요구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일종의 교육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행위자는 바로 일반 대중이다. 정치학에서 여론은 정책 형성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¹⁸⁾ 피어슨(Pierson, 2002)이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에서는 정책이 실행되거나 유지되기 위해서 선거를 통해 그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기적 선거에 의해 제도적으로 구속” 되는 정치 엘리트들은 일반 대중들이 정치 세력에 동원되어 간접적인 제약을 가하거나 잠재적인 유권자로서 보상과 처벌을 줄 수 있기에 이들의 보이는 정치적 선호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다(Denzau and Munger, 1986; Kollman, 1998; Soroka and Wleizen, 2010). 심지어 권위주의 레짐(regime)에서도 여론은 정책 형성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 권위주의 정권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대중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하는데 대중의 선호에서 지나치게 벗어난 정책을 펼 경우 정권에 대한 대규모적인 반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Truex, 2016; Williamson and Magaloni, 2020).

국가의 규범 준수 수준을 나타내는 정보가 주어졌을 때 대중의 인식은 어떻게 변화할까? 선행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상반되는 결과들을 내놓고 있다. 먼저, 규범 준수가 미흡하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동시에 정책적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느낀다는 연구들이 존재한다.¹⁹⁾ 예를 들어, 오스데란(Ausderan, 2014)은 자국이

18) 정치적 과정에서 여론이 수행하는 일반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만자 외 2인 (Manza et al., 2002)이나 버스타인(Burstein, 2003) 참고.

19) 인권과 관련한 국제 규범에 주목했던 선행연구에서는 국가가 규범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정보는 정보 제공(informing), 설득(persuasion), 그리고 자극(sensitization)을 통해 국내의 청중(audience)들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Tingley and Tomz, 2021). 국가의 정책이 미흡하다고 막연하게 느끼던 대중

인권 규범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제기되었을 때 인권 정책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가 커진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한, 환경 정책 대한 미국 대중의 여론에 주목했던 텅글리와 톰즈(Tingley and Tomz, 2019)는 자국이 파리 협약에서 공언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그것이 국제적으로 비난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대중들이 기후 변화 규범 준수를 더욱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것을 보인 바 있다.

반면, 국가의 규범 준수에 대한 정보가 수치심을 만들어냈을 때 오히려 대중들이 규범에 적대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Terman, 2016; Greenhill and Reiter, 2022; Spektor et al., 2022). 스나이더(Snyder, 2020)는 규범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대중들로 하여금 오히려 자국의 지위가 위협당한다고 인식하게 하여 격렬한 저항을 부를 수 있다고 말한다. 개인들은 내집단에 더욱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가운데 내집단의 높은 지위(status)를 통해 자긍심을 이끌어내어 자기 정체성과 결부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외부에서 자신의 집단을 비난하는 정보를 제공한다면 개인들은 이를 집단의 지위에 위협이 되는 행동으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이다(Turner and Oakes, 1986; Tajfel and Turner, 2004).

그렇다면 국제비교지수를 통해 국가의 규범 준수 수준이 미흡하다는 정보를 제공했을 때 대중들의 인식은 바뀔 수 있을까? 관건은 국제비교지수의 뒤에 숨은 위신과 지위의 국제정치가 대중들에게도 작동할 수 있는지의 여부다. 실제로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국의 위신과 지위를 의식하는 것은 정치 엘리트나 관료들뿐만이 아니며²⁰⁾ 대중들 또한 자국의 위

들은 외부에서 규범 준수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때 정책적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히 알게 된다(Davis et al., 2012). 또한, 공개적으로 규범을 지키지 않다는 정보를 공개함을 통해 규범에서 이탈하는 것이 좋지 않은 일, 심지어 부끄러운 일이라고 대중들을 설득할 수 있으며 규범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자국이 입을 각종 비용에 대해서 가늠하게 할 수 있다(Simmons, 2009).

20) 전통적으로 국제정치학에서 지위와 위신은 정치 엘리트나 관료들의 인식과 결부시켜 논의해왔다. 이는 국제 정세에 대해 일반 대중이 가지는 시각을 사소하거나 비일관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가운데 국가를 가장 핵심적인 행위자

신과 지위가 하락할 때 민감하게 반응한다. 예컨대 톰즈(Tomz, 2007)는 대중들이 국가나 지도자의 국제적 위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청중 비용(audience cost)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²¹⁾ 또한, 브러트거와 커트저(Brutger and Kertzer, 2018)는 비록 매과(hawks)들과 비둘기과(doves)들이 위신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기는 하나 두 부류의 대중들 모두 정치 엘리트가 위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강조할 때 외교 정책에 대해 더욱 큰 지지를 보내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코르텔과 도나휴(Cortell and Donahue, 2002)는 위신의 하락이 대중의 잠재적인 정치적 선호를 자극하여 인식적 수준에서, 그리고 실제적인 정책 공론장에서 의제의 중요성(salience)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 가지 눈 여겨보아야 할 사실은 국제비교지수가 지위와 위신을 자극하는 핵심적인 방법이 비교라는 점이다. 국제비교지수는 특정한 몇몇 국가만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국제비교지수는 평가가 가능한, 혹은 평가를 의도한 모든 국가들을 목표로 삼으며 그 평과 결과로 최고의 ‘모범 국가’ 부터 최악의 ‘불량 국가’ 까지 나열이 가능하다. 그리고 각국은 정확히 어떤 국가들보다 얼마나 성과가 좋은 상태인지, 나쁘다면 어떤 국가들보다 뒤떨어져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즉, 국제비교지수가 수치화된 위신, 혹은 수치화된 지위로 작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규범 이탈을 계량화할 수 있다는 것을 넘어 국가 간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국제비교지수의 원리인 비교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비교지수가 실제로 일반 대중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바꾼다면 어떤 조건 하에서 바꿀 수 있을지를 알아본다. 특히, 미시적 수준에서

로 간주하는 국제정치학의 고전적인 시각 때문이기도 하다(Holsti, 1992; Lake, 2002).

21) 청중 비용은 외부적으로 제시한 정치 지도자의 공언, 위협 등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국내적으로 치러야 하는 정치적 비용을 의미한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청중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개념을 최초로 제기한 피어론(Fearon, 2013)이나 이후의 연구 흐름을 정리한 커트저와 브러트거(Kertzer and Brutger, 2015)를 참고.

국제비교지수를 해석할 때 핵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비교의 준거점에 주목한다. 비교의 준거점이 자기 자신에서 타인으로, 소수에서 다수로 확장될 때 국제비교지수가 발생시킬 수 있는 효과들에 대해서 제시한다.²²⁾

22) 추가적으로, 일반 대중에 대한 연구가 엘리트의 행동에 대한 이해 또한 넓힐 수 있다. 커트저(Kertzer, 2022)에 따르면 비록 대중과 엘리트가 가진 선호나 행태는 서로 차이가 있으나 둘 사이의 간극은 그다지 크지 않다. 따라서 대중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엘리트의 행동에 대한 미시적 근거를 찾아나서는 데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제 3 장 비교의 준거점과 국제비교지수의 효과

인간은 어떻게 정보를 인식하고 해석할까?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인간은 카메라처럼 이를 한꺼번에 상(像: image)으로 저장한 뒤 출력하지 않는다. 인간은 특정한 정보를 받아들인 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 해석한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세계를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시스템(system), 즉 스키마(schema)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스키마는 “개인의 경험으로 축적한 체계적인 지식구조나 특정 대상에 대한 기억, 혹은 프레임워크(frameworks)” 인데 인간은 새로운 정보를 부여받았을 때 스키마를 참고하여 정보를 처리하며 자신이 가진 스키마를 재점검하기도 한다(Fiske and Taylor, 1991; Aggarwal and McGill, 2007; 김성애, 이종혁, 2011).

인간은 스키마에 따라 특정한 정보에 얼마나 주목하고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스키마와 맞는 정보들을 더욱 쉽게 눈치 채고 받아들이고 스키마와 맞지 않는 정보들은 왜곡하거나 예외로 취급하여 재해석한다(Nadkarni and Narayanan, 2007; Kite and Whitley Jr., 2016). 이러한 이유로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선택적 인지(selective perception)를 일으켜 원하는 정보나 환경의 일부만 인식하거나 자신이 가진 인식 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향적 해석을 할 여지가 많다.²³⁾

정보가 특정한 방향으로 해석되는 과정은 개인의 인지적 체계 속에서 이뤄지기도 하지만 정보 자체에 의해 유도될 수도 있다. 정보가 특정한 방향으로 해석되도록 가공되어 개인에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프레임은 일종의 “해석의 스키마들(schemata of interpretation)” 인데 메시지가 개인에게 전달될 때 어떤 정보가 어떻게

23) 이같이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인식하고 해석한다는 사실은 이미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에 주목했던 여러 심리학자들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Klayman, 1995).

부각되거나 규정되는지, 그리고 정보가 어떻게 다른 정보와 연결되는지에 따라 특정한 프레임이 미리 구성될 수 있다(Goffman 1994, 21). 예컨대 개인에게 주어지는 선택지에서 손해와 이득 중 어느 쪽이 강조되는지, 혹은 손익의 확실성이 어떻게 규정되는지에 따라 인간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며²⁴⁾ 특정한 이슈(issue)가 어떠한 워딩(wording)으로 구성되는지에 따라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도나 유발되는 감정이 달라지기도 한다(Snow et al., 1986; Feinberg and Willer, 2011).

정치적 정보도 위와 같은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 자유롭지 않다. 즉, 정치적 정보 또한 대중에게 날 것 그대로 전파되거나 수용되는 경우가 드물다. 정치적 정보를 접했을 때 대중들은 자신이 알던 기존의 지식체계나 신념과 대조하며 주관적으로 해석하려 한다.²⁵⁾ 예컨대 정치심리학에서는 동기 부여된 추론(motivated reasoning)에 의해 개인마다 정치적 정보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²⁶⁾ 사람들은 정치적 정보가 자신이 가진 이념적, 도덕적 신념과 합치할 때 많은 가중치를 두고 해석하지만 자신의 신념과 위배되는 정보라면 아예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²⁷⁾ 심지어 대중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특정 정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있다고 치부하거나 아예 진위여부를 주관적으로 판단내리기도 한다(Yair and Sulitzeanu-Kenan, 2018; Van der Linden et al., 2020). 또한, 정치적 정보

24) 이러한 양상은 카네만과 트버스키(Kahneman and Tversky, 1979)나 트버스키와 카네만(Tversky and Kahneman, 1981)이 제시하는 전망 이론(prospect theory)으로 구체화된 바 있다. 전망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익보다 손실에 훨씬 민감하며 이익이 강조될 경우 안전한 선택을, 손실이 강조될 때에는 위험한 선택을 선호한다. 이는 손익과 확률을 프레이밍하는 방식에 따라 기존의 효용 극대화 이론에서 비합리적이라고 여겨졌던 선택이 유도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25) 베린스키(Berinsky, 2017)는 이를 머릿속에 강하게 자리 잡는 정보들을 결합하여 ‘평균을 내는’ 과정이라고 일컬은 바 있다.

26) 동기 부여된 추론에 대해서는 쿤다(Kunda, 1990), 동기 부여된 추론과 여론의 관계에 대해서는 스트릭랜드 외 2인(Strickland et al., 2011) 참고.

27) 이와 같은 편향은 환경, 복지, 보건 등 다양한 정책적 분야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ames and Van Ryzin, 2017; Druckman and McGrath, 2019; Macguire et al., 2022).

는 미디어와 정치 엘리트에 의하여 특정 방향으로 프레이밍되어 확산되기도 한다(Zaller, 1992). 정치적 정보는 정치적 레토릭(rhetoric)으로 사용되거나 정파와 정당의 정책적 근거로 활용되기 위하여 일부분이 강조, 또는 생략될 여지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적 정보는 정치 엘리트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해석이 유도될 수 있다.

국제비교지수는 위와 같은 주관적인 해석에 더욱 ‘취약한’ 정치적 정보다. 국제비교지수는 여타의 정치적 정보와 달리 종합적인 사실이나 구체적인 사건의 맥락이 제시되지 않는다. 지수가 제시하는 것은 평가 기준과 평가의 대상이 되는 국가들이 기록한 순위, 혹은 카테고리(category)까지이며 그 이상의 정보는 전혀 담겨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국제비교지수의 어떤 부분을 얼마나 받아들여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온전히 정보 수용자의 몫이다. 똑같은 점수와 순위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식적 기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국제비교지수 자체가 그다지 구체성이 높지 않은 수치적 정보이기에 정보가 확산되기 이전에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여 프레이밍하기도 용이하다. 랭킹이 나열된 표에서 의도적으로 특정한 우열 관계를 강조하거나 구체적인 정보를 몇 가지 제시해 연결시키는 것만으로 손쉽게 원하는 해석을 유도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제비교지수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 한 가지 눈 여겨 봐야 할 지점은 비교의 대상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의견이나 능력을 평가하려는 욕구를 끊임없이 가지며 최대한 비사회적인 방식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스스로를 평가하는 경향을 띤다. 하지만 이렇게 타인에 의존하지 않은 객관적인 평가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차선책으로 비교를 통하여 스스로를 평가한다(Festinger, 1954). 그런데 이 때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자신과 가장 비교할 만한 대상을 찾아야 하는데 이는 다분히 자의적으로 설정된다(Wood 1989, 231). 예컨대 누군가가 자신과 가장 비슷한 대상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평가하려고 한다면 어떤 특징을 바탕으로 비슷함을 정의 내릴지, 그리고 비슷한 비교 대상을 어디서 찾아낼지 주관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스스로가 설정한 비교의 기준에 따라 비교의 성질과 결과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주관적으로 정해진 비교의 준거점이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 비교의 내용과 결론, 심지어 개인의 행동까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과 가장 비슷한 대상을 찾아서 비교를 한다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게 되며 원래 자신보다 훨씬 나은 대상과 비교한다면 자존감이 저하되지만 자기향상이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강혜자, 2016). 또한, 비교 대상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자존감이나 권력 관계가 달려있는지에 따라서 자기평가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한다(Tesser, 1988).

그렇다면 국제비교지수를 접한 개인들이 설정할 수 있는 비교의 준거점은 무엇일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타자 모두를 비교의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자기 비교(self-comparison)’와 ‘사회 비교(social comparison)’ 모두를 수행한다. 자기 자신과 비교할 때에는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거나 자신의 목표, 즉 이상적으로 바라는 나의 모습과 비교한다. 타인과 비교할 때에는 자신을 중심에 놓고 비교의 준거점이 될 외부 대상의 외연과 내포를 주관적으로 정한다.

위와 같은 원리를 적용해본다면 개인들이 일상적으로 자기 비교와 사회 비교를 수행하는 것처럼 국제비교지수를 접한 이들도 자국 비교와 세계 비교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 자국 비교에서 대중은 특정 시점의 자국, 혹은 자국이 내세운 정책적 목표와 현재 자국의 상태를 비교한다. 반면, 세계 비교에서는 타국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자국이 얼마나 앞질렀는지, 혹은 뒤쳐졌는지를 판단한다. 이와 같은 ‘~보다 잘했다’, ‘~보다 못했다’라는 인식은 ‘이만하면 잘했다’, ‘이 정도는 심각하다’, ‘이 성과는 대단하다’ 등을 판단하게 만든다. 결국, 여러 준거점을 바탕으로 한 비교는 국가가 기록한 순위가 위신과 지위에 타격을 가할 만큼 심각한 일인지, 그리고 심각하다면 얼마나 심각한지를 가늠하는데에 영향을 준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국제비교지수에서 설정될 수 있는 비교의 준거점에 대해서 살펴보자. 상술했듯이 인간은 자신의 목표, 즉 이상적으로 여기는 자신의 모습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카버와 샐이어(Carver and Scheier, 1990)은 제어 이론(control theory)을 내세우며 어떻게 사람들이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아 비교를 수행하는지 논한 바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가진 준거가치, 특히 행동 원칙이나 목표와 현재의 결과를 비교한다. 그런데 대개 자신이 세운 이상적인, 완벽한 모습과 현재의 자신이 일치하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괴리를 느끼게 되며 이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행동하려 한다. 즉, 자신이 세운 목표와 자신의 차이가 자기에 대한 조절과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제 규범 준수에서 이상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국제 규범을 준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회원 자격(membership)을 유지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규범 준수는 적극적인 실천으로 달성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개적인 공약을 하고 그에 맞춰 자국의 정책을 바꾸는 데에 핵심이 있다. 예컨대 파리 협약을 준수하는 국가들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여 얼마나 규범에 이바지할지를 약속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서는 비록 선택적이기는 하나 각국의 인권 보호 정책에 대한 조사를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UNICCPR 16 Dec. 1966). 그런데 이와 같은 약속은 공개적으로 타국을 향하여 하는 언사이기도 하지만 스스로가 세운 이상적 목표이기도 하다. 즉, 각국의 약속은 규범을 지킨다는 가정 하에 달성할 수 있는 자국의 이상적인 모습이다.

국제비교지수의 평가에서도 위와 같은 국가의 약속은 주요한 의미를 지닌다. 규범 준수에 대한 평가는 규범이 추구하는 방향에 맞게 자국의 정책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를 바탕으로 시행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각국이 규범에 참여하며 내세운 약속, 즉 각국의 이상적인 목표치가 잘

지켜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국가의 약속이 국제비교지수에서 강조될 경우 정보의 수용자들은 국가의 이상적 목표와 현재의 모습 사이에 격차가 적지 않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국이 받은 순위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즉, 국제비교지수를 접한 대중은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듯 자국의 이상적 모습과 현재의 성과를 견주며 자국비교를 수행하는 ‘거울 효과(mirror effect)’를 느낄 수 있다.

세계 비교에서는 어떠한 비교의 기준이 성립할 수 있을까? 상술하였듯 사회비교에서 타인과 비교를 수행하는 목적이 나름의 객관성을 외부에서 확보하기 위함에 따라 비교 대상이 얼마나 비교할 만한지가 관건이 된다. 이 때 비교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기준은 당장 자신의 옆에 있는 한 두 명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이 속해있는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이 될 수도 있으며, 자신의 주변에 존재하는 인원 전체가 될 수도 있다.

국가 수준에서 비교 대상이 하나 혹은 소수일 경우 ‘라이벌 효과(rivalry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집중적으로 의식하는 한 두 국가만을 자국과 비교가 가능한 국가, 혹은 비교가 필요한 국가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정치에서 서로 뒤쳐지는 것을 경계하는 라이벌 국가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 영국과 프랑스, 인도와 파키스탄이 대표적인 예시다. 이들이 오랜 기간 동안 갈등이나 물리적 대치를 벌인 경우가 많음에 따라 국제정치학에서는 전쟁 발발 가능성 등 안보적 맥락에서 라이벌 효과를 연구해왔다(Diehl and Goertz, 2001; Thompson, 2001; Valerino, 2003). 그러나 라이벌 관계는 물리적 폭력을 수반하는 안보 이슈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폭넓게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이화준과 박인조(2019)는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UAE: The United Arab Emirates)의 아부다비와 카타르(Qatar)가 국가 정체성 측면에서 경쟁 관계에 있음에 따라 유사한 문화 정책을 펴 서로를 앞지르려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라이벌 관계는 잠재적으로 경쟁의식이나 적대감을 부추길 수 있음에 따라 실제적인 충돌이 부재한 상태에서도 심리적

효과를 부추길 수 있다.

국가가 패배를 꺼려할 뿐만 아니라 패배를 피하기 위해서 전략적 행동까지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다. 예컨대, 구조적 현실주의자들은 “타국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을” 국가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단순히 잘 하는 것보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중요시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Snidal, 1991; Greico et al., 1993). 이를 넘어 선행 연구에서는 패배가 미시적 수준에서 수치심을 자극하고 자국의 심각한 상황을 일깨운다고 주장한다. 머서(Mercer, 2017)는 정치 엘리트들이 자국의 패배를 곧 자기 자신의 위신과 자존감 하락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고 하카르비(Hakarvy, 2000)는 국내 행위자들이 패배를 경험했을 때 모욕을 설욕해야 하기 때문에 자국의 역량을 강화시킬 심리적 동기를 획득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국가의 패배가 불러오는 효과는 사람들이 국제비교지수를 해석하는 인지적 과정에서 라이벌 관계, 그리고 그 경쟁에서의 승패 여부를 더욱 부각하여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비교의 준거점이 조금 더 확장된다면 자국이 속한 특정 집단을 비교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예컨대, 국제비교지수의 순위를 무형의 집단, 예컨대 자국이 속한 대륙 내의 국가들과 비교하거나 OECD와 같은 유형의 집단과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자국과 유사한 국가들, 혹은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의견을 해당 집단으로 한정하여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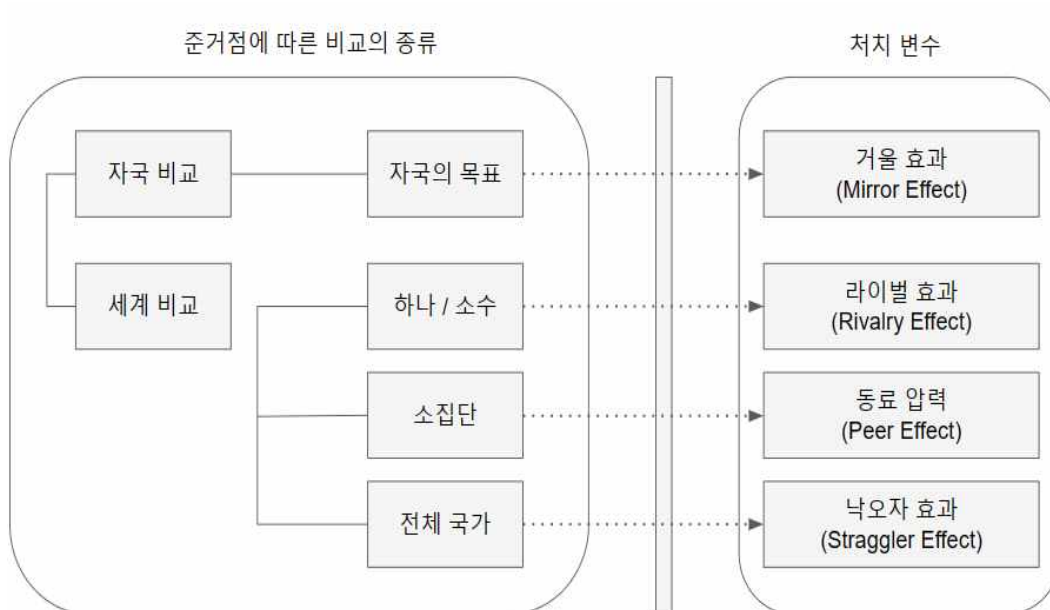
어떻게 국제비교지수의 해석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특정한 집단이 부각될 수 있는 것일까? 사람들은 비슷한 이익, 경험, 사회적 지위를 공유하는 주변의 친구나 동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의식한다. 그 결과 집단 내의 다른 사람들과 자신이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동료 압력(peer pressure)’이 일어난다. 동료 압력은 심리적 압박에 의해 주변 대상의 행동을 따라하며 규범이나 규칙에 순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흔히 교육학이나 발달심리학에서 청소년들이 또래의 패션이나 말투를 모방하는 경향이나 흡연, 음주 등의 비행 행위에 휘말리

는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론인데 정치학과 사회학에서는 일반 성인들 또한 자선 행사나 투표에 참여할 때 동료 압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Rae Clasen and Brown, 1985; Gerber et al., 2008; Harden et al., 2008; Sumber et al., 2009; Reyniers and Bhalla, 2013). 만약 국제비교지수를 접한 대중들이 동료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면 자국과 유사한 동료 국가들을 눈 여겨 볼 것이고 그들이 바람직한 정책적 기준에 따라 행동을 변화시키며 앞서나가는 것을 확인한다면 자극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국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알맞은 정책을 추진하여 동료 국가들을 따라해야 한다는 요구를 한다.

마지막으로 비교의 준거점이 극도로 확장되어 국제비교지수의 평가 대상이 되는 국가들 전체가 될 수 있다. 국가 전체와 비교할 경우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가지는 중요성이 커지는데 대중들은 궁극적으로 자국이 규범 선진국으로서 상위권에 위치해있는지, 아니면 후진국으로서 하위권에 위치해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이때, 자국이 하위권에 위치해있을 경우 대중들은 국제 사회에서 불명예스러운 위신을 얻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낙오자 효과(straggler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 대중들은 자국이 낙오된 국가가 되었을 경우에 국제 사회의 평균 국가들보다도 뒤쳐져 절대적으로 ‘못난 국가’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국력을 갖춘 국가들의 경우 하위권을 기록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비교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던 국가들에게까지 뒤쳐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 큰 위신 하락으로 느껴질 수 있다.

다수의 행동은 규범 자체를 얼마나 진지하게 여겨야 할지와도 연관이 있다. 핀모어와 시킨크(Finnemore and Sikkink 1998, 904)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제 규범은 광범위한 국가들 사이에서 “당연시 여겨질 때 (achieve a taken-for-granted quality)” 비로소 자리 잡을 수 있다. 즉, 국제 규범은 다수의 방법이 곧 당연한 기준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성립한다. 그런데 다수의 행동은 규범 자체에 생명력을 불어넣기도 하지만 준수 여부를 고려하는 국가가 규범이 가진 힘을 평가하는 데에도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세이건(Sagan, 1996)은 우크라이나가 비확산 조약(NPT: Non-Proliferation Treaty)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전 세계 국가들의 전반적인 준수 수준이 명분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반대로 카네기와 카슨(Carnegie and Carson, 2018)은 국가들의 전반적인 규범 준수 수준이 낮을 때 각국은 사회적 비판을 피할 수 있다는 기대 하에 의도적으로 규범을 위반한다는 점을 보인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제 비교지수 정보를 접한 대중들이 다수 국가의 순위와 자국을 비교할 때 규범 자체가 가진 무게감으로부터 정책적 상황의 심각성을 유추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림 3-1] 비교의 종류에 따른 처치 변수

정리하자면 국제비교지수를 접한 대중들은 자국 비교와 세계 비교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 자국 비교를 하게 될 경우 자국이 정한 이상적인 모습, 즉 자국의 목표와 비교하게 되며 이는 거울 효과로 이어진다. 세계 비교를 할 경우 비교의 준거점은 하나 혹은 소수, 소집단, 그리고 전체 국가가 될 수 있다. 아주 특정한 소수의 국가와 자국을 비교할 경우 라이벌 효과가 발생하며 자국이 속한 소집단 내 국가들과 자국을 비

교할 때 동료 압력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전체 국가와 자국을 비교할 때 낙오자 효과가 발생한다.

본 논문은 비교의 준거점에 따른 각각의 효과를 설문 실험의 처치 변수로 삽입하여 이를 경험적으로 확인한다. 다음 4장에서는 국제비교지수의 메커니즘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 실험에 대해 설명한다. 설문 실험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설명하고 실험의 설계를 제시한 뒤,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제 4 장 국제비교지수와 대중 인식에 대한 실험 연구

본 논문에서는 국제 규범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국제비교지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 실험을 실시한다. 설문 실험은 여론 조사에 실험적 디자인을 결합한 연구로써 응답자들에게 여러 종류의 설문지를 무작위적으로 할당하여 인과 효과를 추론한다(Gaines et al., 2017). 이는 내생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에 따라 여타의 방법론에 비해 인과 효과를 탐구하는 데에 유리하며 현장 실험(field experiment)과 실험실 실험(lab experiment)에 비해 더 쉽게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 설문 실험을 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비교지수를 발표하는 기관들은 무작위적으로 규범이나 평가 대상을 정하지 않는다. 텅글리와 톰즈(Tingley and Tomz, 2022)가 지적한 것처럼 만약 특정 국가가 규범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무작위적으로 발생한다면 인과효과만을 따로 떼어내기가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나 일찍이 공개해서 망신주기 전략에 주목했던 연구들은 규범 준수를 옹호하는 행위자들이 무작위적으로 타겟(target)을 정하여 전략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물론, 규범의 위반 여부 자체가 가장 핵심적일 때도 많지만 전략을 실행하는 행위자와 타겟 국가 간의 정치적 관계나 기관의 전략적 이해관계 또한 주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Koliev and Lebovic, 2018; Szent-Ivanyi and Timofejvs, 2021). 국제비교지수 또한 이와 같은 요소들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국제비교지수를 발표하는 기관이 평가 방식이나 대상을 인위적으로 설정하여 자의적인 프레임팅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제비교지수를 발표하는 관행이 자리를 잡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음에 따라 데이터가 충분히 누적되어 있지 않다. 켈리와 시몬스(Kelley and Simmons, 2019)에 따르면 엄격한 의미에서 국제비교지수

는 1990년대 이후에 등장하였고 201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159여 개의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는 충분히 큰 표본이라고 볼 수 없는데 통계 변수를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지표까지 좁힌다면 표본의 크기는 더욱 줄어든다. 표본의 크기가 통계적 검정력, 특히 2종 오류의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분석에 있어 치명적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²⁸⁾

셋째, 국제비교지수들은 평가 기관이 자의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평가 대상과 이슈, 그리고 방식이 동일하지 않다. 어떤 국제비교지수는 빠짐없이 세계의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지만 특정 국가들을 제외한 채 지수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국제비교지수가 평가하는 이슈 영역도 천차만별이며 평가 방식 또한 분류를 통한 서열화부터 순위 측정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국제비교지수들 간의 이질성은 표본들 간의 일괄적인 비교를 힘들게 만든다.

넷째,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이크로 데이터(micro-data)를 찾기 힘들다. 앞서 2장에서 언급하였듯 국제비교지수의 미시적 수준의 영향은 거의 주목되지 않았으며 여론에 주목한 연구 또한 드물다. 특히,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효과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질문들을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선행연구에서 수집한 데이터에서는 네 종류의 메커니즘을 조작화하여 질문을 구성한 경우를 찾을 수가 없었다.

본 논문에서 분석하는 설문실험은 2021년 2월에 실시되었으며 총 2164명의 한국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 추출은 설문조사 업체인 (주) 엠브레인의 패널을 활용하였다. 또한, 한국의 인구학적 구성과 최대한 유사하도록 성별, 연령대, 지역에 따라 층화표집추출(stratified sampling)을 실시하였다.²⁹⁾

실험에서 응답자에게는 기후 변화 정책에 대한 가상의 지수를 제공하였다.³⁰⁾ 지수는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신문기사의 형태로 제공하였

28) 표본의 크기와 통계적 검정력, 그리고 2종 오류에 대한 내용은 아코벵(Akobeng, 2016) 참고.

29) 표본의 기술 통계량은 부록 참고.

는데 여기에는 가상의 지수인 “세계기후변화대응지수(WCRI: World Climate Change Response Index)”에서 한국이 기록한 순위를 담았다.³¹⁾ 실험의 처치에 따라 헤드라인과 기사 내용은 다르게 구성하였다. 통제 집단에는 한국이 110개의 나라들 중 중위권 정도의 성적인 51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하였고 처치 집단에 제시한 글에서는 이에 정보를 추가하거나 변화시켰다. 거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처치 집단에는 CCPI가 한국이 국제 사회에 약속한 탄소 감축량을 얼마나 달성하였는지 반영하여 측정하였으며 한국이 이를 달성하는 데에 실패했다고 설명하였다. 라이벌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처치 집단에는 한국의 순위가 주요 라이벌 국가인 일본보다 20위가 낮다고 설명하였으며 동료 압력을 알아보기 위한 처치 집단에는 한국이 비슷한 경제 규모의 OECD 선진국들보다 20위가 낮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낙오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처치 집단에는 아예 순위를 낮춰 한국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순위인 89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각 효과가 대칭적으로 나타나 한국이 좋은 순위를 기록했을 때에도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각 비교 대상들보다 더 나은 순위를 기록한 경우도 처치하였다.³²⁾

일반적으로 정보에 대한 태도는 메시지의 발신자(sender)의 권위에 따라서 달라진다(Ohanian, 1999; Cialdini, 2001). 이에 따라 국제비교지수

30) 사이몬 외 3인(Simon et al., 2018)에 따르면 양극화(polarization)가 지나치게 심한 정치적 이슈일 경우 질문과 상관없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서 응답하는 일이 많다. 물론,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국제비교지수의 메커니즘이 강하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효과가 나타날 것이지만 극단적인 답변들에 의해 처치 변수의 효과들이 과소평가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대중들이 전혀 공감하기 힘들 정도로 잘 알지 못하는 이슈일 경우 응답자들이 제시문을 이해하지 못해 무작위적으로 답변을 할 가능성이 있고 안보나 민주주의처럼 같이 지나치게 한국적 특수성이 강한 이슈일 경우 실험이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을 획득하기 힘들다. 기후변화는 잘 알려진, 일반적인 이슈인 동시에 한국인들 사이에서 지나치게 양극화되지 않은 이슈임에 따라 위와 같은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Choi, 2020).

31) 실험이 제시되기 전에는 해당 정보가 가상의 정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 모든 실험이 종료된 이후에 지금까지 제시문에서 기사로 제시되었던 정보들이 모두 가상의 지수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32) 제시문의 구체적 내용은 부록 참고.

에 주목했던 선행연구에서도 지수를 발표하는 기관이 공개되는지, 그리고 공개된다면 누구인지에 따라 정보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Kelley and Simmons, 2019). 국제비교지수의 출처를 생략하거나 특정 기관으로 고정시킨다면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비교지수의 출처를 무작위적으로 변화시켜 제시하였다. 처치 변수를 위한 제시문에 뒤이어 두 번째 문단에서 국제비교지수를 발표한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각각 정부 기관(미국 국무부), 국제기구(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그리고 비정부기구(가상의 기구인 CRP(Climature Reality Project))였다.

기후 변화 이슈만을 이용한 실험은 완전한 외적 타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 기후변화 이슈의 특성이 실험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사람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이슈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국은 제조업 산업이 발달하였고 도시 인구가 많다. 때문에, 대중들의 입장에서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어렵지는 않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을 지적하는 국제비교지수를 접했을 때 비교적 더 많이 공감할 하거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쉽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이슈 영역이 바뀌어도 결과가 강건하게 도출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데이터는 앞선 실험에 참여한 응답자들에게 기억을 회색시키기 위한 더미(dummy) 질문들을 여러 개 던진 후 다시 실험을 진행하여 수집하였다. 이슈를 장애 인권으로 바꿔 이를 측정하는 가상의 지수를 제시하였고 지수의 이름과 국제비교지수의 발표 기관 이외에 다른 요소는 앞선 실험과 똑같이 유지하였다. 장애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중요한 인권 이슈인 동시에 대중들이 이해하기 힘든 낯선 이슈는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자주 회자된 바는 없다. 또한, 이는 기후변화보다 한국적 특수성이 훨씬 덜 나타나는 이슈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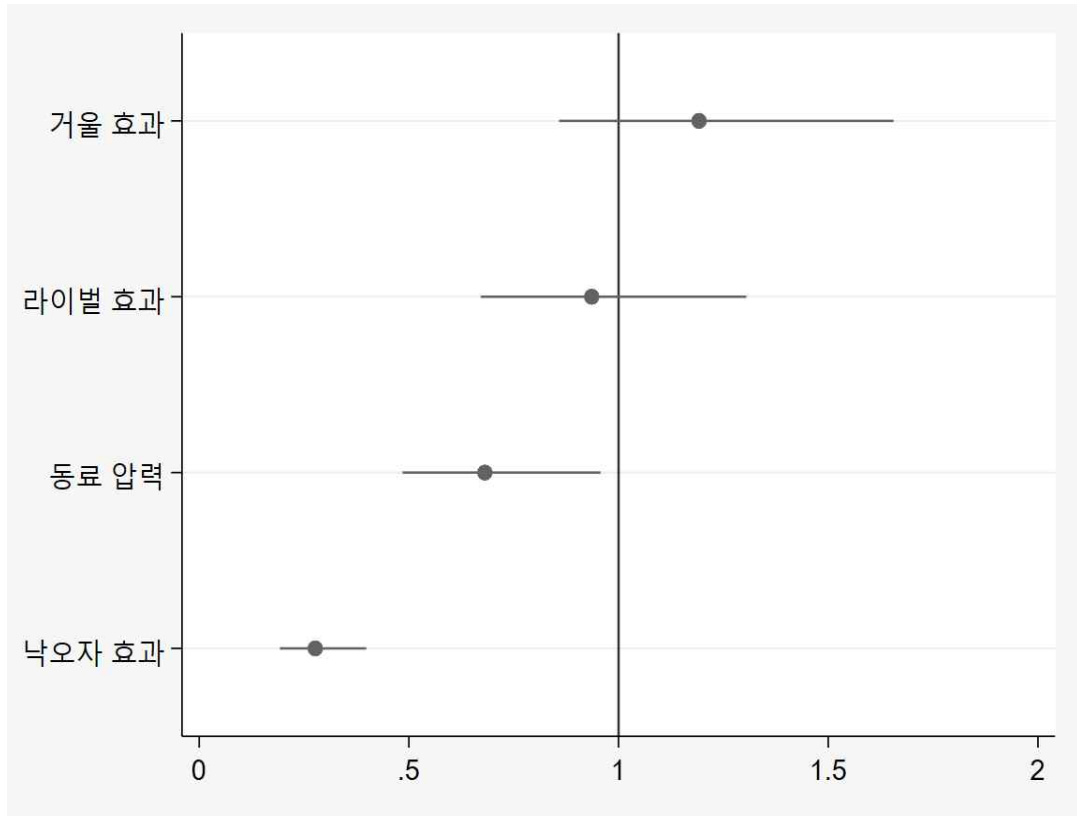
실험 실시 전 응답자들이 규범 준수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력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한국은 국제사회가 요구한다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 감축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라는 제시문에 얼마나 찬성, 혹은 반대하는지 물었고 이를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답하게 물었다. (1. 아주 반대한다, 2. 반대한다, 3. 보통이다, 4. 찬성한다, 5. 아주 찬성한다) 해당 질문은 장애 인권에 대해서 똑같이 물어 실험 참여자들에게 응답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실험 중간마다 ‘본 문항을 절대로 체크하지 마시오,’ ‘앞선 문항에서 질문하였던 정보는 무엇이었습니까?’ 등의 질문으로 주의 점검(attention check)을 실시했고 해당 문항을 통과하지 못한 응답자들은 데이터 수집에서 제외하였다. 실험 실시 이후에는 연령, 성별, 소득 수준, 교육 수준에 대한 인구학적 정보를 답하도록 하였다.³³⁾

본 실험에서는 우선 한국의 순위 정보가 응답자들에게 시각적으로 자극이 되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한국이 기록한 성적이 생각보다 높은 것 같은지, 혹은 낮은 것 같은지 물었다.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기록되었다. (1. 생각보다 아주 낮다, 2. 생각보다 다소 낮다, 3. 보통이다, 4. 생각보다 다소 높다, 5. 생각보다 아주 높다.) 응답 데이터는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ordinal logistic regressio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³⁴⁾ 그 결과는 [그림 4-1]과 같다. 분석 결과 공개적으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나 일본보다 순위가 낮았을 때 모두 처치 집단의 응답자들은 통제 집단의 응답자들보다 순위가 더 낮다고 인식하지 않았다. 즉, 거울 효과와 라이벌 효과는 사람들로 하여금 순위를 더 높거나 낮게 인식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순위가 동료 국가들보다 낮았을 때와 전체 국가들보다 낮았을 때 응답자들은 순위가 비교적 낮다고 여겼다. 이는 동료 압력과

33) 연령은 자신의 나이를 숫자로 응답하게 하였고 소득 수준은 3000만 원 이하부터 1000만원 단위로 총 9개의 구간을 제시한 뒤 이에 응답하게 하였다. 교육 수준은 ‘중졸 이하,’ ‘고졸,’ ‘2년제 전문대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 ‘석사 졸업,’ ‘박사 졸업 이상’ 중 하나를 택하게 하였다.

34) 표집 당시 고려하지 않아 무작위적으로 배정이 이뤄지지 않은 교육 수준, 소득, 정치적 지향 (보수적 혹은 진보적), 직업을 통제하였다. 실험 전에 확인하였던 국제 규범 준수에 대한 압력을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국제비교지수의 정보 출처 또한 통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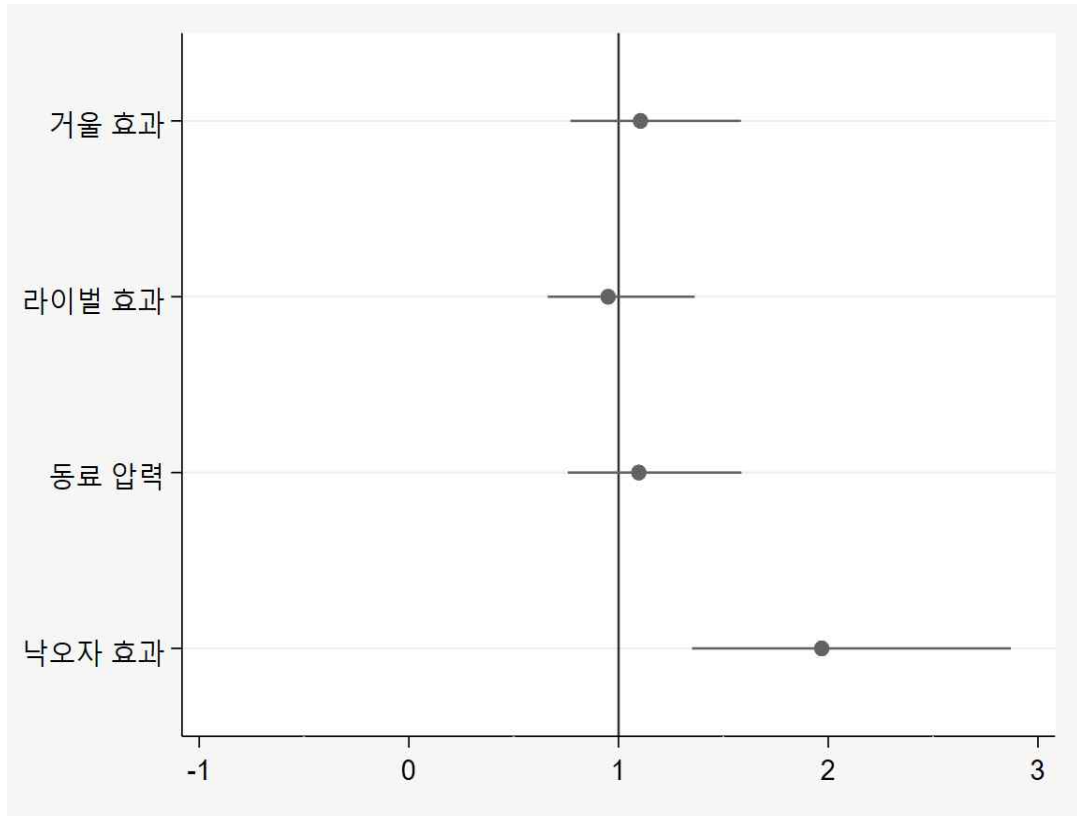
Note: 오즈비(odds ratio)를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표시하였다.

[그림 4-1]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 모델 :
한국이 기록한 국제비교지수가 생각보다 높은가, 혹은 낮은가?

낙오자 효과가 시각적 자극을 가하여 순위가 생각보다 낮다고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제비교지수가 정말로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생각보다 순위가 낮다고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으므로 시각적 자극이 곧 대중의 인식 변화로 이어진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처치 변수로 인해 국가의 규범 준수 수준을 더 혹은 덜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본 실험에서는 응답자들에게 세계기후변화대응지수로 미루어 보았



Note: 오즈비를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표시하였다.

[그림 4-2]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 모델 :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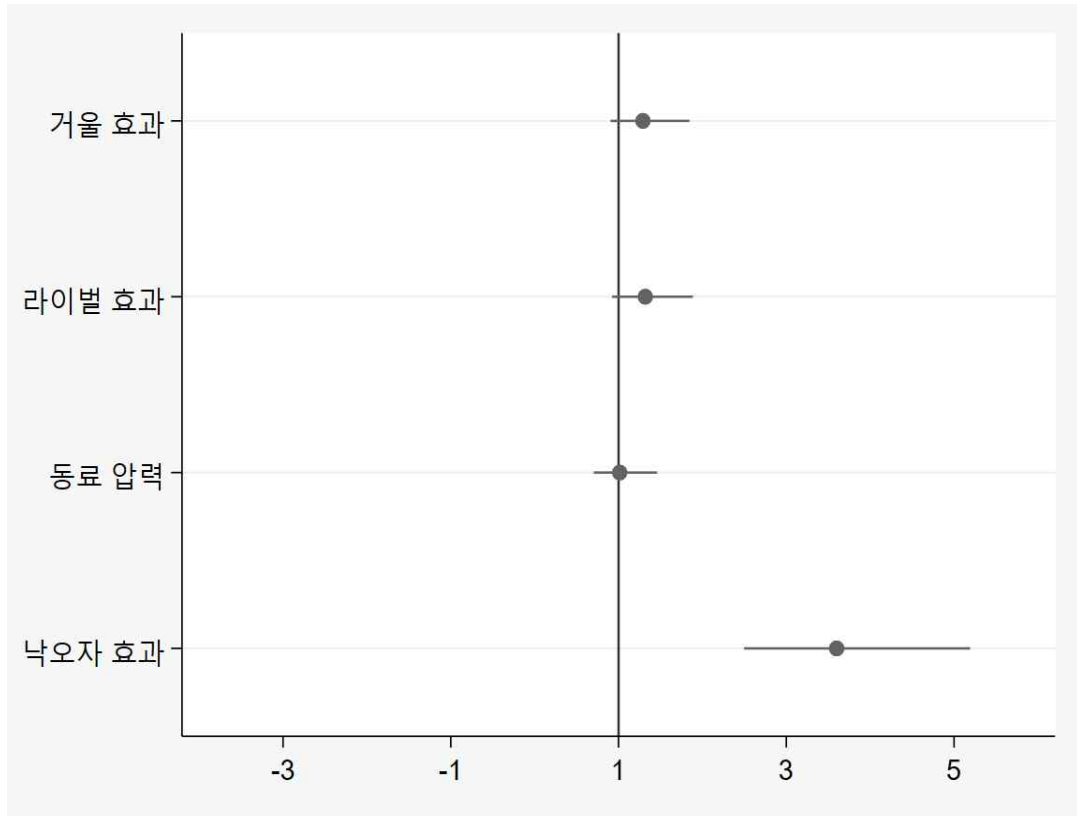
을 때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고 이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1. 전혀 심각하지 않다, 2. 별로 심각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심각하다, 5. 아주 심각하다) 이를 통해 한국이 비교의 준거점보다 낮은 성적을 기록했을 때 거울 효과, 라이벌 효과, 동료 압력, 그리고 낙오자 효과가 나타나 응답자들이 정책적 상황을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게 되는지 확인하였다.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로 분석한 결과는 [그림 4-2]와 같다. 거울 효과와 라이벌 효과, 그리고 동료 압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이는 비교의 준거점이 자기 자신의 목표, 라이벌 국가, 동료 집단으로

확대되어도 규범 미준수에 대한 심각성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비교의 준거점이 평가 대상이 되는 국가 전체로 확대 되었을 때 응답자들은 정책적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느꼈다. 즉, 낙오자 효과는 국가의 규범 준수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오자 효과가 통계적 유의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유의성까지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계 효과(marginal effect)를 분석하였다.³⁵⁾ 낙오자 효과에 노출되었을 때 응답자들이 ‘전혀 심각하지 않다’를 응답할 확률은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응답을 체크한 응답자들이 극히 적었던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다소 심각하다’를 응답할 확률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별로 심각하지 않다’를 응답할 확률이 약 1.6% 줄어들었고 ‘보통이다’를 응답할 확률은 약 8.5%가 감소하였다. ‘아주 심각하다’를 응답할 확률은 약 7.6%가 증가하였다. 이는 낙오자 효과가 실질적으로 유보적 태도를 취할 확률은 감소시키고 전반적인 여론은 정책적 상황을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다소 심각하다’를 응답할 확률은 그대로인 채 ‘보통이다’를 응답한 확률이 줄어드는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를 응답할 확률이 늘어나는데 이는 응답의 전반적인 분포 상 ‘봉우리’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전반적인 응답의 추세가 유보에서 다소 심각하기로 조금씩 이동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결과는 장애 인권 이슈를 실험에서도 강건하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그림 4-3]과 같은데 약속한 목표, 라이벌 국가, 동료 집단과의 비교는 사람들의 정책적 상황의 심각성 인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 전체와의 비교에서 정책적 상황의 심각성 인식에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이 하위권을 기록하였을 때에 사람들은 장애인권 정책의 수준을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였고 실질적 유의성은 기

35) 낙오자 효과와 이후 분석하는 각 처치들의 한계효과를 분석한 결과들은 모두 부록에 별도로 첨부하였다.



Note: 오즈비를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표시했으며 y축은 각 처치의 비교 준거점이다.

[그림 4-3]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 모델:
한국의 장애인권 정책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후 변화 이슈에서보다도 더 크게 나타났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를 응답할 확률은 0.4% 가량으로 아주 미세하게 줄었고 ‘다소 심각하다’를 응답할 확률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별로 심각하지 않다’를 응답할 확률은 3.6% 감소하였다. 무엇보다도 ‘보통이다’를 응답할 확률은 무려 약 16%가 감소하였으며 ‘아주 심각하다’를 응답할 확률은 약 19%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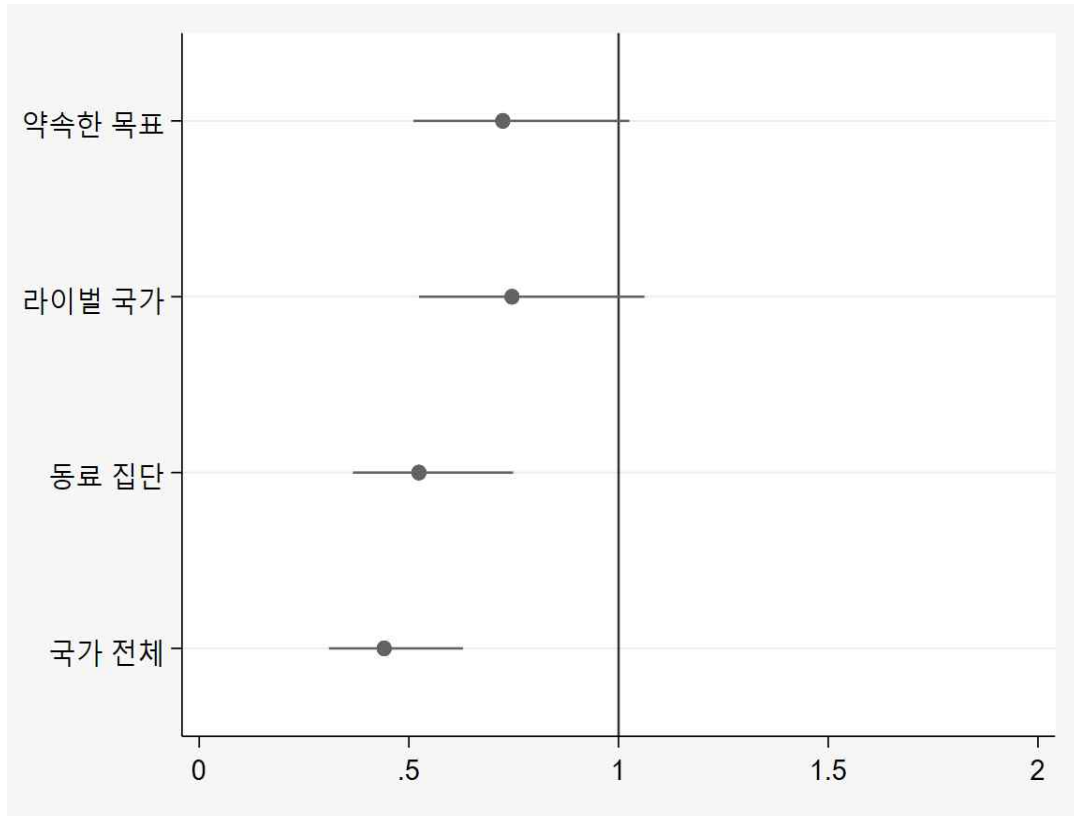
그렇다면 비교의 준거점들에 비해 한국이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을 때에도 대칭적으로 효과가 나타날까? 이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4-4]와 같다. 비교 대상을 국가 전체로 놓고 한국의 높은 순위를 언급하는 것만

으로 응답자들은 정책적 상황을 덜 심각하게 여겼다. 즉, 한국이 상위권을 기록하자 나오자 효과와는 대칭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한계 효과를 측정한 결과 한국이 상위권을 기록했을 때 ‘전혀 심각하지 않다’를 응답할 확률은 미미한 수준(0.2%)으로 늘었다. 그러나 ‘별로 심각하지 않다’를 응답할 확률은 5%가 증가하였으며 ‘보통이다’를 응답할 확률은 무려 13.4%가 증가하였다. ‘다소 심각하다’를 응답할 확률은 13%, ‘아주 심각하다’를 응답할 확률은 5.7% 감소하였다. 이는 한국이 상위권을 기록했을 때에는 원래라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유보적 입장을 가졌을 응답자들이 정책을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쪽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이 상위권을 기록했을 때의 효과는 이슈가 변화하여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며 실질적 유의성 또한 존재했다.³⁶⁾

OECD 국가들보다 순위가 높다고 말했을 때도 응답자들은 정책적 상황이 덜 심각하다고 느꼈다. 한계 효과를 측정한 결과 ‘전혀 심각하지 않다’를 응답할 확률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별로 심각하지 않다’를 응답할 확률은 3.7% 증가하였으며 ‘보통이다’를 응답할 확률은 11% 증가했다. 반면, ‘다소 심각하다’를 응답할 확률은 약 10%, ‘아주 심각하다’를 응답할 확률은 약 5% 감소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과들은 이슈가 변화하였을 때 강건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동료 집단과의 비교에서 한국의 우위가 가져다주는 효과는 기후변화 이슈에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다른 비교의 준거점들은 한국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때에도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았다. 일본보다 순위가 높을 때에 사람들은 한국의 정책적 상황이 덜 심각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또한, 약속한 목표를 달성하였다는 정보도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이 결과들은 장애 인권 이슈에서도 강건하게 나타났다.

이외에 본 연구에서 규범에 대한 태도, 연령, 성별, 교육 수준, 소

36) 한국이 더 나은 성적을 기록할 때에 대하여 장애 인권 이슈를 활용해 강건성을 실험한 결과는 부록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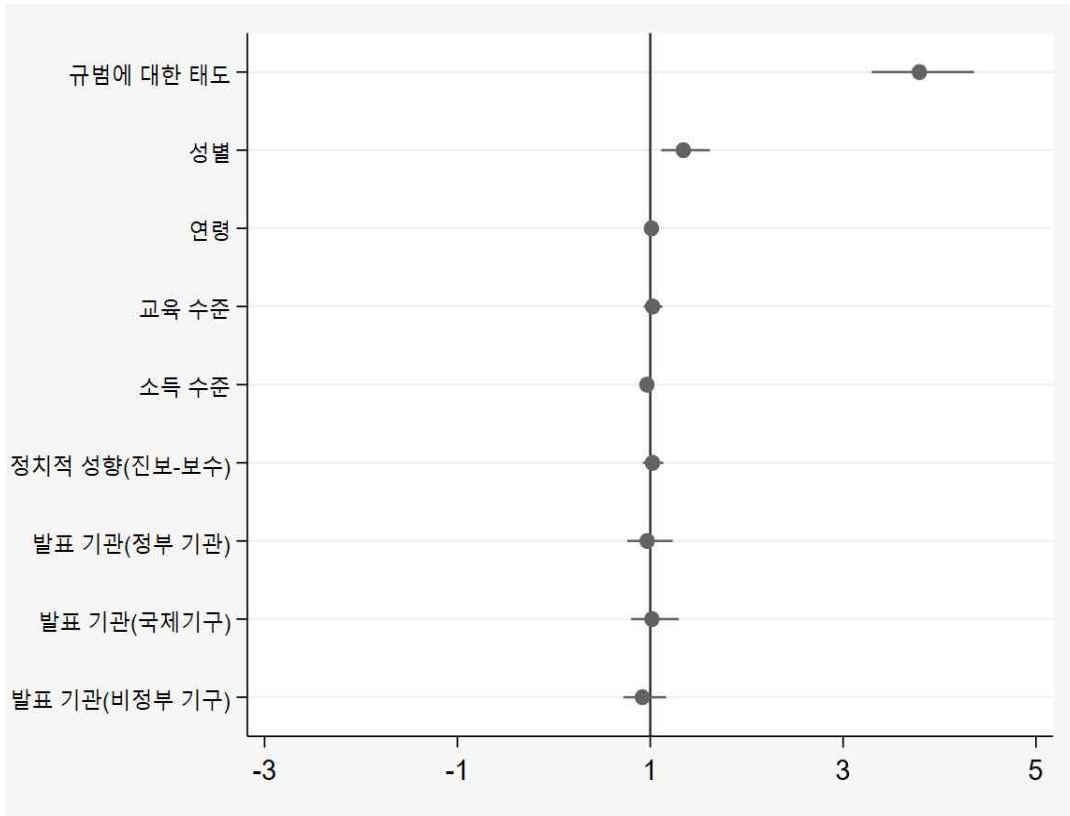


Note: 오즈비를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표시했으며 y축은 각 처치의 비교 준거점이다.

[그림 4-4]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델: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한국이 더 높은 순위 기록할 때)

득 수준, 국제비교지수 발표 기관 등이 정책적 심각성을 인식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았다. 기후변화 이슈를 바탕으로 한 실험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4-5], 장애인권을 바탕으로 수행한 실험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4-6]과 같다. 먼저, 두 실험에서 모두 교육 수준은 정책적 심각성을 인식하는 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표 기관이 정책적 심각성 인식에 미치는 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국제비교지수의 발표 기관을 타국의 정부 기관, 국제기구, 비정부 기구로 바꾸어 제시하여도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와 심각성 인식에 아무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



Note: 오즈비를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표시했다.

[그림 4-5] 기타 변수에 대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델: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러한 결과는 기후변화 이슈를 배경으로 한 실험과 장애인권 이슈를 배경으로 한 실험 모두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은 기후변화정책지수를 활용한 실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만들어냈다. 다만, 한계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미치는 실질적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를 기록할 확률은 0.002%가 감소하는 등 그 효과가 미미했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를 응답할 확률과 ‘보통이다’를 응답할 확률은 각각 0.05%, 0.19% 감소했다. ‘다소 심각하다’를 응답할 확률은 0.14% 증가했으며 ‘아주 심각하다’를 응답할 확률은 0.1% 증가했다.³⁷⁾ 게다가 연령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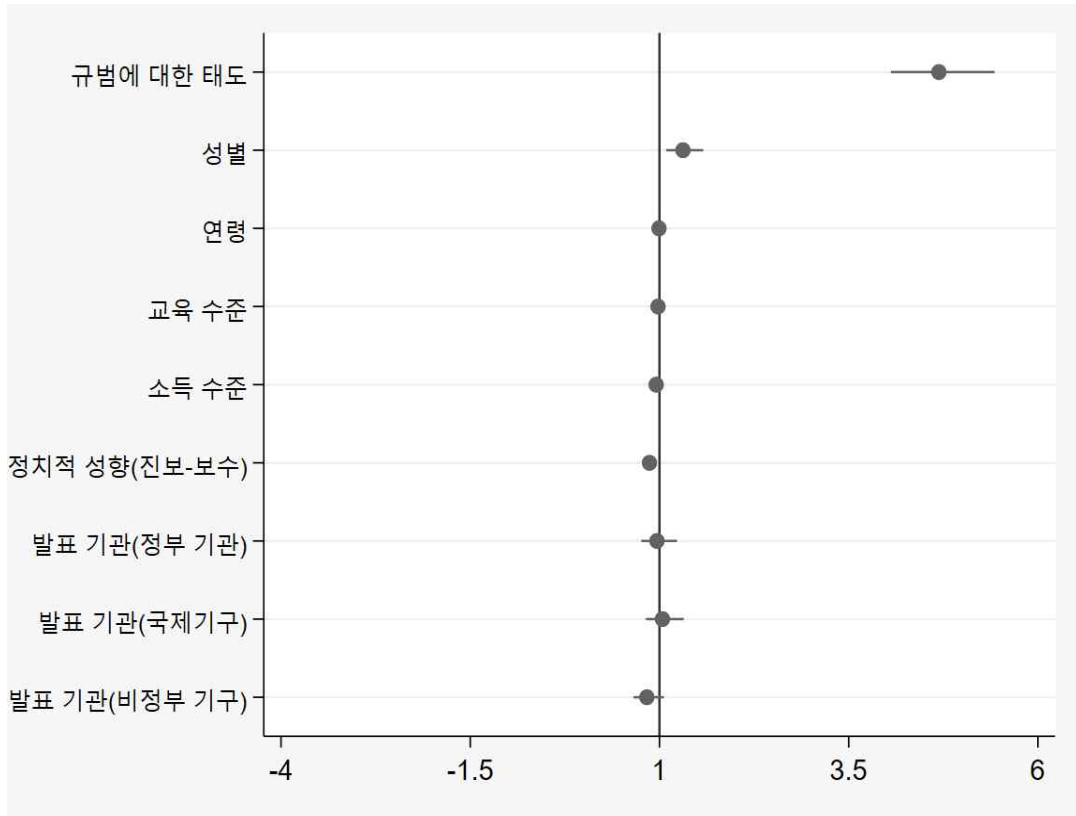
는 장애인권 이슈를 바탕으로 한 실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연령은 국제비교지수를 통해 정책적 심각성을 읽어냄에 있어 효과를 발휘하는 변수라고 볼 증거가 충분치가 않다.

반대로 장애 인권 이슈를 바탕으로 한 실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만들어낸 변수들이 있었다. 먼저 소득 수준의 경우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앞서의 연령 변수와 마찬가지로 실질적 변화의 크기는 작았다. 한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득 수준의 경우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를 응답할 확률은 0.001%, 그리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와 ‘보통이다’를 응답할 확률은 0.14%, 0.7% 증가하였다. ‘다소 심각하다’와 ‘아주 심각하다’를 응답할 확률은 각각 0.5%, 0.4% 감소하였다.³⁷⁾ 정치적 성향도 마찬가지로 진보에서 보수로 한 단위 이동할 때마다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 또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한계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혀 심각하지 않다’를 응답할 확률은 0.03%, ‘별로 심각하지 않다’를 응답할 확률은 0.5% 증가하였으며 ‘보통이다’를 응답할 확률은 2.3% 늘어났다. ‘다소 심각하다’를 응답할 확률은 1.5% 감소했고 ‘아주 심각하다’를 응답할 확률은 1.3% 감소했다.

한편, 성별은 정책적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다주는 변수였으며 이는 기후변화 이슈를 배경으로 한 실험과 장애인권 이슈를 배경으로 한 실험 모두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한계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 이슈를 배경으로 한 실험에서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 ‘전혀 심각하지 않다’를 응답할 확률이 0.5% 낮았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와 ‘보통이다’를 응답할 확률은 1.3%,

37) 이는 연령이 1단위, 즉 한 살 늘어날 때의 한계효과를 측정한 것이다.

38)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은 3000원 미만부터 1000만원 단위로 총 9개의 구간을 만들어 측정하였다. 한계 효과는 소득 구간이 한 단위 넘어갈 때마다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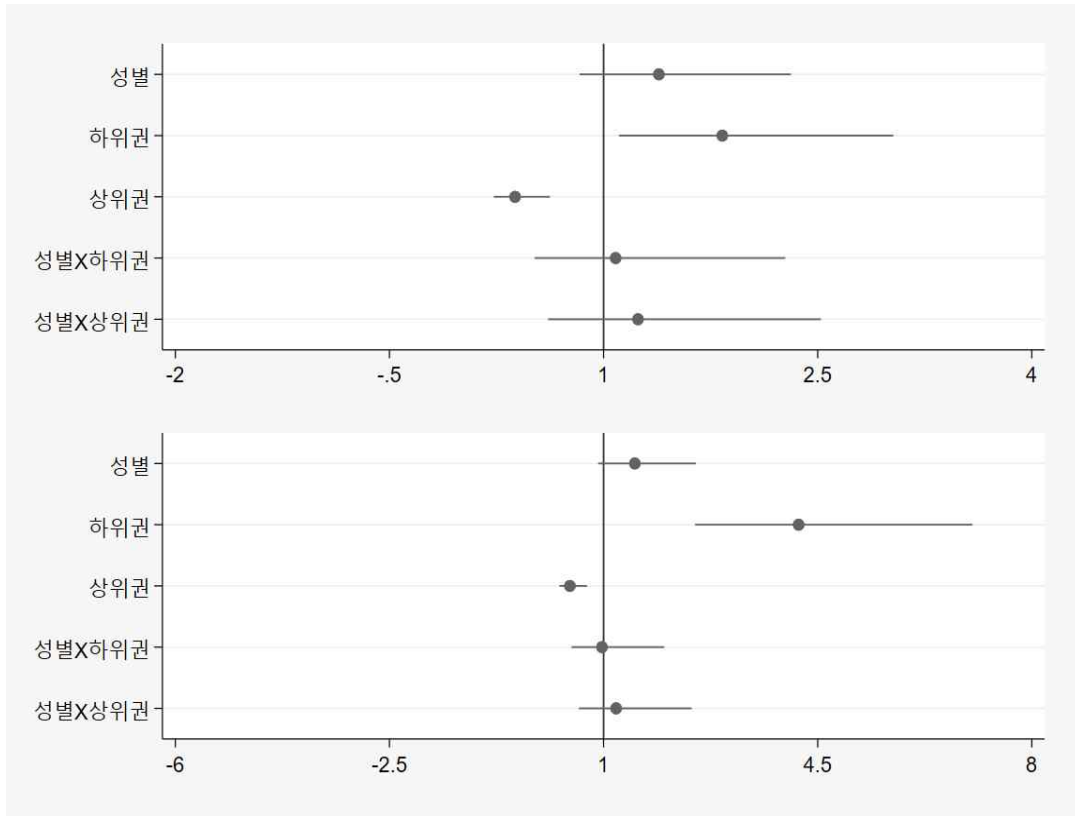


Note: 오즈비를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표시했다.

[그림 4-6] 기타 변수에 대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델:
한국의 장애 인권 정책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그리고 4.8% 더 낮았다. 반면, ‘다소 심각하다’와 ‘아주 심각하다’를 응답할 확률은 각각 3.7%, 2.4% 더 높았다. 장애인권 이슈를 배경으로 한 실험에서는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전혀 심각하지 않다’를 응답할 확률이 0.6%, ‘별로 심각하지 않다’와 ‘보통이다’를 응답할 확률이 각각 0.9%, 4.3% 더 적었으며 ‘다소 심각하다’와 ‘아주 심각하다’를 응답할 확률은 2.8%, 그리고 2.4% 더 컸다.

위의 변수들과 달리 규범에 대한 태도는 두 실험에서 모두 심각성의 인식에 있어 현저한 변화를 만들어냈다. 한계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 이슈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전혀 심각하지 않다’를 응답할 확



Note: 오즈비를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표시했다. 위의 그래프는 기후변화 이슈를 바탕으로 한 실험 결과를, 아래의 그래프는 장애인권 이슈를 바탕으로 한 실험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그림 4-7] 성별과 처치 변수의 상호작용: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국가 전체가 비교의 준거점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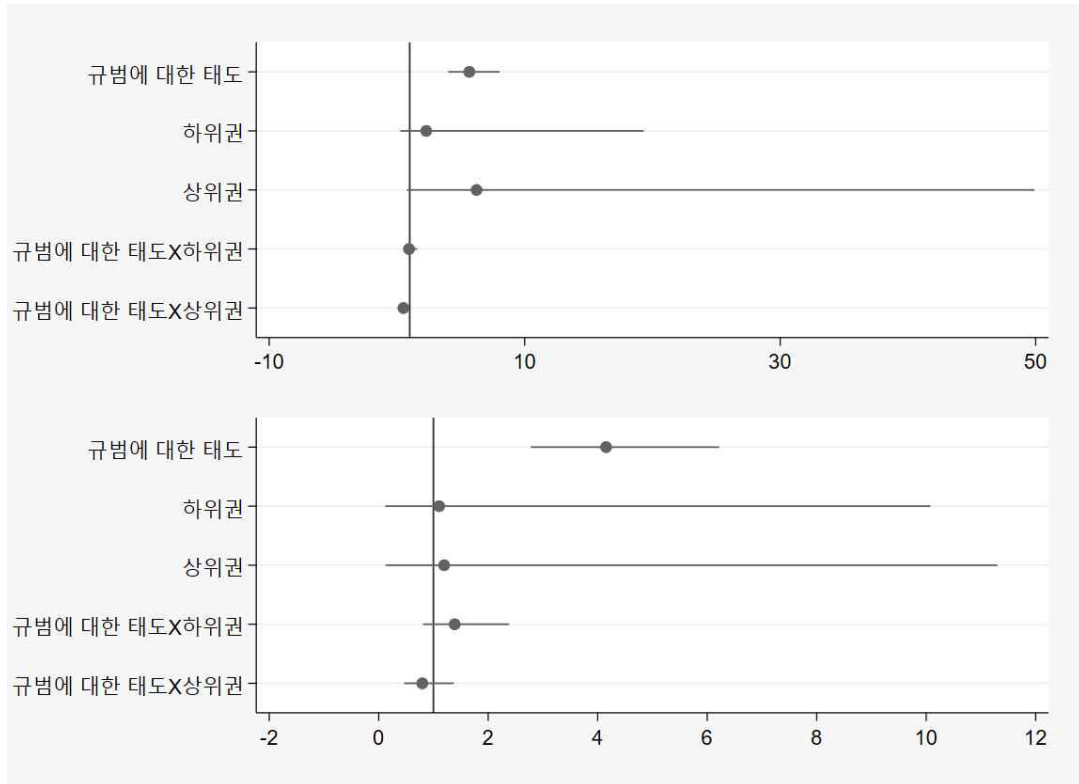
률은 0.2%, ‘별로 심각하지 않다’ 를 응답할 확률은 5.9%가 감소했고 ‘보통이다’ 를 응답할 확률은 무려 22%가 감소했다. ‘다소 심각하다’ 를 응답할 확률과 ‘아주 심각하다’ 를 응답할 확률은 각각 17%, 11%씩 증가하였다. 장애인권 이슈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전혀 심각하지 않다’ 를 응답할 확률이 0.3%, ‘별로 심각하지 않다’ 를 응답할 확률이 5% 감소하였고 ‘보통이다’ 를 응답할 확률은 25%가 감소했다. ‘다소 심각하다’ 를 응답할 확률은 16%, ‘아주 심각하다’ 를 응답할 확률은 14%가 증가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국제비교지수를 통해 정책적 상황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응답자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규범에

대한 태도가 비교의 준거점만큼이나 주요한 변수로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³⁹⁾

실험에서 찾아낸 가장 핵심적인 준거점은 국가 전체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처치 변수가 성별 변수나 국제 규범에 대한 태도 변수와 결합했을 때 상호작용이 발생하는지 확인하였다. 먼저, 성별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바는 [그림 4-7]과 같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상호작용항의 통계적 유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즉, 본 논문에서 찾아낸 주요한 비교의 준거점이 가져다주는 효과의 크기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다. 국제 규범에 대한 태도와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그림 4-8]과 같은데, 여기서도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성별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규범에 대한 태도에 따라 비교의 준거점이 만들어내는 효과의 크기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종합적으로 볼 때 앞서 확인한 성별 변수와 규범에 대한 태도 변수는 비교의 준거점과 맞물려 정책적 상황의 심각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일반 대중들 전반적인 수준에서 효과를 발휘한다.

본 실험에서 우려될 수 있는 지점 하나는 처치 정보의 신뢰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제시된 처치 정보에서 제시한 내용이 한국을 지나치게 고평가, 혹은 저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할 경우 응답자들은 신뢰성이 낮은 정보라고 판단하거나 아예 가상의 거짓 정보라는 점을 알아차릴 수도 있다. 예컨대, 낙오자 효과를 검증하는 정보인 하위 25%의 순위(89위)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지나치게 괴리가 큰데, 이러한 괴리가 정보의 신뢰성을 감소시킬 경우 실험적 조건의 현실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실험에서 제시한 정보를 응답자들이 비현실적이라고 여길 경우 무작위적으로 응답을 체크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처치군에 제시한 정

39) 이는 앞서 확인한 정치적 성향이 그다지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한 것과 비교할 만하다. 많은 경우 정치적 성향, 그리고 국제 규범에 대한 태도나 규범적 의제에 대한 태도는 상관관계를 가진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국제비교지수의 메커니즘에서 두 변수가 별개로 움직이며 지수의 효과가 이념적 성향에 민감하기보다 규범에 대한 태도에 민감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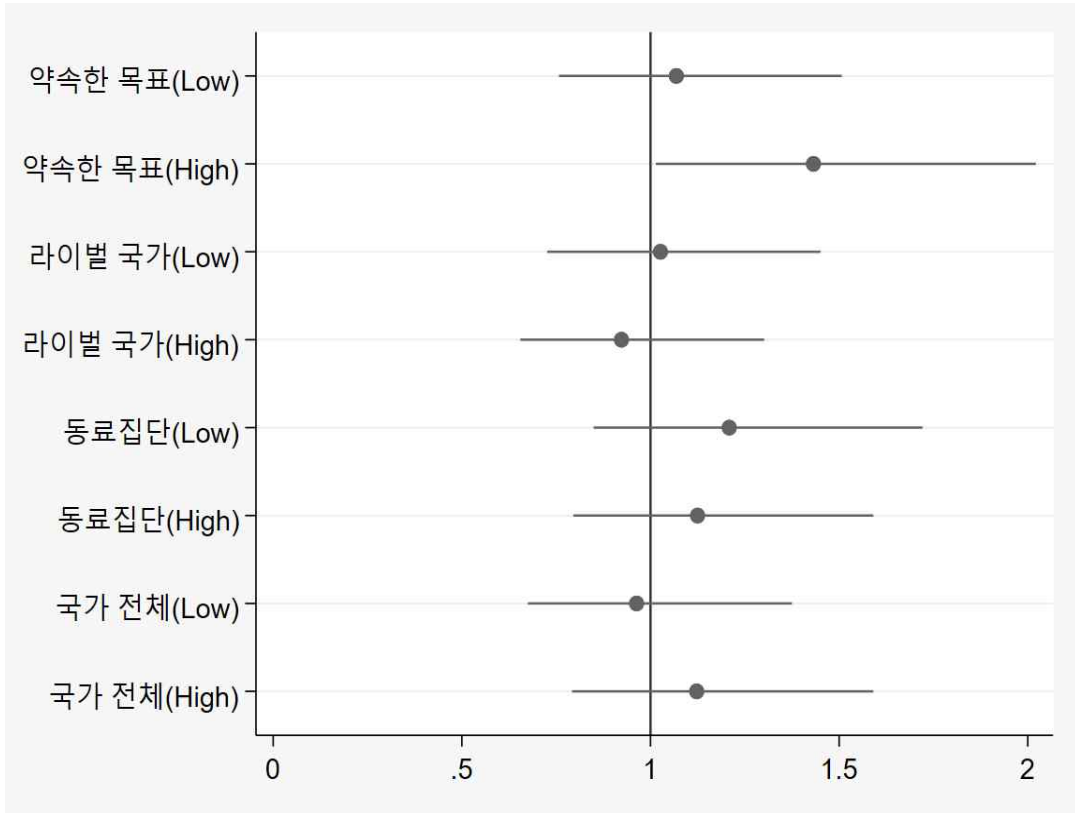


Note: 오즈비를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표시했다. 위의 그래프는 기후변화 이슈를 바탕으로 한 실험 결과를, 아래의 그래프는 장애인권 이슈를 바탕으로 한 실험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그래프 중간 세로로 그려진 실선은 1을 표시한 것이며 두 모형에서 오즈비의 신뢰구간이 지나치게 넓어 가독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중심축을 편향시켜 표시하였다.

[그림 4-8] 국제 규범에 대한 태도와 처치 변수의 상호작용:
국가 전체가 비교의 준거점일 때

보가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면 통제군과 처치군에 제시한 정보의 신뢰성에 차이가 생겨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⁴⁰⁾

40) 물론, 정보의 신뢰성 감소가 국제비교지수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또 다른 효과이거나 비교의 준거점이 대중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세부적인 메커니즘 중 하나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본 실험에서 처치 효과에 의해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감소한다면 조작에 의한 오류와 국제비교지수의 효과를 뚜렷하게 분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을 다소 유보할 수밖에 없다.



Note: 오즈비를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표시했으며 y축은 각 처치의 비교 준거점이다. 비교의 준거점보다 낮은 경우는 '(Low)', 비교의 준거점보다 높은 경우는 '(High)' 와 함께 표기하였다.

[그림 4-9]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델:
기사에서 제시한 기후변화정책지수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

위를 확인하기 위해 본 실험에서는 응답자들에게 기사에서 제시한 지수들이 얼마나 신뢰 가능한지 물었다.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기록되었다. (1. 전혀 신뢰할 수 없다, 2. 별로 신뢰할 수 없다, 3. 보통이다, 4. 다소 신뢰할 만하다, 5. 매우 신뢰할 만하다.) 이를 분석한 바는 아래의 [그림 4-9]와 같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통제군과 처치군에 배치된 응답자들이 정보의 신뢰성을 다르게 평가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외로 약속한 목표를 지켰다는 정보를 순위와 함께 제시한 경우 정보의 신뢰성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해당 처치는 신뢰도를 감소시키기보다 오히려 응답자들로 하여금 제시문에 제시된 지수를 오히려 조금

더 신뢰 가능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으며, 무엇보다도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해당 처치를 통해 조작화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⁴¹⁾

실험 결과를 정리한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비교지수 정보에서 국가의 공개된 약속을 강조하며 이와 비교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식을 크게 바꾸지 못했다. 공개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와 약속을 지켰을 때 모두 사람들이 정책적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는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하지 않았다. 둘째, 라이벌 국가와의 비교 또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에 전혀 효과가 없었다. 라이벌 국가보다 더 높은 성적을 기록한 경우와 더 낮은 성적을 기록한 경우 모두 사람들이 정책적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정도는 변화하지 않았다. 공개된 약속과의 비교, 그리고 라이벌과의 비교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결과는 기후변화 이슈와 장애인권 이슈 모두에서 똑같이 나타났다. 셋째, 동료 집단과의 비교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었으나 이는 기후변화 이슈에 한정해서 나타났으며 국제비교지수가 의도한 바대로 규범을 더욱 준수하게 만들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동료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동료 집단을 앞질렀을 때에 더 ‘안도’ 했다. 마지막으로 평가 대상이 되는 국가 전체와의 비교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었다. 국가들 전체에 비해 성적이 낮을 때에는 사람들이 정책적 상황을 더 심각하게 여겼다. 반대로 국가들 전체에 비해 성적이 좋을 때에는 사람들이 정책적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는 정도가 덜했다. 이 같은 대칭적 효과는 두 이슈에 걸쳐서 강건하게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주목한 비교의 준거점 이외에 연령, 소득 수준, 교육

41) 이와 함께 장애 인권 이슈에 대해서도 같은 분석을 진행하였다. 응답자들에게 제공한 질문은 기후변화 이슈에서와 같았고(위 기사에서 제시한 장애인권 지수가 얼마나 신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또한 리커트 척도로 기록되었다. 분석 결과는 부록에 첨부한 바와 같다. 장애 인권 이슈에서 정보의 신뢰성의 변화가 일어나긴 했으나 처치에 제공한 정보가 덜 신뢰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증거는 찾을 수가 없었다. 이는 이슈의 변화에 따른 강건성을 분석한 실험에서도 현실감의 기여는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준 정치적 성향 등의 변수에 의해 정책적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크기는 미미하였다. 그리고 정책적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도는 발표 기관이 정부 기관, 국제 기구, 비정부 기구로 변화하여도 발표 기관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았을 때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에 반해 두 실험에서 모두 성별에 따라 정책적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비교의 준거점 이외의 변수 중 두 이슈에 걸쳐 강건하게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변수는 개별 응답자가 사전에 가지고 있던 규범에 대한 태도였다. 규범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주어진 실험적 조건에서 제시한 정보를 접한 뒤 정책적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컸다. 하지만 성별 변수와 규범에 대한 태도 변수는 본 논문에서 찾은 주요한 비교의 준거점인 국가 전체와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작동하지는 않았다.

제 5 장 결론 및 함의

국제비교지수는 국제정치의 고전적 난제인 준수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광받는다. 국제 규범을 강제할 수 있는 권위체가 부재한 가운데 단순한 수치만으로 국가의 규범 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국제정치학에서 국제비교지수가 가진 지수 권력에 주목했던 여러 연구들이 지수들이 실제로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확인해왔다. 그리고 이들은 국제비교지수가 국제 사회의 사회적 압력을 불러일으키고 각국의 정치 엘리트로 하여금 자국의 위신과 지위를 의식하게 하여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킨다고 논의해왔다.

국제비교지수가 가진 힘과 메커니즘이 대략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비교지수가 언제, 어떻게 국가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싸인 부분이 많다. 특히, 국제비교지수가 국내 정책 형성 과정에서 발휘할 수 있는 힘은 비교적 적게 논의되어왔으며 정치 엘리트에 정책적 요구를 할 수 있는 일반 대중의 인식은 더더욱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본 논문은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실험을 실시하여 어떤 종류의 비교가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탐구하였다. 비교의 준거점이 자국의 목표, 라이벌 국가, 동료 집단, 그리고 국가 전체로 변화할 때 국제비교지수를 접한 대중들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대중들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비교의 기준은 국가 전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전체와 비교하여 상위권을 기록했을 때와 하위권을 기록했을 때 모두 대중들이 정책적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여러 이슈에 걸쳐서 강건하게 나타났다. 국제비교지수에서 동료 집단과의 비교는 사람들의 인식을 크게 바꾸지 못했다. 다만, 기후변화 이슈에 한정하여 동료 집단보다 자국이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하였을 때 사람들은 정책적 상황을 덜 심각하게 여겼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자국의 목표나 라이벌 국가를 핵심적인 비교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두 비교의 기준점은 모든 이슈에 걸쳐 효과가 없

거나 그 효과가 극히 미미했다. 자국이 공개적으로 약속한 목표를 달성하거나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라이벌 국가보다 성적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 모두 대중들의 정책적 상황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 이외의 변수 중 성별, 그리고 응답자들이 규범에 대한 태도가 정책적 상황의 심각성 인식에 영향을 주었지만 해당 변수들은 본 논문에서 확인한 주요한 처치 변수와 상호작용 효과를 일으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실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우선, 대중들의 인식을 바꾸지 못하는 비교의 준거점들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본 실험이 오직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비교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앞서 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전까지 국제정치학에서는 국가들이 패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패배의 경험이 국가 내 행위자들의 모종의 수치심까지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동아시아의 지역적 맥락에서 한국과 일본은 현실에서나 국제정치학적으로 유명한 라이벌 관계였고 어쨌든 일본에 패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추격에 몰두하는 모습은 한국에 대한 일반적인, 혹은 상식적인 이미지에 가까웠다(Lim and Tanaka, 2022). 실제로도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는 레토릭은 스포츠 경기부터 정책적 성과까지 여러 영역에 걸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미사여구였다.⁴²⁾ 그러나 본 실험에서 한국인들은 일본과의 비교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일본보다 앞선 성과를 거둬도 한국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일본보다 못한 성적을 내도 한국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이는 적어도 국제비교지수에서, 더 넓게는 규범의 준수 측면에서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인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론적 차원에서 실험이 실시된 시기의 특수성은 라이벌 효과가 국제비교지수의 메커니즘에서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더욱 강력하게 드러낸다. 실험이 실시되었던 문재인 정권 시기 한국은 일본과

42) 실제로 한국의 각종 미디어에서 한국이 기록한 특정한 지수나 점수, 등수 등을 일본과 비교하는 미디어의 보도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다방면에서 부딪히고 있었다.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판결부터 시작된 갈등이 한일 무역 분쟁,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종료 선언까지 이어지는 등 한국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과거사 문제가 경제, 안보의 영역까지 번지면서 양국 간의 관계가 총체적으로 악화되었다.⁴³⁾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한국의 일반 대중들이 일본에 가지는 감정까지 악화시키기도 하였다.⁴⁴⁾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실험에서 대중들이 일본을 비교의 준거점으로 삼은 처치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라이벌 효과가 국제비교지수에서 가지는 의미가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거울효과가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국제비교지수를 접한 일반 대중들이 정책에 대한 자기 교정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국제규범지수에서 자국이 설정한 목표와 정책적 상황 사이의 간극은 일반 대중들에게 자극을 주지 못한다. 다만, 이것이 자국의 목표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국제 규범에서의 목표라서 나타나는 현상인지는 분명하지 않음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자국이 공개적으로 내세운 약속을 일반 대중들이 주요한 비교의 준거점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은 조금 더 깊은 이론적 함의를 시사한다. 국제정치학자들은 일반 대중들 또한 자국의 위신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정치 엘리트가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내세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후폭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왔다(Tomz, 2007; Brutger and Kertzer, 2018; Tingley and Tomz, 2020). 이렇게 대중들이 위신과 약속에 대해 느끼는 민감성을 전제로 청중 비용이나 국제 협력에 대한 여론의 태도 등이 더욱 활발하게 주목받기도 하였다.⁴⁵⁾ 그러나 본 논문에서 국제비교지수를 활용하여 실

43) 한일 갈등이 악화되었던 과정은 Vekasi(2022) 참고.

44) 손열, “여론조사로 보는 위기의 한일관계: 국민은 변화를 원한다,” 『EAI 이슈브리핑』, 2020, pp. 1-15.

45) 예컨대, 위신과 약속, 그리고 청중 비용을 살펴본 대표적인 연구로 Levy의

시한 실험에서는 정치 엘리트들이 공개적으로 한 약속이 항상 대중들의 고려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는 공개적 약속이 여론에 미치는 힘이 지금까지 과대평가되지 않았는지, 혹은 공개적 약속이 여론에 미칠 수 있는 힘이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조건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성을 제기한다.⁴⁶⁾

보다 핵심적으로 본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은 국제비교지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던진다. 첫째, 수치화된 위신과 지위가 대중들에게 주는 시각적 직관은 강력하다. 앞서 언급하였듯 국제 규범의 영역에서 위신은 상당히 불확실한 개념이며 개별 국가의 위신은 오로지 관찰된 몇 가지 행동으로 추론된 것에 불과하다. 즉, 국가들의 입장에서 타국의 위신은 ‘안개 속에서’ 추측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 자신조차 자신의 행동으로 정말로 위신이 하락할지, 그리고 하락한다면 얼마나 하락할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러나 국제비교지수는 규범 준수 수준이 불량한 국가가 전체 국가들에 비해서 얼마나 뒤떨어지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부여하며 행위자들은 단 하나의 숫자를 읽는 것만으로 자국이 상위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평범하거나 그 이하의 수준인지 알 수 있다. 국제비교지수는 자국의 공개된 목표나 라이벌 국가, 혹은 동료 집단과의 세세한 비교보다 더 짧고 간단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훨씬 더 큰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비교지수가 가지는 한계 또한 명확하다. 실험에서 확인하였듯이 대중들의 인식이 변화하는 것은 자국이 비교 대상에 비해 나쁜 성적을 기록했을 때만은 아니었다. 일부 이슈에서는 동료 집단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정책적 상황을 훨씬 덜

3인(Levy et al., 2015)나 리와 천(Li and Chen, 2021) 참고. 국제 협력에 대한 여론의 태도에 주목한 연구로는 밀너와 텅글리(Milner and Tingley, 2013) 참고.

46) 공개적인 약속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 선행 연구들이 본 논문의 연구와 달리 대부분 미국적 맥락에서 연구되어왔다는 점 또한 고려해볼 만하다. 일반 대중이 자국 엘리트가 한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국가로서의 위신이 아닌 패권국으로서의 위신을 유지하기 위한 판단이 아닌지 후속 연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심각하게 여겼다. 무엇보다도 성적이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올라갈수록, 그리고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정책적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정도는 점점 떨어졌다. 이러한 지점은 국제비교지수가 규범 준수 수준이 심각하거나 평범한 국가들의 대중들로 하여금 정책적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이미 규범에 맞게 활발하게 정책을 펴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대중들이 오히려 안주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즉, 국제비교지수는 규범 준수 수준이 심각한 국가들의 대중들을 자극하는데에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주마가편(走馬加鞭)을 할 수는 없다. 또한, 국가들의 준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국제 규범의 경우 국제 비교지수만으로는 국내적 압력을 한꺼번에 일으켜 규범 자체에 생명력을 불려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대중들 또한 국제비교지수에 의해서 인식이 바뀔 수 있는 ‘관객’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준수의 문제에 주목하였던 연구들은 여론에 비교적 적은 관심을 보였다. 국제비교지수의 메커니즘에 주목하였던 연구들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실제로도 국제비교지수는 규범 미준수 국가의 일반 대중을 겨냥하기보다 정치 엘리트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혹은 여타의 국내 행위자들을 동원해낼 수 있는 정치적 집단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일반 대중들 또한 국제비교지수의 의도치 않은 ‘관객’이 될 수 있으며 국제비교지수 정보를 접했을 때 정책적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 대중의 미시적 메커니즘은 실천적 측면에서 국제비교지수를 발표하는 기관들에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준다.

앞서 언급했듯 본 논문에서는 비교의 준거점만큼이나 국제 규범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주요한 변수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즉, 국제 규범에 대한 태도가 더 우호적일수록, 혹은 적극적일수록 국제비교지수를 접한 뒤 정책적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이는 국제비교지수가 일반 대중들 전체에 일관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기존에 국가 내에 존재하는 규범의 지지자들을 자극하여 국내정치적 압력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비교의 준거점뿐만 아니라 대중의 휴리스틱(heuristic)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주목해야 한다.⁴⁷⁾ 국제비교지수를 접한 대중들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수치적 데이터만 보고 자국의 정책적 상황을 유추한다. 이에 따라 규범 준수 수준에 대해 깊은 사고를 거쳐 추론하기보다 소수의 정보만을 가지고 생각의 지름길을 만들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비교의 준거점은 국제비교지수를 해석함에 있어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준이지만 휴리스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이외에도 다양하다. 예컨대 국제비교지수에 대한 정치 엘리트들의 신호(cue)나 감정 등 수많은 요소들이 국제비교지수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⁴⁸⁾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에 주목하여 국제비교지수 해석의 미시적 메커니즘을 더욱 체계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후속 연구에서는 본 논문에서 확인한 이슈 이외에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국제비교지수의 효과를 확인해볼 수 있다. 본 논문의 실험에서 핵심이 되었던 기후변화 이슈는 국제 규범 연구에서 다루는 가장 주요한 의제 중 하나이다. 또한, 일반 대중의 여론이 정치 엘리트에 대한 압력으로 이어져 정책 변화로 귀결되는 일련의 과정은 주로 제도적 민주주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갖춰진 중진국, 혹은 선진국에서 나타날 여지가 큰데 기후변화 이슈는 해당 국가들이 국제정치에서 직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의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확인한 국제비교지수의 효과가 얼마나 외적 타당성을 지니는지, 그리고 국제비교지수의 의제 의존성(issue dependency)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이슈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언론의 자유 등과 같이 민주주의가 잘 갖춰진 선진국의 입장에서 이미 당연시 되고 있었던 이슈나 실험 대상이 되는 국가 내에서 당파성에 따라 의

47) 휴리스틱 판단에 대해서는 카네만 외 2인(Kahneman et al., 1982) 참고.

48) 엘리트들의 신호가 휴리스틱 해석에 미치는 영향은 가일스와 무라카와(Giles and Murakawa, 2002), 감정이 휴리스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덴하우젠(Bodenhausen, 1993) 참고.

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이슈들이 국제비교지수의 평가로 제시될 때 대중들의 인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분석한다면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셋째, 국제비교지수 정보를 접한 대중들이 실제로 언제, 어떻게 정치 엘리트의 정책적 요구를 하게 되는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 국제비교지수가 시각적으로 직관적인 수치로서 평가 대상이 되는 국가 전체와의 비교로 대중들의 인식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찾아냈다. 그런데 이러한 미시적 메커니즘은 국내에서 나타나는 긴 정책 변화 과정 중 한 부분을 포착한 것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국내 정치적 맥락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국제비교지수를 통해 정책적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대중들이 실제로 엘리트와 상호작용하며 정책적 요구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인식 변화, 정책적 요구, 엘리트의 수용까지 이어지는 기다란 사슬을 잇기 위해서는 국제비교지수를 접한 대중들이 엘리트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며, 혹은 보상과 처벌을 가해 엘리트들의 보상체계(pay-off structure)에 영향을 주어 더 높은 수준의 규범 준수를 요구하게 되는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Bodenhausen, Galen V., 1993, “Emotions, Arousal, and Stereotypic Judgments: A Heuristic Model of Affect and Stereotyping,” in Diane Mackie and David Hamilton (eds.), *Affect, cognition and stereotyping*, California: Academic Press.
- Bull, Hedley, 2002, *The Anarchial Society: A Study of Order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Davis, Kevin E., Benedict Kingsbury, and Sally Engle Marry, 2015, “Introduction: The Local-Global Life of Indicators: Law, Power, and Resistance,” in Sally Engle Marry, Kevin E. Davis, and Bednedict Kingsbury (eds.), *The Quiet Power of Indicators: Measuring Governance, Corruption, and Rule of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ng, Yong, 2008, *China’s Struggle for Status: The realign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iehl, Paul and Gary Goertz, 2001, *War and Peace in International Rivalr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Fiske, Susan and Shelley Taylor, 1991, *Social Cognition*, New York: McGraw-Hill.
- Friman, Richard H., 2015, “Introduction: Unpacking the Mobilization of Shame,” in Richard H. Friman (eds.), *The Politics of Leverage in International Relations*,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Goldsmith, Jack L. and Eric A. Posner, 2005, *The Limits of International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ahneman, Daniel, Paul Slovic, and Amos Tversky, 1982, *Judgment Under Uncertain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ck, Margaret E. and Kathryn Sikkink, 1998, *Activists beyond borders: Advocacy networks in international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Keohane, Robert O., 2005,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 2020,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tate Power: Essay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bingdon: Routledge.
- Kite, Mary E. and Bernard E. Whitley Jr., 2016, *Psychology of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3rd edition*, New York: Routledge.
- Kollman, Ken, 1998, *Outside Lobbying: Public Opinion and Interest Group Strateg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rebs, David M., 1990, “Corporate Culture and Economic Theory,” in James E. Alt and Kenneth A. Shepsle (eds.), *Perspectives on Positive Political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ke, David A., 2002, “The Stat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Christian Reus-Smit and Duncan Snidal (eds.), *The Oxford Handbook of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 2011, *Hierarch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Lee, Melissa M. and Alia M. Matanock, 2020, “Third-party Policy Makers and the Limits of the Influence of Indicators,” in Judith G. Kelley and Beth Simmons (eds.), *The Power of Global Performance Indicato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nza, Jeff, Fay Lomax Cook, and Benjamin I. Page, 2002, *Navigating Public Opinion: Polls, Policy, and the Future of American Democra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earsheimer, John J., 2017, “The False Promis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 John Kirton (eds.), *International Organization*, New York: Routledge.
- Mercer, Jonathan, 1996, *Reputation and International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Miller, Gregory D., 2012, *The Shadow of the Past: Reputation and military alliances before the First World War*,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Plehwe, Dieter, 2021, “The Development of Neoliberal Measures of Competitiveness,” in Daniela Russ and James Stafford (eds.), *Competition in World Politics: Knowledge, Strategies and Institutions*, Wetzlar: Majuskel Medienproduktion GmbH.

- Ringel, Leopold, Wendy Nelson Espeland, Michael Sauder, and Tobias Werron, 2021, "Worlds of Rankings," in Leopold Ringel, Wendy Nelson Espeland, Michael Sauder, and Tobias Werron (eds.), *Sociology of Organizations 74: World of Rankings*, Bingley: Emerald.
- Rosen, Stephan Peter, 2005, *War and Human Natu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rtori, Anne E., 2005, *Deterrence by Diplom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elling, Thomas, 1966, *Arms and Influe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Simmons, Beth A., 2009, *Mobilizing for Human Righ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 2012, "International Law," in Beth A. Simmons, Walter Carlsnaces, and Thomas Risse (eds.), *Handbook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ousand Oaks, California : Sage.
- Soroka, Stuart N. and Christopher Wlezien, 2010, *Degrees of Democracy: Politics, Public Opinion, and Poli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esser, Abraham, 1988, "Toward a Self-evaluation Maintenance Model of Social Behavior," in Leonard Berkowitz (ed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California: Academic Press.
- Thompson, Alexander S., 2013, "Coercive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Law," in Mark Pollak and Jeffrey L. Dunoff (eds.),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uex, Rory, 2016, *Making autocracy work: Representation and responsiveness in moder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ekasi, Kristin, 2022, "20. Trade wars at the intersection of memory and industrial policy in Japan and South Korea.," in Zeng, Ka, and Wei Liang (eds.), *Research Handbook on Trade Wars*, Massachusetts: Edward Elgar Publishing.
- Weber, Max, 1968,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New York: Bedminster Press.

Zaller, John R., 1992, *The Nature and Origins of Mass Opin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Zimmern, Alfred, 1936, *The League of Nations and The Rule of Law 1918-1935*, London: Macmillan.

2. 학술지

강혜자, 2016, “사회비교와 자기비교의 두 과정에 대한 분석,”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3.

김성애, 이종혁, 2011, “뉴스 프레임과 수용자 스키마 일치가 프레이밍 효과에 미치는 영향: 남북한 대학생 비교분석,” 『한국언론학보』 55-2.

남궁곤, 조동준, 2010, “국제규범의 국내확산경로: 대인지뢰금지규범의 국회내 유입과 발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4-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충격적인 PISA 결과 이후 헝가리의 교육 정책 논쟁”, 『EMERiCs 이슈분석』 2017-14.

박동준, 2021, “평판에 대한 고려가 분쟁시 위기결정에 미치는 영향: 1950년대 제1-2차 양안분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24-3.

이화순, 박인조, 2019, “국가정체성과 라이벌리: 아부다비와 카타르를 중심으로,” 『중동연구』 37-3.

장윤재, 김옥태, 김성겸, 2012, “사회적 압력에 따른 유선전화와 이동전화 조사의 응답 차이: 매체 이용 및 정치적 태도에 관한 질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3-3.

조동준, 2011, “정치 환경의 변화와 대인지뢰금지규범의 확산: 대인지뢰에 대한 의제화(framing)와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12-1.

Abbott, Kenneth W., Robert O. Keohane, Andrew Moravcsik, Anne-Marie Slaughter, and Duncan Snidal, 2003, “The Concept of Legaliz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4, No. 3 (July).

Aggarwal, Pankaj and Ann L. McGill, 2007, “Is That Car Smiling at Me? Schema Congruity as a Basis for Evaluating Anthropomorphized Produc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34, No. 4 (December).

Akobeng, Anthony K., 2016, “Understanding Type I and Type II Errors,

- Statistical Power and Sample Size,” *Acta Paediatrica*, Vol. 105, no. 6 (March).
- Ausderan, Jacob, 2014, “How Naming and Shaming Affects Human Rights Perceptions in the Shamed Country,”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51, No. 1 (January).
- Barry, Colin M., K. Chad Clay, and Michael E. Flynn, 2013, “Avoiding the Spotlight: Human Rights Shaming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7, No. 3 (September).
- Berinsky, Adam J., 2017, “Measuring Public Opinion with Survey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20 (May).
- Bisbee, James, James R. Hollyer, Peter Rosendorff, and Jame Raymond Vreeland, 2019, “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 and Education: Accountability and Substitution in Global Assess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73, No. 3 (April).
- Börzel, Tanja A., Tobias Hofmann, Diana Panke, and Carina Sprungk, 2010, “Obstinate and Inefficient: Why Member States Do Not Comply With European Law,”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43, No. 11 (July).
- Brankovic, Jelena, 2022, “Why Rankings Appear Natural (But Aren’t),” *Business & Society*, Vol. 61, No. 4 (April).
- Brutger, Ryan and Joshua D. Kertzer, 2018, “A Dispositional Theory of Reputation Cost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72, No. 3 (May).
- Burstein, Paul, 2003, “The Impact of Public Opinion on Public Policy: A Review and an Agenda,”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Vol. 56, No. 1 (March).
- Carnegie, Allison and Austin Carson, 2018, “The Spotlight’s Harsh Glare: Rethinking Publicity and International Ord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72, No. 3 (May).
- Carver, Charles S. and Michael F. Scheier, 1990, “Origins and Functions of Positive and Negative Effect: A Control-process View,” *Psychological review*, Vol. 97, No. 1 (January).
- Checkel, Jeffrey T., 2005,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ocialization in Europe: Introduction and Framework,”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9,

- No. 4 (October).
- Choi, Hyeonjung, 2020, "South Korean Perception on Climate Change,"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Issue Brief*, Vol. 3 (February).
- Cialdini, Robert B., 2001, "The Science of Persuasion," *Scientific American*, Vol. 284, No. 2 (February).
- Clasen, Donna Rae and Bradford B. Brown, 1985, "The Multidimensionality of Peer Pressure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14, No. 6 (March).
- Cortell, Andrew and James W. Davis Jr., 2002, "Understanding the Domestic Impact of International Norms: A Research Agenda,"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2, No. 1 (December).
- Crescenzi, Mark J. C. and Bailee Donahue, 2017, "Reputa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 Bibliograph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pril).
- Dafoe, Allan, Janathan Renshon, and Paul Huth, 2014, "Reputation and Status as Motives for War,"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17 (May).
- Dai, Xinyuan, 2005, "Why Comply? The Domestic Constituency Mechan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9, No. 2 (May).
- Davis, David R., Amanda Murdie, and Coty G. Steinmatz, 2012, "Makers and Shapers": Human Rights INGOs and Public Opinion," *Human Rights Quarterly*, Vol. 34, No. 1 (February).
- Denzau, Arthur T. and Michael C. Munger, 1986, "Legislators and Interest Groups: How Unorganized Interests Get Represented,"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0, No. 1 (August).
- Diehl, Paul F., Jennifer Reifschneider, and Paul R. Hensel, 1996, "United Nations Intervention and Recurring Conflict,"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0, No. 4 (August).
- Doshi, Rush, Judith G. Kelley, and Beth A. Simmons, 2019, "The Power of Ranking: The Ease of Doing Business Indicator and Global Regulatory Behavi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73, No. 3 (July).
- Downs, George W. and Michael A. Jones, 2002, "Reputation, Compliance, and International Law,"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Vol. 31, No. 1 (January).
- Druckman, James N. and Mary C. McGrath, 2019, "The Evidence for

- Motivated Reasoning in Climate Change Preference Formation,” *Nature Climate Change*, Vol. 9, No. 2 (January).
- Erne, Roland, 2007, “On the Use and Abuse of Bibliometric Performance Indicators: A Critique of Hix’s ‘Global Ranking of Political Science Departments’ ,” *European Political Science*, Vol. 6 (August).
- Espeland, Wendy Nelson and Michael Sauder, 2007, “Rankings and Reactivity: How Public Measures Recreate Social World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113, No. 1 (2007).
- Falkner, Robert, 2016, “The Paris Agreement and the New Logic of International Climate Politics,” *International Affairs*, Vol. 92, No. 5 (September).
- Farber, Daniel, 2002, “Rights as Signals,” *Journal of Legal Studies*, Vol. 31, No. 1 (January).
- Fearon, James D., 2013, “Domestic Political Audiences and the Escalation of International Dispu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8, No. 3 (September).
- Feinberg, Matthew and Robb Willer, 2011, “Apocalypse Soon?: Dire Messages Reduce Belief in Global Warming by Contradicting Just-world Beliefs,” *Psychological science*, Vol. 22, No. 1 (August).
- Festinger, Leon,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Vol. 7, No. 2 (May).
- Finnemore, Martha and Kathryn Sikkink, 1998, “International Norm Dynamics and Political Chan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2, No. 4 (April).
- Gaines, Brian J., James H. Kuklinski, and Paul J. Quirk, 2017, “The Logic of the Survey Experiment Reexamined,” *Political Analysis*, Vol. 52, No. 4 (January).
- Gerber, Alan S., Donald P. Green, and Christopher W. Larimer, 2008, “Social Pressure and Voter Turnout: Evidence from a Large-scale Field Experi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2, No. 1 (February).
- Giles, Margin and Naomi Murakawa, 2002, “Elite Cues and Political Decision-making,” *Research in micropolitics*, Vol. 6, No. 1 (July).

- Goldstein, Judith, Miles Kahler, Robert O. Keohane, and Anne-Marie Slaughter, 2000, "Introduction: Legalization and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4, No. 3 (July).
- Greenhill, Brian and Dan Reiter, 2022, "Naming and Shaming, Government Messaging, and Backlash Effects: Experimental Evidence from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Journal of Human Rights*, Issue. 4 (April).
- Greico, Joseph, Robert Powell, and Duncan Snidal, 1993, "The Relative-gains Problem 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7, No. 3 (August).
- Hafner-Burton, Emilie, 2008, "Sticks and Stones: Naming and Shaming the Human Rights Enforcement Problem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62, No. 4 (October).
- Hakarvy, Robert E., 2000, "Defeat, National Humiliation, and the Revenge Motif in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Politics*, Vol. 37, No. 3 (September).
- Harden, Paige K., Jennifer E. Hill, Eric Turkheimer, and Robert E. Emery, 2008, "Gene-Environment Correlation and Interaction in Peer Effects on Adolescent Alcohol and Tobacco Use," *Behavior Genetics*, Vol. 38, No. 4 (March).
- Harsanyi, John C., 1966, "A Bargaining Model for Social Status in Informal Groups and Formal Organizations," *Behavioral Science*, Vol. 11, No. 5 (September).
- Hede Skagerlind, Helena, 2021, "Governing Development: Global Performance Indicators and Gender Policy Change in Sub-Saharan Africa,"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evelopment*, Vol. 24, No. 3 (March).
- Hendrix, Cullen S. and Wendy H. Wong, 2012, "When is the Pen Truly Mighty? Regime Type and the Efficacy of Naming and Shaming in Curbing Human Rights Abus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3, No. 3 (October).
- Hollyer, James R. and Peter Rosendorff, 2011, "Why Do Authoritarian Regimes Sign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Signaling, Domestic Politics, and Non-compliance," *Quarterly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6, No. 3

- (June).
- Holsti, Ole, 1992, "Public Opinion and Foreign Policy: Challenges to the Almond-Lippmann Consensu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6, No. 4 (December).
- Honig, Dan and Catherine Weaver, 2019, "A Race to the Top? The Aid Transparency Index and the Social Power of Global Performance Indicator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73, No. 3 (July).
- Hopf, Ted, 1998, "The Promise of Constructiv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3, No. 1 (August).
- Ilgit, Asli and Deepa Prakash, 2019, "Making Human Rights Emotional: a Research Agenda to Recover Shame in "Naming and Shaming"," *Political Psychology*, Vol. 50, No. 6 (August).
- James, Oliver and Gregg G. Van Ryzin, 2017, "Motivated Reasoning about Public Performance: An Experimental Study of How Citizens Judge the Affordable Care Act,"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Vol. 27, No. 1 (January).
- Jervis, Robert, Keren Yarhi-Milo, and Don Casler, 2021, "Redefining the Debate over Reputation and Credibility in International Security: Promises and Limits of New Scholarship," *World Politics*, Vol 73, No. 1 (January).
- Johnston, Alastair Iain, 2001, "Treating International Institutions as Social Environment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5, No. 4 (December).
- Kahneman, Daniel and Amos Tversky, 1979,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Vol. 47, No. 2 (March).
- Kang, David C., 2005, "Hierarchy in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1300-1900," *Asian Security*, Vol. 1, No. 1 (August).
- Kelley, Judith G. and Beth A. Simmons, 2019, "Introduction: The Power of Global Performance Indicator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73, No. 3 (July).
- _____, 2020, "Governance by Other Means: Ranking as Regulatory Systems," *International Theory*, Vol. 13, No. 1 (December).
- Kertzer, Joshua D., 2022, "Re-assessing Elite-public Gaps in Political

-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66, No. 3 (December).
- Kertzer, Joshua D., and Ryan Brutger, 2015, “Decomposing Audience Costs: Bringing the Audience Back into Audience Cost Theor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60, No. 1 (July).
- Klayman, Joshua, 1995, “Varieties of Confirmation Bias,” *Psychology of Learning and Motivation*, Vol. 32 (August).
- Koliev, Faradj and James H. Lebovic, 2018, “Selecting for Shame: The monitoring of workers’ rights by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1989 to 2011,”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62, No. 2 (June).
- , 2022, “Shaming into Compliance? Country Reporting of Convention Adherence to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48, No. 2 (January).
- Koliev, Faradj, Thomas Sommere, and Johns Talberg, 2020, “Compliance without Coercion: Effects of Reporting on International Labor Rights,”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58, No. 3 (June).
- Krain, Matthew, 2012, “J’ accuse! Does Naming and Shaming Perpetrators Reduce the Severity of Genocides or Politicid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6, No. 3 (June).
- Kunda, Ziva, 1990, “The Case for Motivated Reasoning,”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8, No. 3 (November).
- Lake, David A., 2003, “The New Sovereign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tudies*, Vol. 5, No. 3 (September).
- Levy, Jack S., Michael K. McKoy, Paul Poast, and Geoffrey P. R. Wallace, 2015, “Backing Out or Backing In? Commitment and Consistency in Audience Costs Theor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9, No. 4 (June).
- Li, Xiaojun and Dingding Chen, 2021, “Public Opinion, International Reputation, and Audience Costs in an Authoritarian Regime,”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38, No. 5 (September).
- Lim, Sijeong and Seiki Tanaka, 2022, “Why Costly Rivalry Disputes Persist: A Paired Conjoint Experiment in Japan and South Korea,” *International*

- Studies Quarterly*, Vol. 66, No. 4 (December).
- Maguire, Allegra, Emil Persson, Daniel Vastfjall, and Gustav Tinghog, 2022, "COVID-19 and Politically Motivated Teasing," *Medical Decision Making*, Vol. 42, No. 8 (July).
- Masaki, Takaaki and Bradley C. Parks, 2019, "When Do Performance Assessments Influence Policy Behavior? Micro-evidence from the 2014 Reform Efforts Survey," *Revie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15, No. 2 (April).
- Mercer, Jonathan, 2017, "The Illusion of International Prestige," *International Security*, Vol. 41, No. 4 (December).
- Milner, Helen V. and Dustin Tingley, 2013, "The Choice for Multilateralism: Foreign Aid and American Foreign Policy," *The Revie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Vol. 8 (September).
- Monroe, Alan D., 1998, "Public Opinion and Public Policy, 1980-1993," *The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62, No. 1 (Spring).
- Morrow, James D., 2000, "Alliance: Why Write Them Down?,"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3 (June).
- Morse, Julia C., 2019, "Blacklists, Market Enforcement, and the Global Regime to Combat Terrorist Financ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73, No. 3 (July).
- Murdie, Amanda and Tavishi Bhasin, 2012, "Aiding and Abetting: Human Rights INGOs and Domestic Protes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5, No. 3 (January).
- Murdie, Amanda and Dursun Peksen, 2014a, "The Impact of Human Rights INGO Shaming on Humanitarian Interventions," *The Journal of Politics*, Vol. 76, No. 1 (January).
- , 2014b, "Women's Rights INGO Shaming and the Government Respect for Women's Rights," *Revie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Vol. 10, No. 1 (August).
- Murdie, Amanda and Johannes Urpelainen, 2015, "Why Pick on Us? Environmental INGOs and State Shaming as a Strategic Substitute," *Political Studies*, Vol. 63, No. 2 (2015).

- Nadkarni, Sucheta and Vadake K. Narayanan, 2007, "Strategic Schemas, Strategic Flexibility, and Firm Performance: The Moderating Role of Industry Clockspeed,"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28, No. 3 (January).
- Ohanian, Roobina, 1990,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Scale to Measure Celebrity Endorsers' Perceived Expertise, Trustworthiness, and Attractiveness," *Journal of advertising*, Vol. 19, No. 3 (April).
- Panke, Diana and Ulrich Petersohn, 2012, "Why International Norms Disappear Sometime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8, No. 4 (December).
- Pierson, Paul, 2002, "Coping with Permanent Austerity: Welfare State Restructuring in Affluent Democracies," *Revue française de sociologie*, Vol. 43, No. 2 (April-June).
- Prada-Urbe, Maria Angelica, 2012, "Development through Data? A Case Study on the World Bank's Performance Indicators and Their Impact on Development in the Global South," *IRPA Working Series-GAL*, No. 5 (October).
- Rege, Mari, 2008, "Why Do People Care about Social Statu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Vol. 66 No. 2 (May).
- Renshon, Jonathan, 2019, "Status in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 Bibliographies*, (February).
- Reyniers, Diane and Richa Bhalla, 2013, "Reluctant Altruism and Peer Pressure in Charitable Giving," *Judgement and Decision Making*, Vol. 8, No. 1 (January).
- Ridgeway, Cecilia L., 2013, "Why Status Matters for Inequ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79, No. 1 (December).
- Rumelili, Bahar and Ann E. Towns, 2021, "Driving Liberal Change? Global Performance Indices as a System of Normative Stratification in Liberal International Order," *Cooperation and Conflict*, Vol. 57, No. 2 (June).
- Sagan, Scott. D., 1996, "Why Do States Build Nuclear Weapons?: Three Models in Search of a Bomb," *International Security*, Vol. 21, No. 3 (September).
- Savaresi, Annalisa, 2016, "The Paris Agreement: a New Beginning?," *Journal*

- of Energy & Natural Resources Law*, Vol. 34, No. 1 (January).
- Simmons, Beth A., 1998,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Agreement,"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1 (June).
- , 2000, "International Law and State Behavior: Commitment and Compliance in International Monetary Affair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4, No. 4 (December).
- Simon, Bernd, Klaus Reininger, Christopher Schaefer, Steffen Zitzmann, and Sabrina Krys, 2018, "Politicization as an Antecedent of Polarization: Evidence from Two Different Political National Context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58, No. 4 (December).
- Snidal, Duncan, 1991, "Relative Gains and the Patter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5, No. 3 (August).
- Snow, David A., E. Burke Rochford Jr., Steven K. Worden, and Robert D. Benford, 1986, "Frame Alignment Processes, Micromobilization, and Movement Particip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1, No. 4 (August).
- Spektor, Matias, Umberto Mignozzetti, and Guilherme N. Fasolin, 2022, "Nationalist Backlash against Foreign Climate Shaming,"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Vol. 22, No. 1 (Spring).
- Streck, Charlotte, Paul Keenlyside, and Moritz von Unger, 2016, "The Paris Agreement: A New Beginning," *Journal for European Environmental & Planning Law*, Vol. 13, No. 1 (April).
- Strickland, April A., Charles S. Taber and Milton Lodge, 2011, "Motivated Reasoning and Public Opinion," *Journal of Health Politics, Policy and Law*, Vol. 36, No. 6 (December).
- Sumber, Sindy R., Caroline L. Bokhorst, Laurence Stienberg, and Michael P. Westenberg, 2009, "The Developmental Pattern of Resistance to Peer Influence in Adolescence: Will the Teenager Ever be Able to Resist?," *Journal of Adolescence*, Vol. 34, No. 4 (August).
- Szent-Ivanyi, Balazs and Peteris F. Timofejevs, 2021, "Selective Norm Promotio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the Drivers of Naming and Shaming Advocacy among European Non-governmental Development

- organisations,” *International Relations*, Vol. 35, No. 1 (March).
- Terman, Rochelle, 2016, *Backlash: Defiance, Human Rights and the Politics of Shame*, Ph.D. Dissertaion, UC Berkeley.
- Terman, Rochelle and Erik Voeten, 2013, “The Relational Politics of Shame: Evidence from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The Revie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13, No. 1 (March).
- Thompson, William R., 2001, “Identifying Rivals and Rivalries in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5, No. 4 (December).
- Tingley, Dustin and Michael Tomz, 2019, “International Commitments and Domestic opinion: the Effect of the Paris Agreement on Public Support for Policies to Address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Politics*, Vol. 29, No. 7 (December).
-
- , 2021, “The Effects of Naming and Shaming on Public Support for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Agreements: an Experimental Analysis of the Paris Agree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76, No. 2 (September).
- Tomz, Michael, 2007, “Domestic Audience Cos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 Experimental Approach,”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61, No. 4 (October).
- Tversky, Amos and Daniel Kahneman, 1981, “The Framing of Decisions and the Psychology of Choice,” *Science*, Vol. 211, No. 4481 (January).
- Urpelainen, Johannes and Thijs Van de Graaf, 2017, “United States Non-cooperation and the Paris Agreement,” *Climate Policy*, Vol. 18, No. 7 (December).
- Valerino, Brendon G.. 2003, *The Steps to rivalry: Power politics and rivalry formation*, Ph.D. Dissertaion, Vanderbilt University.
- Van den Eynde, Julie, Arthur Veno, and Alison Hart, 2003, “They Look Good but Don’t Work: A Case Study of Global Performance Indicators in Crime Prevention,”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Vol. 26, No. 3 (August).
- Van der Linden, Sander, Costas Panagopoulos, and Jon Roozenbeek, 2020, “You are Fake News: Political Bias in Perceptions of Fake News,” *Media, Culture & Society*, Vol. 42, No. 3 (April).

- Williamson, Scott and Beatriz Magaloni, 2020, “Legislature and Policy Making in Authoritarian Regim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53, No. 9 (August).
- Wolhforth, William C., 2008, “Unipolarity, Status Competition, and Great Power War,” *World Politics*, Vol. 61, No. 1 (December).
- Woo, Byungwon and Amanda Murdie, 2017,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aming and Shaming: Does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Care about the Human Rights Reputation of its Client?,” *Political Studies*, Vol. 65, No. 4 (March).
- Wood, Joanne V., 1989, “Theory and Research Concerning Social Comparisons of Personal Attribute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6, No. 2 (September).
- Yair, Omer and Raanan Sulitzeanu-Kenan, 2018, “When Do We Care about Political Neutrality? The Hypocritical Nature of Reaction to Political Bias,” *PloS one*, Vol. 13, No. 5 (May).

3. 잡지 및 신문

- Koszticsák, Szilárd, 2019, “PISA Test: Better Hungarian Results but Still Plenty of Room for Improvement,” *Hungary Today*, (December 3). <https://hungarytoday.hu/pisa-test-better-hungarian-results-but-still-plenty-of-room-for-improvement/> (검색일 2023년 3월 15일).
- McGarth, Matt, 2016, “Donald Trump would ‘cancel’ Paris climate deal“, *BBC*, (May 27). <https://www.bbc.com/news/election-us-2016-36401174> (검색일 2023년 2월 27일).
- Shear, Michael D., 2017, “Trump Will Withdraw U.S. From Paris Climate Agreement“, *The New York Times*, (June 1). <https://www.nytimes.com/2017/06/01/climate/trump-paris-climate-agreement.html> (검색일 2023년 2월 28일).
- Than, Krisztina, 2016, “Hungarians rally against Orban’s education reforms“, *Reuters*, (February 13). <https://www.reuters.com/article/uk-hungary-protest-idUKKCNOVM0GS> (검색일 2023년 3월 11일).

4. 공식 문서

European Commission, 2022, “6. Education and Training,” *EACEA National Policies Platform*, (April 2).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hungary/62-administration-and-governance> (검색일 2023년 3월 12일).

Trump White House Archive, 2017, “Statement by President Trump on the Paris Climate Accord“, *National Archives*, (June 1).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briefings-statements/statement-president-trump-paris-climate-accord/> (검색일 2023년 2월 28일).

United Nations, 1966,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https://www.ohchr.org/en/instruments-mechanisms/instruments/international-covenant-civil-and-political-rights> (검색일 2023년 3월 26일).

부 록

메커니즘	제시문
통제 집단	<p><한국, 세계기후변화대응지수 110개국중 51위 기록></p> <p>세계기후변화대응지수(WCRI)에서 한국이 51위를 기록하였다.</p>
거울 효과	<p><한국, 세계기후변화대응지수 110개국중 51위 기록></p> <p>세계기후변화대응지수(WCRI)에서 한국이 51위를 기록하였다. 해당 조사는 한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 감축량을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반영하여 측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까지 약속한 할당량을 감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p> <p><한국, 세계기후변화대응지수 110개국중 51위 기록></p> <p>세계기후변화대응지수(WCRI)에서 한국이 51위를 기록하였다. 해당 조사는 한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 감축량을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반영하여 측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까지 약속한 할당량을 감축하는 데에는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p>
라이벌 효과	<p><한국, 세계기후변화대응지수 110개국중 51위 기록></p> <p>세계기후변화대응지수(WCRI)에서 한국이 51위를 기록하였다. 해당 조사에서 일본은 한국보다 20단계 위인 31위를 차지하였다.</p> <p><한국, 세계기후변화대응지수 110개국중 51위 기록></p> <p>세계기후변화대응지수(WCRI)에서 한국이 51위를 기록하였다. 해당 조사에서 일본은 한국보다 20단계 아래인 71위를 차지하였다.</p>
동료 압력	<p><한국, 세계기후변화대응지수 110개국중 51위 기록></p> <p>세계기후변화대응지수(WCRI)에서 한국이 51위를 기록하였다. 해당 조사에서 한국은 비슷한 경제 규모의 OECD 선진국들에 비해 20단계 가량 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 <p><한국, 세계기후변화대응지수 110개국중 51위 기록></p> <p>세계기후변화대응지수(WCRI)에서 한국이 51위를 기록하였다. 해당 조사에서 한국은 비슷한 경제 규모의 OECD 선진국들에 비해 20단계 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p>
낙오자 효과	<p><한국, 세계기후변화대응지수 110개국중 89위 기록></p> <p>세계기후변화대응지수(WCRI)에서 한국이 89위를 기록하였다.</p> <p><한국, 세계기후변화대응지수 110개국중 21위 기록></p> <p>세계기후변화대응지수(WCRI)에서 한국이 21위를 기록하였다.</p>

[표 부록-1]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제시문 (기후변화 이슈 제시문 첫 문단)

국제비교지수 발표 기관	제시문
통제 집단	2번째 문단 내용 없음 (... (중략) ...으로 대체)
정부 기관	세계기후변화대응지수(WCRD)는 미국 국무부에서 세계 주요 110개국을 대상으로 2년마다 내고 있는 지표로 해당국의 각종 탄소 감축 정책 분야 전반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이러한 수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제 기구	세계기후변화대응지수(WCRD)는 UN 세계 환경 프로그램 (UNEP)에서 세계 주요 110개국을 대상으로 2년마다 내고 있는 지표로 해당국의 각종 탄소 감축 정책 분야 전반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이러한 수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정부 기구	세계기후변화대응지수(WCRD)는 시민 단체인 CRP(Climatic Reality Project)에서 세계 주요 110개국을 대상으로 2년마다 내고 있는 지표로 해당국의 각종 탄소 감축 정책 분야 전반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이러한 수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표 부록-2] 국제비교지수 발표 기관 통제를 위한 제시문 (기후변화 이슈 제시문 두 번째 문단)

메커니즘	제시문
통제 집단	<p><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에서 한국, 54위 기록해...></p> <p>한국이 113개국을 대상으로 산정한 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WHHEI)에서 54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p>
거울 효과	<p><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에서 한국, 54위 기록해...></p> <p>한국이 113개국을 대상으로 산정한 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WHHEI)에서 54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사는 한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장애인 권리 향상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반영하여 측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까지 약속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p>
	<p><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에서 한국, 54위 기록해...></p> <p>한국이 113개국을 대상으로 산정한 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WHHEI)에서 54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사는 한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장애인 권리 향상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반영하여 측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까지 약속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p>
라이벌 효과	<p><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에서 한국, 54위 기록해...></p> <p>한국이 113개국을 대상으로 산정한 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WHHEI)에서 54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조사에서 일본은 한국보다 20단계 위인 34위를 차지하였다.</p>
	<p><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에서 한국, 54위 기록해...></p> <p>한국이 113개국을 대상으로 산정한 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WHHEI)에서 54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조사에서 일본은 한국보다 20단계 아래인 74위를 차지하였다.</p>
동료 압력	<p><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에서 한국, 54위 기록해...></p> <p>한국이 113개국을 대상으로 산정한 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WHHEI)에서 54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조사에서 한국은 비슷한 경제 규모의 OECD 선진국들에 비해 20단계 가량 뒤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에서 한국, 54위 기록해...></p> <p>한국이 113개국을 대상으로 산정한 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WHHEI)에서 54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조사에서 한국은 비슷한 경제 규모의 OECD 선진국들에 비해 20단계 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p>
낙오자 효과	<p><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에서 한국, 92위 기록해...></p> <p>한국이 113개국을 대상으로 산정한 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WHHEI)에서 92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p>
	<p><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에서 한국, 24위 기록해...></p> <p>한국이 113개국을 대상으로 산정한 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WHHEI)에서 24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p>

[표 부록-3]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제시문 (장애 인권 이슈 제시문 첫 문단)

국제비교지수 발표 기관	제시문
통제 집단	2번째 문단 내용 없음 (... (중략) ...으로 대체)
정부 기관	미국 보건사회복지부에서 세계 2년마다 내고 있는 지표인 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WHHEI)는 주요 113개국을 대상으로 해당국의 각종 장애 인권 정책 전반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는 ...
국제 기구	UN 인권위원회에서 세계 2년마다 내고 있는 지표인 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WHHEI)는 주요 113개국을 대상으로 해당국의 각종 장애 인권 정책 전반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는 ...
비정부 기구	시민단체인 DiU(Disabled in Us)에서 세계 2년마다 내고 있는 지표인 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WHHEI)는 주요 113개국을 대상으로 해당국의 각종 장애 인권 정책 전반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는 ...

[표 부록-4] 국제비교지수 발표 기관 통제를 위한 제시문 (장애 인권 이슈 제시문 두 번째 문단)

	샘플 수 (N)	비율 (%)
성 별		
남성	1096	50.6
여성	1068	49.4
연 령 대		
20대	390	18
30대	394	18.2
40대	468	21.6
50대	494	22.8
60대	418	19.4
지 역		
서울	398	18.4
부산	140	6.5
대구	101	4.7
인천	128	5.9
광주	64	3
대전	64	3
울산	52	2.4
경기	548	25.3
강원	68	3.1
충북	68	3.1
충남	84	3.9
전북	75	3.5
전남	74	3.4
경북	105	4.9
경남	137	6.3
제주	34	1.6
세종	24	1

[표 부록-5] 표본의 기술 통계량 (성별, 연령대, 지역)

	샘플 수 (N)	비율 (%)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	0.7
고졸	384	17.7
2년제 전문대 졸업	344	15.9
4년제 대학교 졸업	1177	54.4
석사 졸업	198	9.1
박사 졸업 이상	46	2.1
소득		
3000만원 미만	405	18.7
3000만 원 이상 ~ 4000만 원 미만	395	18.3
4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301	13.9
5000만 원 이상 ~ 6000만 원 미만	274	12.7
60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미만	203	9.4
7000만 원 이상 ~ 8000만 원 미만	206	9.5
8000만 원 이상 ~ 9000만 원 미만	143	6.6
9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97	4.5
1억 원 이상	140	6.5
직업		
농업 / 축산업 / 수산업 / 임업	20	0.9
자영업	150	6.9
판매 / 서비스직	123	5.7
기능 / 숙련공	41	1.9
일반작업직	45	2.1
사무 / 기술직	850	39.3
경영 / 관리직	102	4.7
전문 / 자유직	219	10.1
전업주부	244	11.3
학생	131	6.1
군인 / 경찰	5	0.2
무직	153	7.1
기타	81	3.7

[표 부록-6] 표본의 기술 통계량 (교육 수준, 소득, 직업)

	샘플 수 (N)	비율 (%)
정치적 성향		
매우 진보적	62	2.9
약간 진보적	605	28.1
중도	972	44.9
약간 보수적	484	22.4
매우 보수적	41	1.9
국제 규범에 대한 태도 (기후변화)		
아주 반대한다	3	0.1
반대한다	54	2.5
보통이다	326	15.1
찬성한다	1303	60.2
아주 찬성한다	478	22.1
국제 규범에 대한 태도 (장애인권)		
아주 반대한다	4	0.2
반대한다	27	10.2
보통이다	283	13.1
찬성한다	1292	59.7
아주 찬성한다	558	25.8

Note: 국제 규범에 대한 태도는 “한국은 국제사회가 요구한다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 감축을 더 즉각적으로 실천해야 한다./장애인 인권 보장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 라는 말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표 부록-7] 표본의 기술 통계량 (정치적 성향, 국제 규범에 대한 태도)

	할당된 표본 수 (N)	비율 (%)
통제 집단	240	11.1
거울 효과		
약속을 못 지켰을 때	248	11.5
약속을 지켰을 때	252	11.6
라이벌 효과		
순위가 더 낮을 때	240	11.1
순위가 더 높을 때	246	11.4
동료 압력		
순위가 더 낮을 때	235	10.9
순위가 더 높을 때	244	11.3
낙오자 효과		
하위권일 때	220	10.2
상위권일 때	239	11
총합	2164	100

[표 부록-8] 기후변화 이슈를 활용한 실험에서
 각 통제군과 처치군에 할당된 표본 수와 비율

	할당된 표본 수 (N)	비율 (%)
통제 집단	244	11.3
거울 효과		
약속을 못 지켰을 때	236	10.9
약속을 지켰을 때	265	12.2
라이벌 효과		
순위가 더 낮을 때	226	10.4
순위가 더 높을 때	231	10.7
동료 압력		
순위가 더 낮을 때	215	9.9
순위가 더 높을 때	248	11.5
낙오자 효과		
하위권일 때	251	11.6
상위권일 때	248	11.5
총합	2164	100

[표 부록-9] 장애 인권 이슈를 활용한 실험에서
 각 통제군과 처치군에 할당된 표본 수와 비율

	남성 (%)	여성 (%)
통제 집단	55	45
거울 효과		
약속을 못 지켰을 때	47.2	52.8
약속을 지켰을 때	52.4	47.6
라이벌 효과		
순위가 더 낮을 때	53.3	46.7
순위가 더 높을 때	46.3	53.7
동료 압력		
순위가 더 낮을 때	46.8	53.2
순위가 더 높을 때	54.9	45.1
낙오자 효과		
하위권일 때	52.7	47.3
상위권일 때	47.3	52.7

[표 부록-10] 기후변화 이슈를 활용한 실험에서의 통제군과 처치군의 균형 표(balance table) (성별)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통제 집단	18.8	16.7	17.1	23.3	24.2
거울 효과					
약속을 못 지켰을 때	14.1	16.9	23	26.2	19.8
약속을 지켰을 때	21	19	22.6	19.8	17.5
라이벌 효과					
순위가 더 낮을 때	19.2	12.5	22.5	25.4	20.4
순위가 더 높을 때	15	22.8	23.6	23.2	15.4
동료 압력					
순위가 더 낮을 때	17	17	22.1	23.8	20
순위가 더 높을 때	20.5	19.7	20.9	22.5	16.4
낙오자 효과					
하위권일 때	15	16.8	24.5	23.6	20
상위권일 때	21.3	22.2	18.4	17.6	20.5

[표 부록-11] 기후변화 이슈를 이용한 실험에서의 통제군과 처치군의 균형 표(balance table) (연령대)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세종 (%)
통제 집단	15	5.4	5.4	4.6	3.8	3.3	3.3	24.2	4.2	5.8	3.8	3.8	4.2	5.8	5	1.7	0.8
거울 효과																	
약속을 못 지켰을 때	19	6.5	2	6.5	1.6	3.2	1.6	28.2	5.2	2	4	4	3.2	4.4	5.2	2	1.2
약속을 지켰을 때	20.6	6	5.2	7.1	2.8	1.2	2.8	25	1.2	1.6	5.6	2	2.4	5.2	7.5	3.6	0.4
라이벌 효과																	
순위가 더 낮을 때	14.2	8.3	7.5	6.7	3.3	3.3	1.7	25.8	2.5	3.3	2.9	3.3	3.3	4.2	7.5	1.3	0.8
순위가 더 높을 때	15.9	6.9	5.3	6.9	1.6	4.1	4.9	19.9	2.4	3.7	4.9	3.7	4.1	5.3	7.3	1.6	1.6
동료 압력																	
순위가 더 낮을 때	21.3	8.5	2.6	3.4	3	1.7	3.4	26.8	3.4	2.1	2.6	5.5	3.8	3.8	6	0.9	1.3
순위가 더 높을 때	18.9	5.7	2	6.6	4.5	3.3	0.8	25	2.5	2	4.5	3.3	3.3	5.7	7.8	2	2
낙오자 효과																	
하위권일 때	21.8	4.5	3.2	4.5	3.2	2.3	1.8	30.9	4.1	3.2	2.3	2.7	2.7	5.9	5.9	0	0.9
상위권일 때	19.2	6.3	8.8	6.7	2.9	4.2	1.3	22.6	2.9	4.6	4.2	2.9	3.8	3.3	4.6	0.8	0.8

[표 부록-12] 기후변화 이슈를 활용한 실험에서
통제군과 처치군에 대한 지역별 할당

	남성 (%)	여성 (%)
통제 집단	50.4	49.6
거울 효과		
약속을 못 지켰을 때	45.8	54.2
약속을 지켰을 때	50.2	49.8
라이벌 효과		
순위가 더 낮을 때	54	46
순위가 더 높을 때	49.4	50.6
동료 압력		
순위가 더 낮을 때	52.1	47.9
순위가 더 높을 때	48.8	51.2
낙오자 효과		
하위권일 때	49	51
상위권일 때	56.5	43.5

[표 부록-13] 장애 인권 이슈를 활용한 실험에서의 통제군과 처치군의 균형 표(balance table) (성별)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통제 집단	13.9	18.9	21.3	26.6	19.3
거울 효과					
약속을 못 지켰을 때	19.9	14.4	20.3	22.9	22.5
약속을 지켰을 때	18.5	16.6	18.9	24.9	21.1
라이벌 효과					
순위가 더 낮을 때	24.3	15	21.2	19.9	19.5
순위가 더 높을 때	14.3	15.2	25.5	23.4	21.6
동료 압력					
순위가 더 낮을 때	20.9	22.3	19.1	20	17.7
순위가 더 높을 때	17.7	23	19.4	19	21
낙오자 효과					
하위권일 때	16.3	21.5	23.9	23.1	15.1
상위권일 때	16.9	16.9	25	25	16.1

[표 부록-14] 장애 인권 이슈를 이용한 실험에서의 통제군과 처치군의 균형 표(balance table) (연령대)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세종 (%)
통제 집단	18.4	4.5	3.7	5.7	3.3	3.3	1.6	29.1	3.3	2.5	4.5	4.5	4.5	4.5	3.3	1.2	2
거울 효과																	
약속을 못 지켰을 때	14.8	8.1	5.9	4.7	3	1.7	4.2	26.7	3	3.4	3	2.5	4.2	6.8	4.2	2.1	1.7
약속을 지켰을 때	17.7	6	3	7.2	4.5	3.8	3.4	23.8	2.3	5.3	2.6	5.3	4.5	4.2	5.3	0	1.1
라이벌 효과																	
순위가 더 낮을 때	19.5	5.3	5.8	3.5	3.1	4.4	1.8	23	3.5	2.7	4.4	3.1	4.9	5.8	7.5	1.8	0
순위가 더 높을 때	15.6	6.1	3.9	6.1	2.2	3.5	0.9	28.6	3.9	3	2.6	4.3	3	5.2	6.9	2.6	1.7
동료 압력																	
순위가 더 낮을 때	21.9	7	3.3	6.5	2.8	1.9	1.9	20.5	4.2	3.3	2.8	5.1	2.8	5.1	8.8	0.9	1.4
순위가 더 높을 때	21.4	7.7	5.2	6	4.4	2	2	24.6	2.8	2	4.8	0.4	1.6	5.2	6.9	2	0.8
낙오자 효과																	
하위권일 때	17.5	6.8	4.8	4	1.6	4	3.6	28.3	4	2	6	2	2	4.4	6.8	1.6	0.8
상위권일 때	19	6.9	6.5	9.3	1.6	2	2	23	1.6	4	4	4	3.2	2.8	7.7	2	0.4

[표 부록-15] 장애인권 이슈를 활용한 실험에서
통제군과 처치군에 대한 지역별 할당

	미제시 (%)	정부 기관 (%)	국제기구 (%)	비정부기구 (%)
통제 집단	16.7	23.8	33.8	25.8
거울 효과				
약속을 못 지켰을 때	31.9	34.7	19.4	14.1
약속을 지켰을 때	29	21.8	32.5	16.7
라이벌 효과				
순위가 더 낮을 때	23.8	14.2	31.3	30.8
순위가 더 높을 때	30.9	17.5	21.5	30.1
동료 압력				
순위가 더 낮을 때	29.4	24.7	11.5	34.5
순위가 더 높을 때	29.1	24.2	16.4	30.3
낙오자 효과				
하위권일 때	15	34.1	21.4	29.5
상위권일 때	15.9	31.4	34.3	18.4

[표 부록-16] 기후변화 이슈를 이용한 실험에서
주요 실험적 조건에 할당된 발표 기관 처치의 비율

	미제시 (%)	정부 기관 (%)	국제기구 (%)	비정부기구 (%)
통제 집단	21.3	20.1	28.3	30.3
거울 효과				
약속을 못 지켰을 때	33.1	33.9	18.6	14.4
약속을 지켰을 때	25.3	25.3	32.5	17
라이벌 효과				
순위가 더 낮을 때	33.2	8.8	33.2	24.8
순위가 더 높을 때	29.9	12.1	25.1	32.9
동료 압력				
순위가 더 낮을 때	32.1	23.3	12.6	32.1
순위가 더 높을 때	28.2	31.5	15.3	25
낙오자 효과				
하위권일 때	20.7	26.7	33.5	19.1
상위권일 때	10.1	33.9	31.9	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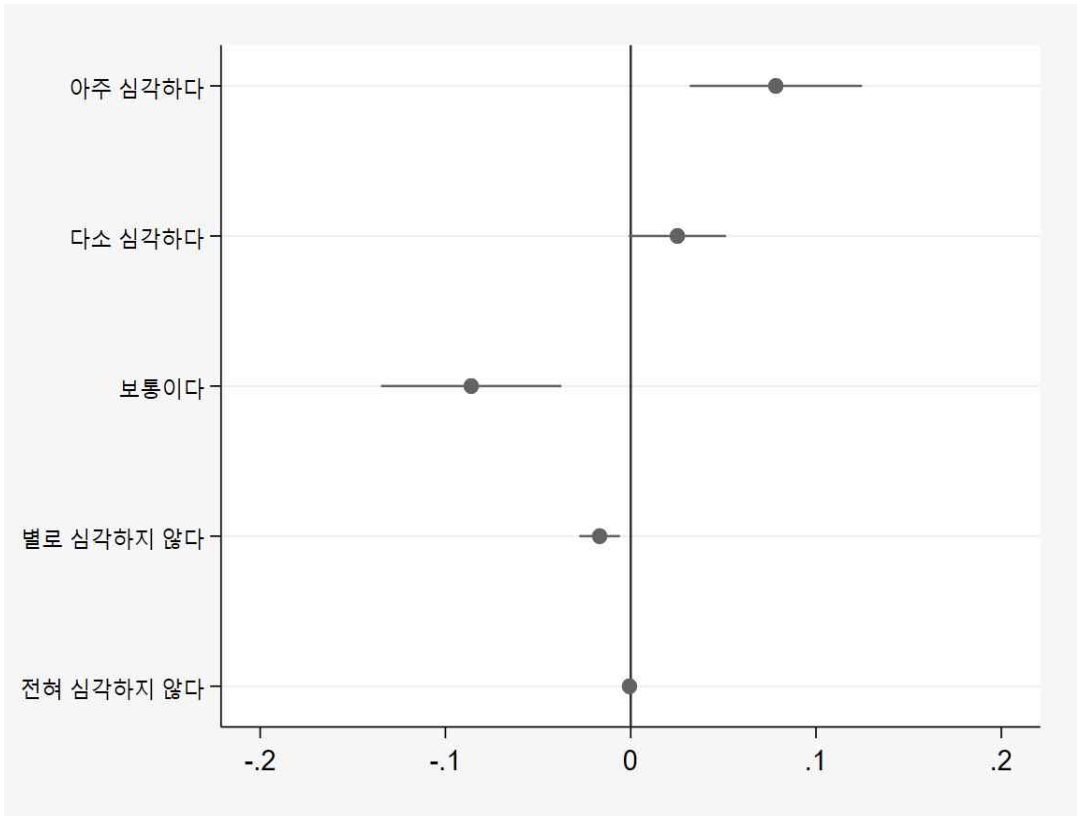
[표 부록-17] 장애 인권 이슈를 이용한 실험에서
주요 실험적 조건에 할당된 발표 기관 처치의 비율

	전혀 심각하지 않다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보통이다 (%)	다소 심각하다 (%)	아주 심각하다 (%)
통제 집단	0.4	7.5	21.3	57.1	13.8
거울 효과					
약속을 못 지켰을 때	0.4	4.4	20.2	62.9	12.1
약속을 지켰을 때	0.4	8.3	27.4	55.6	8.3
라이벌 효과					
순위가 더 낮을 때	0	5.4	23.8	58.8	12.1
순위가 더 높을 때	0.4	6.1	27.2	56.5	9.8
동료 압력					
순위가 더 낮을 때	0	5.1	20.9	60.4	13.6
순위가 더 높을 때	0.4	11.5	29.1	50	9
낙오자 효과					
하위권일 때	0.5	3.2	16.8	52.7	26.8
상위권일 때	0.4	12.1	37.7	41	8.8

[표 부록-18] 통제군과 처치군의 응답 분포:
한국의 기후변화 정책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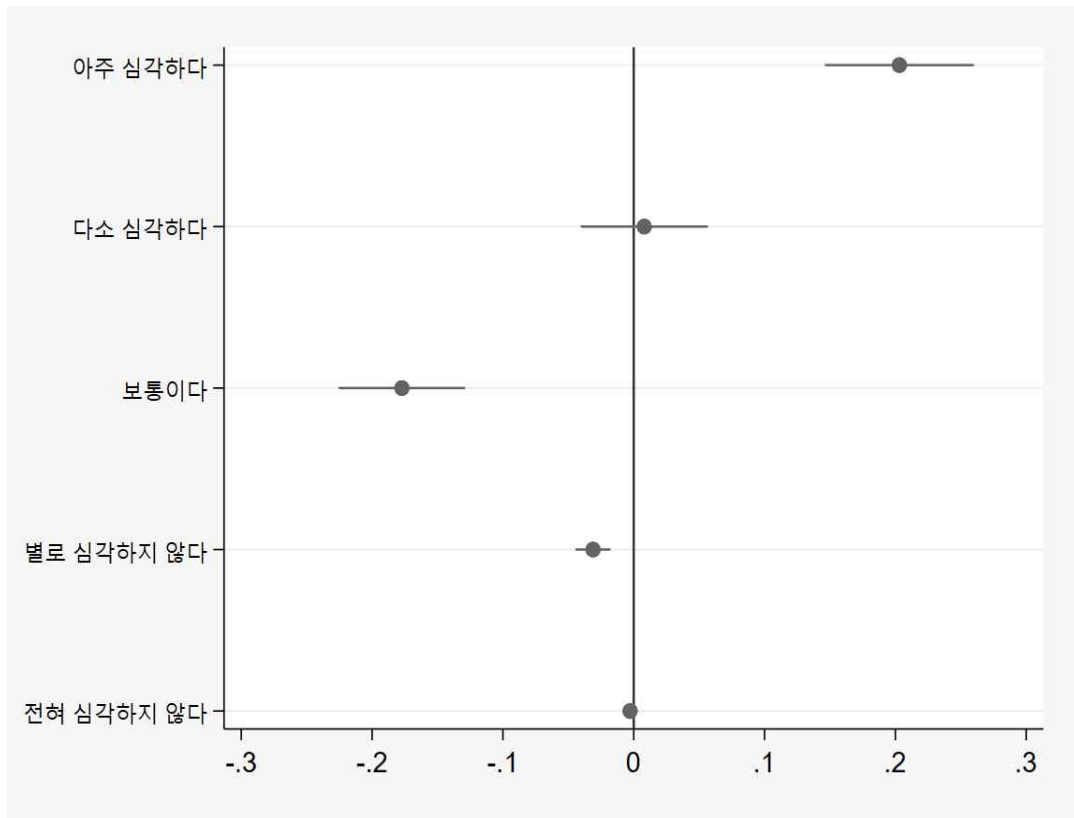
	전혀 심각하지 않다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보통이다 (%)	다소 심각하다 (%)	아주 심각하다 (%)
통제 집단	0.8	5.3	24.6	57	12.3
거울 효과					
약속을 못 지켰을 때	0.4	3.8	22	60.6	13.1
약속을 지켰을 때	0	3.8	26.4	58.9	10.9
라이벌 효과					
순위가 더 낮을 때	0	2.7	21.7	63.3	12.4
순위가 더 높을 때	0.9	9.5	26.4	51.1	12.1
동료 압력					
순위가 더 낮을 때	0.5	8.8	22.3	55.3	13
순위가 더 높을 때	0	7.7	27	52.8	12.5
낙오자 효과					
하위권일 때	0.8	2.8	12.4	49.8	34.3
상위권일 때	1.2	8.5	39.9	41.1	9.3

[표 부록-19] 통제군과 처치군의 응답 분포:
한국의 장애 인권 정책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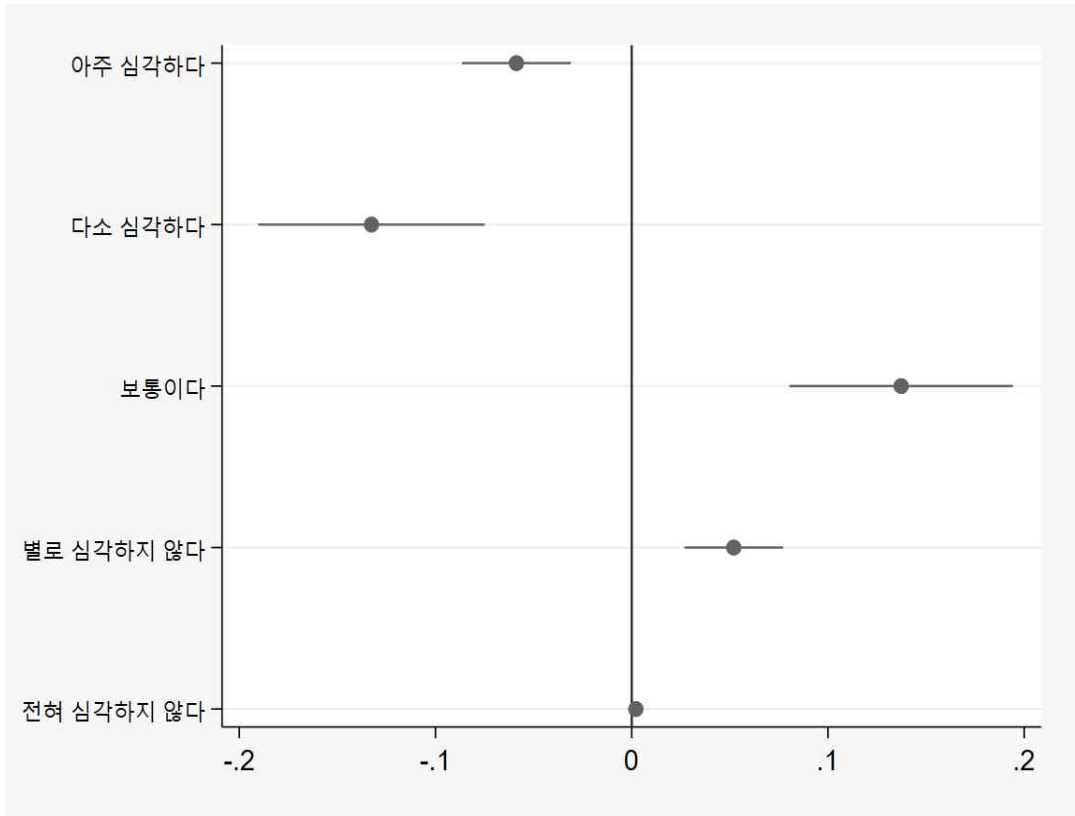
Note: 한계 효과를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표시하였다.

[그림 부록-1] 낙오자 효과의 한계 효과: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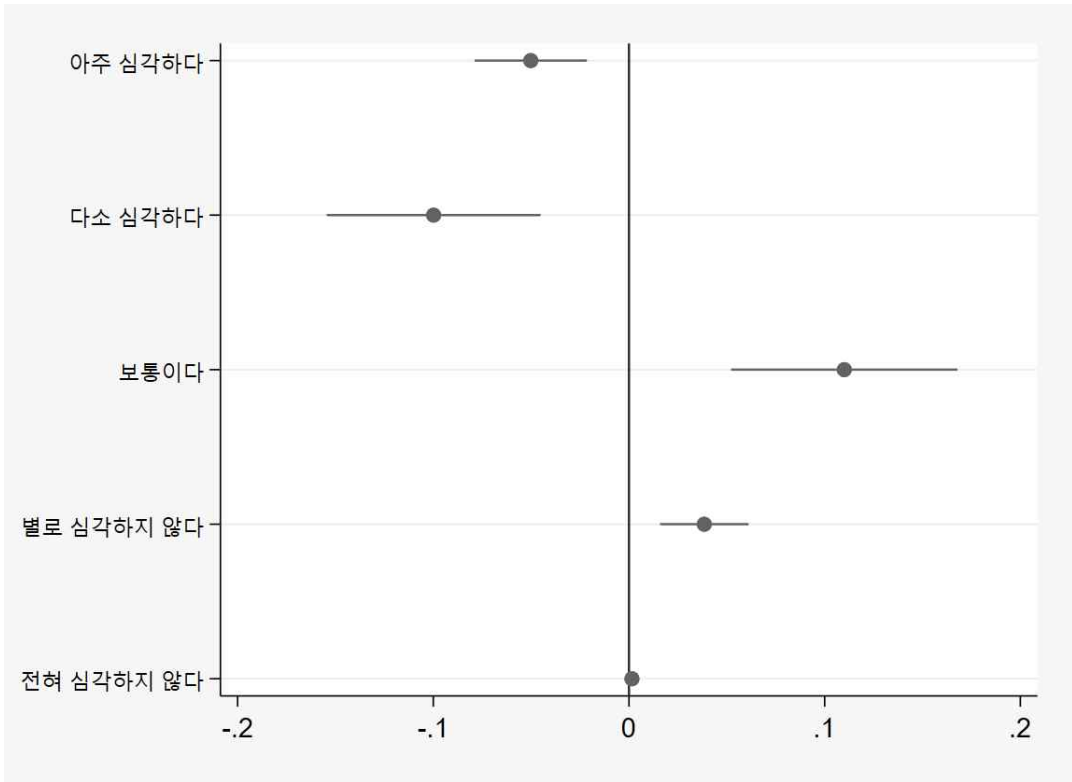
Note: 한계 효과를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표시하였다.

[그림 부록-2] 낙오자 효과의 한계 효과:
한국의 장애 인권 정책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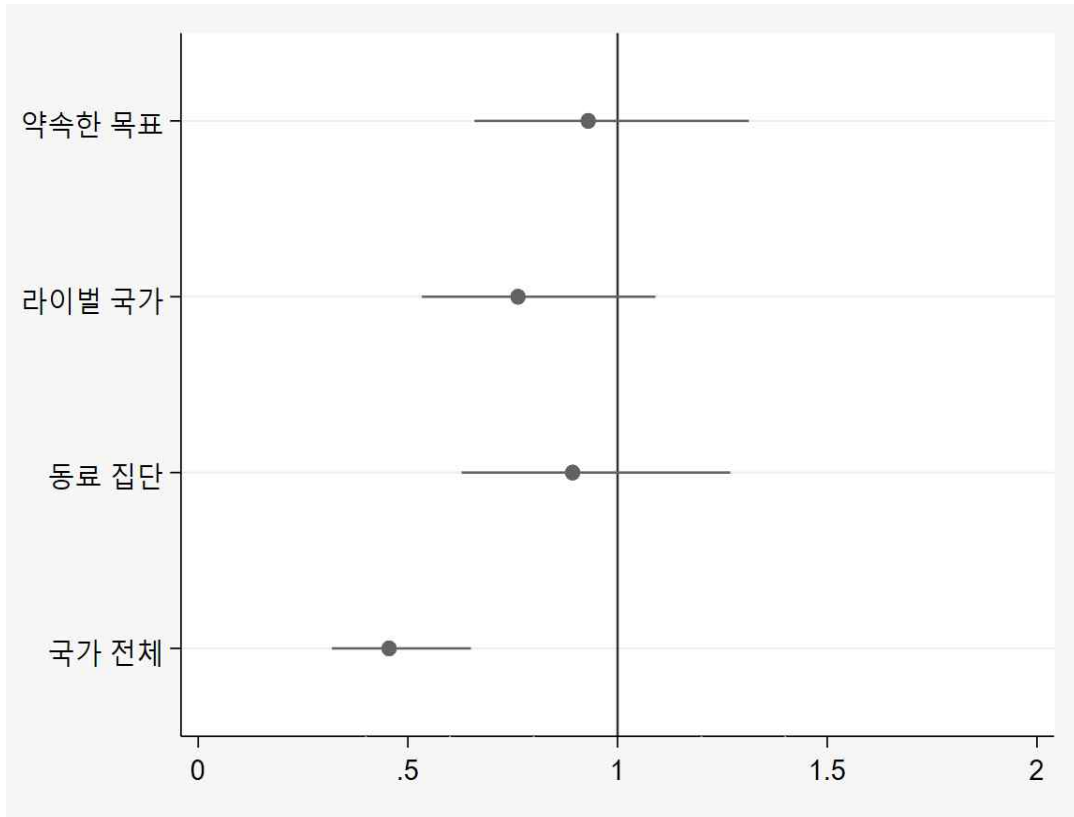
Note: 한계효과를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표시했다.

[그림 부록-3] 한국이 상위권을 기록했을 때의 한계 효과: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Note: 한계효과를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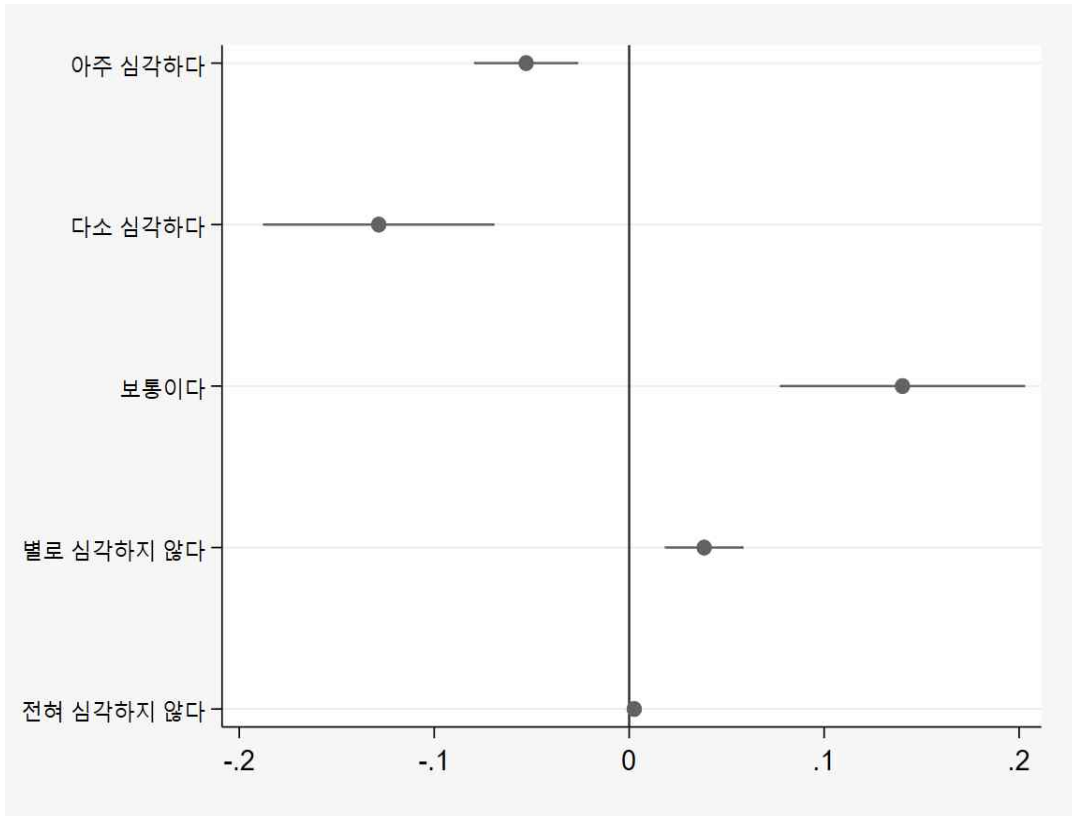
[그림 부록-4] 한국이 동료집단의 국가(OECD)보다 좋은 성적일 때의 한계 효과: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Note: 오즈비를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표시했으며 y축은 각 처치의 비교 준거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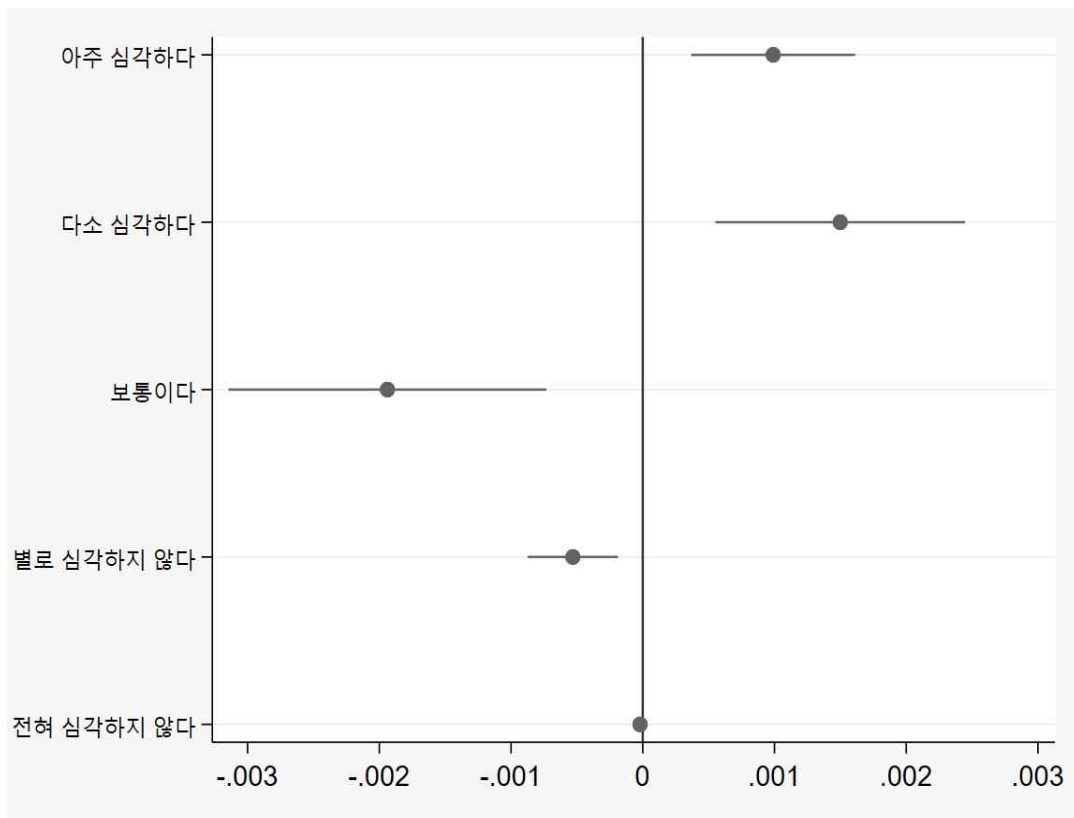
[그림 부록-5]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 모델:

한국의 장애 인권 정책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한국이 더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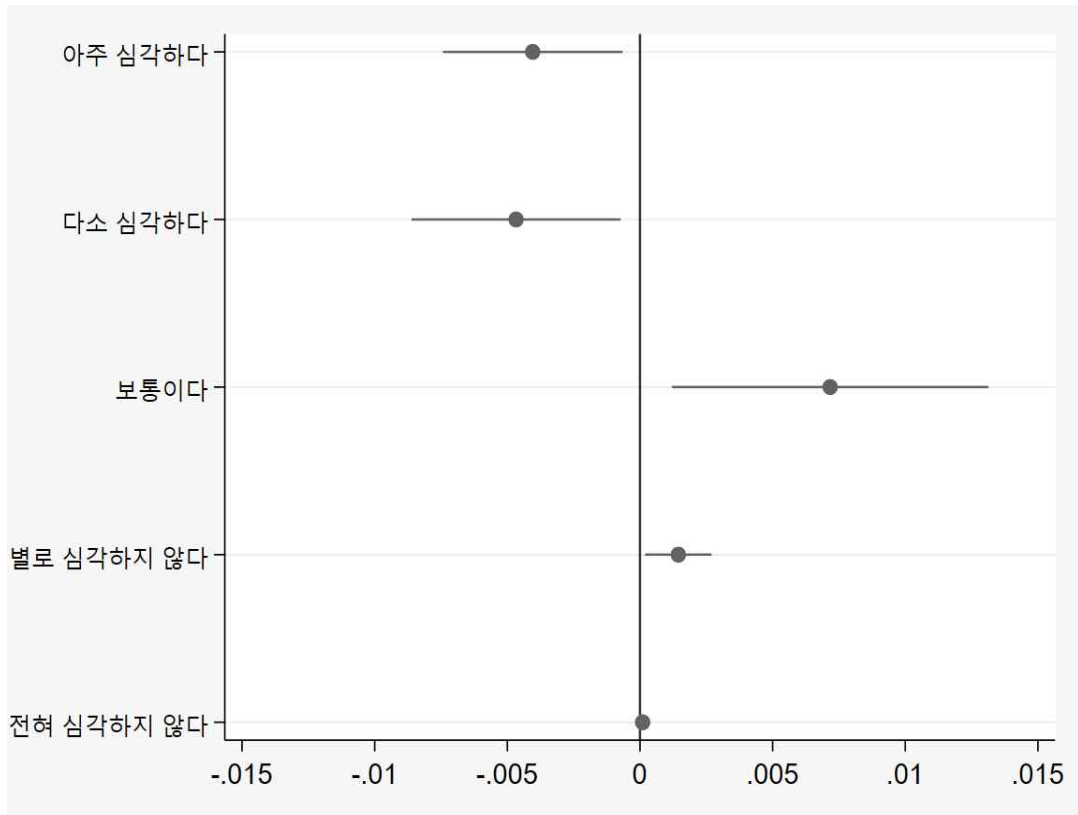
Note: 한계효과를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표시했다.

[그림 부록-6] 한국이 상위권을 기록했을 때의 한계 효과:
한국의 장애 인권 정책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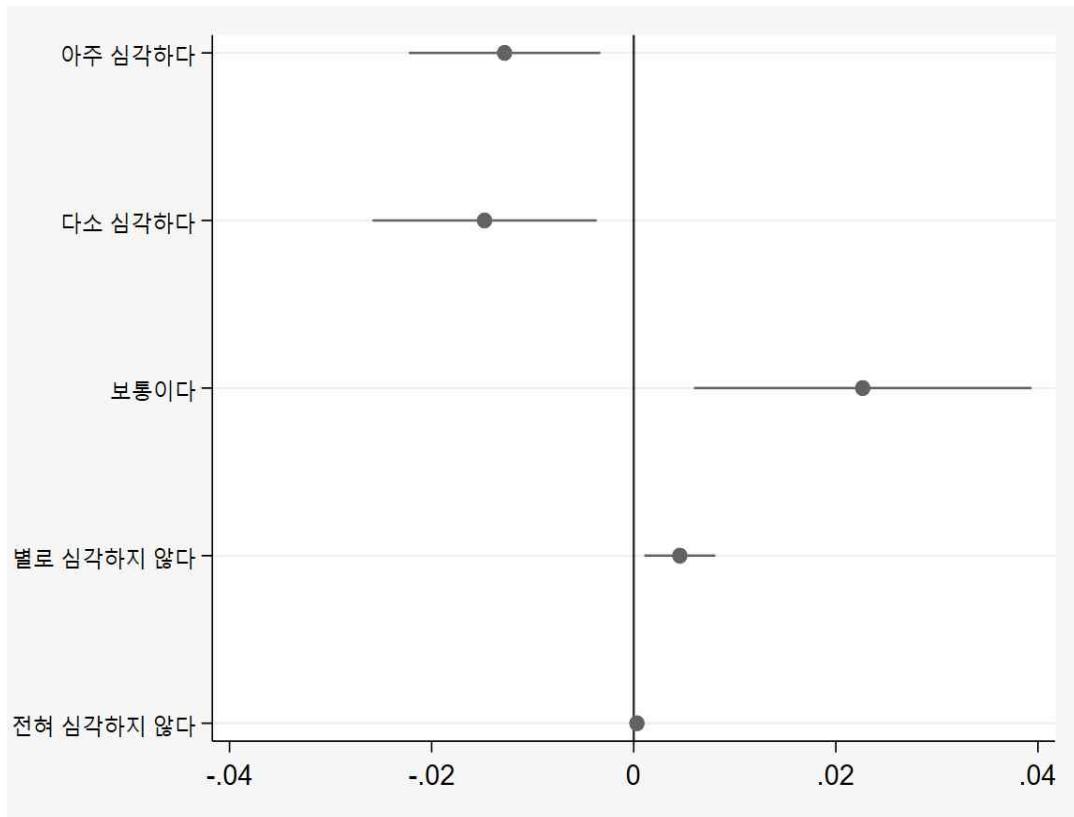
Note: 오즈비를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표시했다.

[그림 부록-7] 연령 변수의 한계 효과: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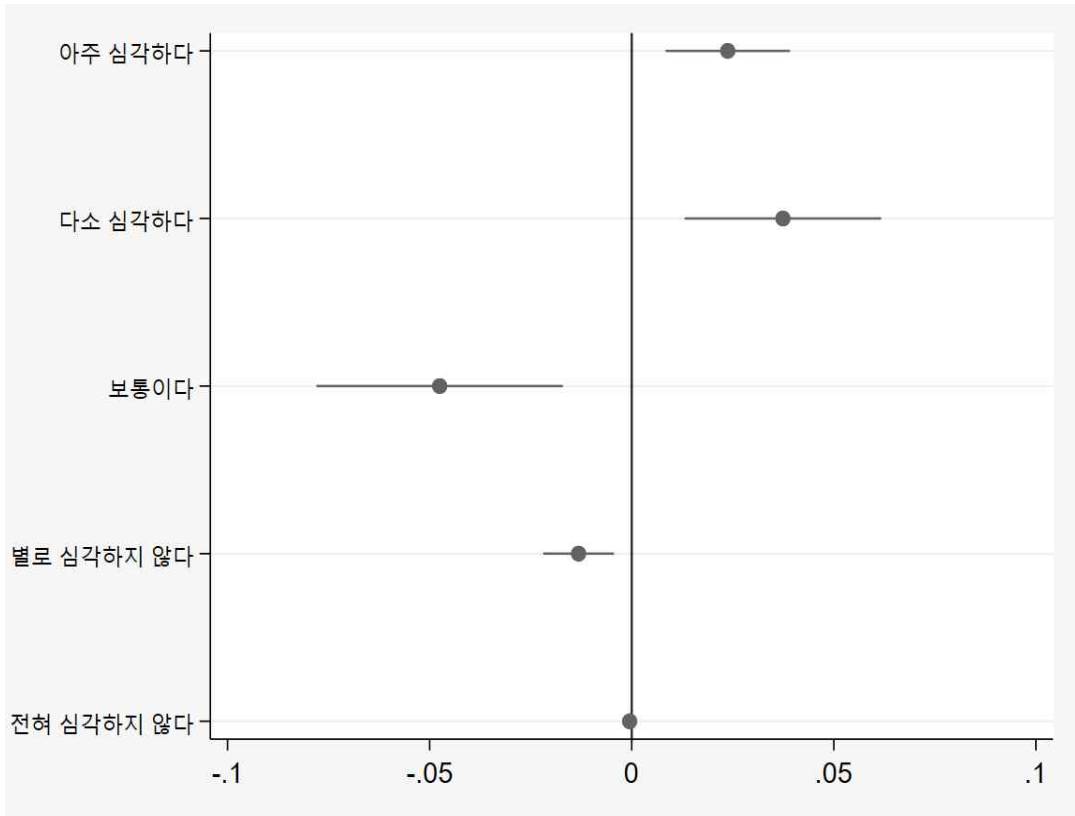
Note: 오즈비를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표시했다.

[그림 부록-8] 소득 수준의 한계 효과:
한국의 장애 인권 정책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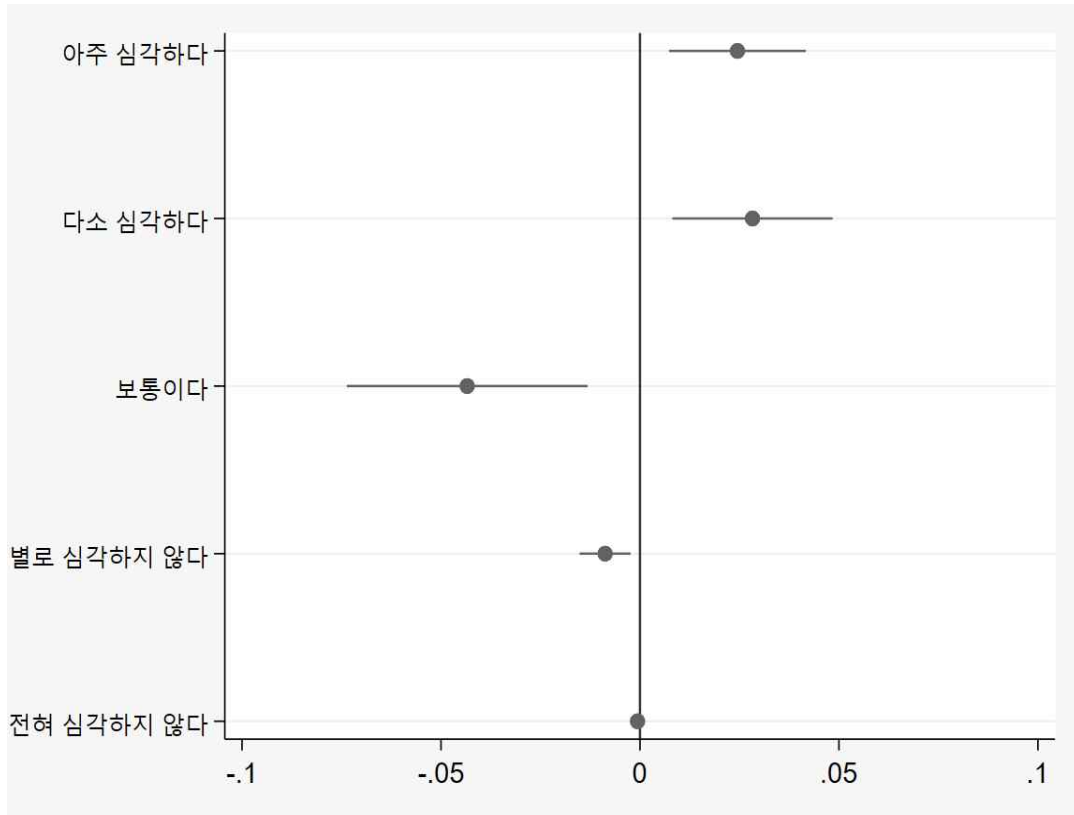
Note: 오즈비를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표시했다.

[그림 부록-9] 정치적 성향의 한계 효과:
한국의 장애 인권 정책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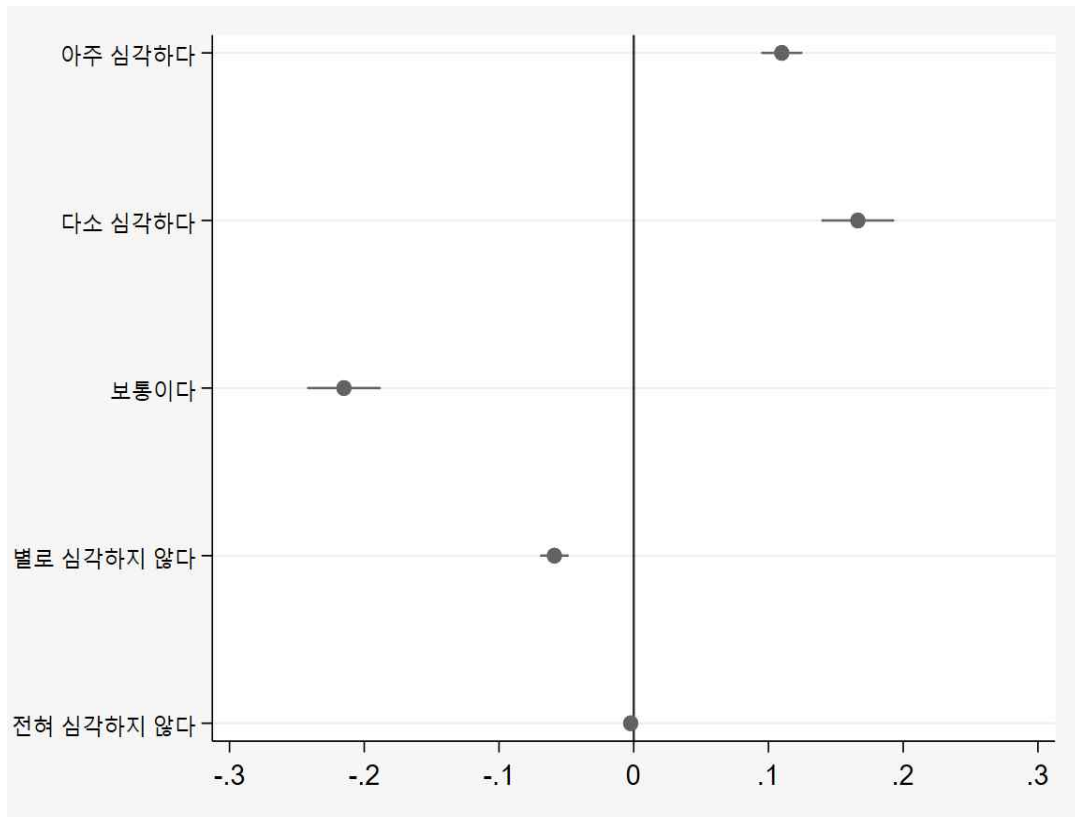
Note: 오즈비를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표시했다.

[그림 부록-10] 성별의 한계 효과: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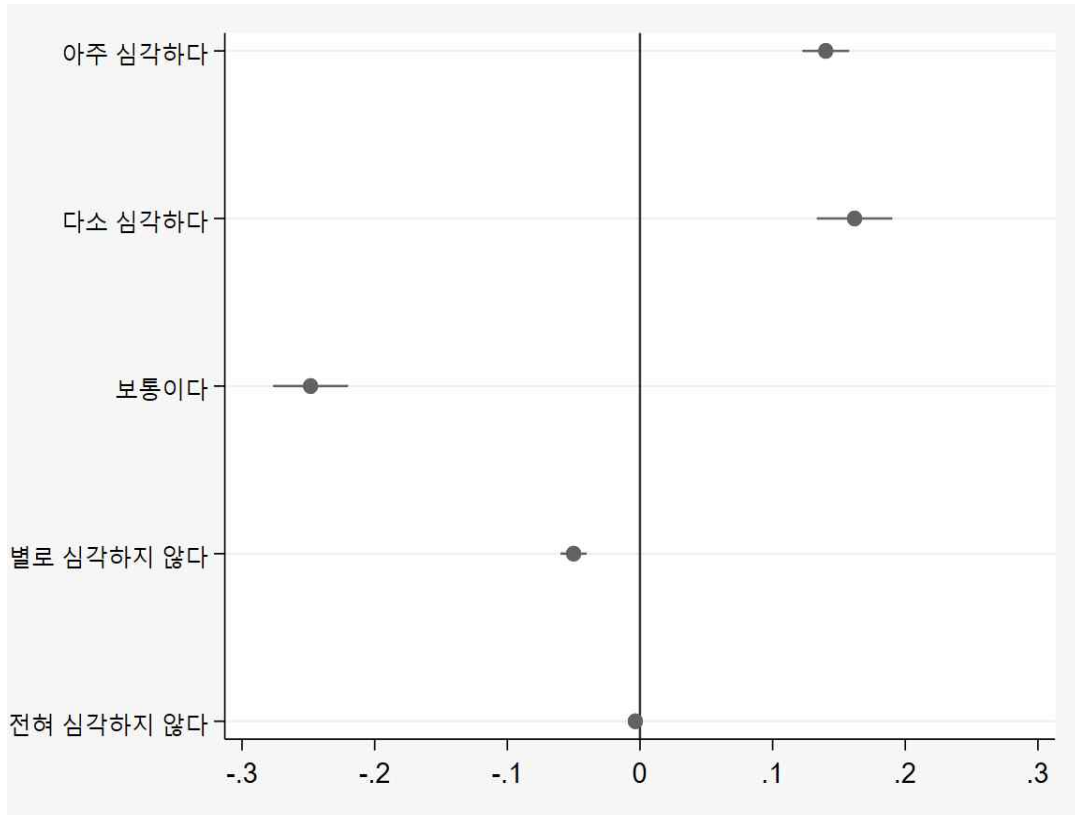
Note: 오즈비를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표시했다.

[그림 부록-11] 성별의 한계 효과:
한국의 장애 인권 정책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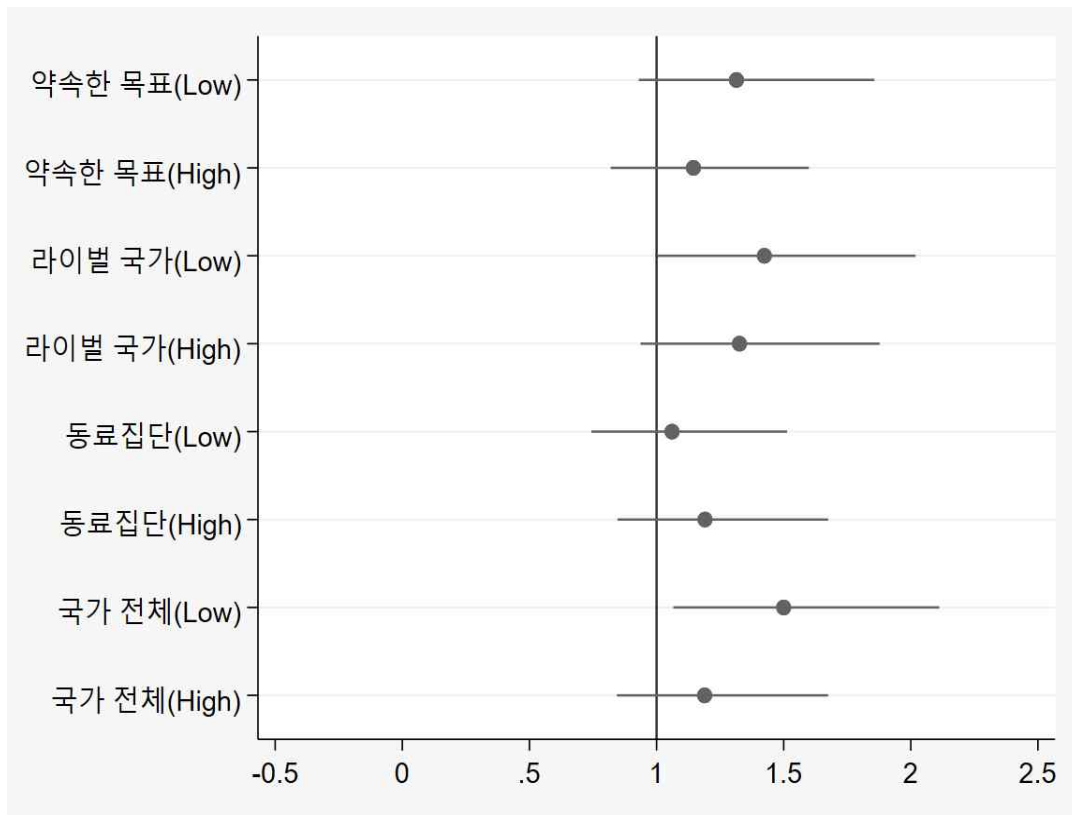
Note: 오즈비를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표시했다.

[그림 부록-12] 규범에 대한 태도의 한계 효과: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Note: 오즈비를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표시했다.

[그림 부록-13] 규범에 대한 태도의 한계 효과:
한국의 장애 인권 정책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Note: 오즈비를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표시했으며 y축은 각 처치의 비교 준거점이다. 비교의 준거점보다 낮은 경우는 '(Low)', 비교의 준거점보다 높은 경우는 '(High)' 와 함께 표기하였다.

[그림 부록-14]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델:
 기사에서 제시한 장애 인권지수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

Abstract

GPI and Norm Compliance: How Does GPI Change Public's Perception of International Norm?

Hangsung Lim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Relations Major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Notwithstanding vibrant discussions regarding the mechanism of Global Performance Indicators(GPI), we still know relatively less about how GPI can change states' behavior. Moreover, far less attention has been devoted to explaining the GPI's effect on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n. By using survey experiment, this paper investigates how GPIs can change the individuals's perception of the state's policy.

This paper focuses on four comparison targets. First, the general public can assess the policy situation through the gap between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state's ideal goal(Mirror effect). Second, the general public can assess the policy situation by choosing one or two countries as comparison targets(Rivalry effect). Third, the general public

can assess the policy situation by choosing a small group that their country belongs to (Peer pressure). Lastly, the general public can assess the policy situation by choosing all the countries whose policy performance is evaluated by the publishing institution of GPI (Laggard effect).

Experimental results found that the entire countries evaluated by the publishing institution of GPI were the most prominent comparison targets for the general public. The comparison with the peer group changed people's perception only when the state recorded a higher rank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issues. States' ideal goals and rivalry states were found to be ineffective comparison targets.

The result implies that the promise of GPI is in the visual intuition provided by numeric information that engenders greater change in an individual's perception than any other detailed explanations. However, the result also implies that GPI can not stimulate the general public in the countries that already comply with norms to some extent or create domestic pressure on international norms whose compliance level is generally low. Lastly, the result shows that the general public is also an "audience" whose perception can be changed by the GPI, which opens up another possibility for institutions that publish indices.

Keywords : GPI, International norm, Norm compliance, Reputation, Status, Comparison target

Student Number : 2021-25267